

재정성과평가 동향과 이슈

재정성과평가센터 FOCUS

- 비축지원 사업
- 문화예술향유지원
- 부담금 제도 및 최근 정비사항

전문가 목소리

- 인공지능을 재정사업 성과평가에 활용한다면?
-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참여하며

재정성과관리 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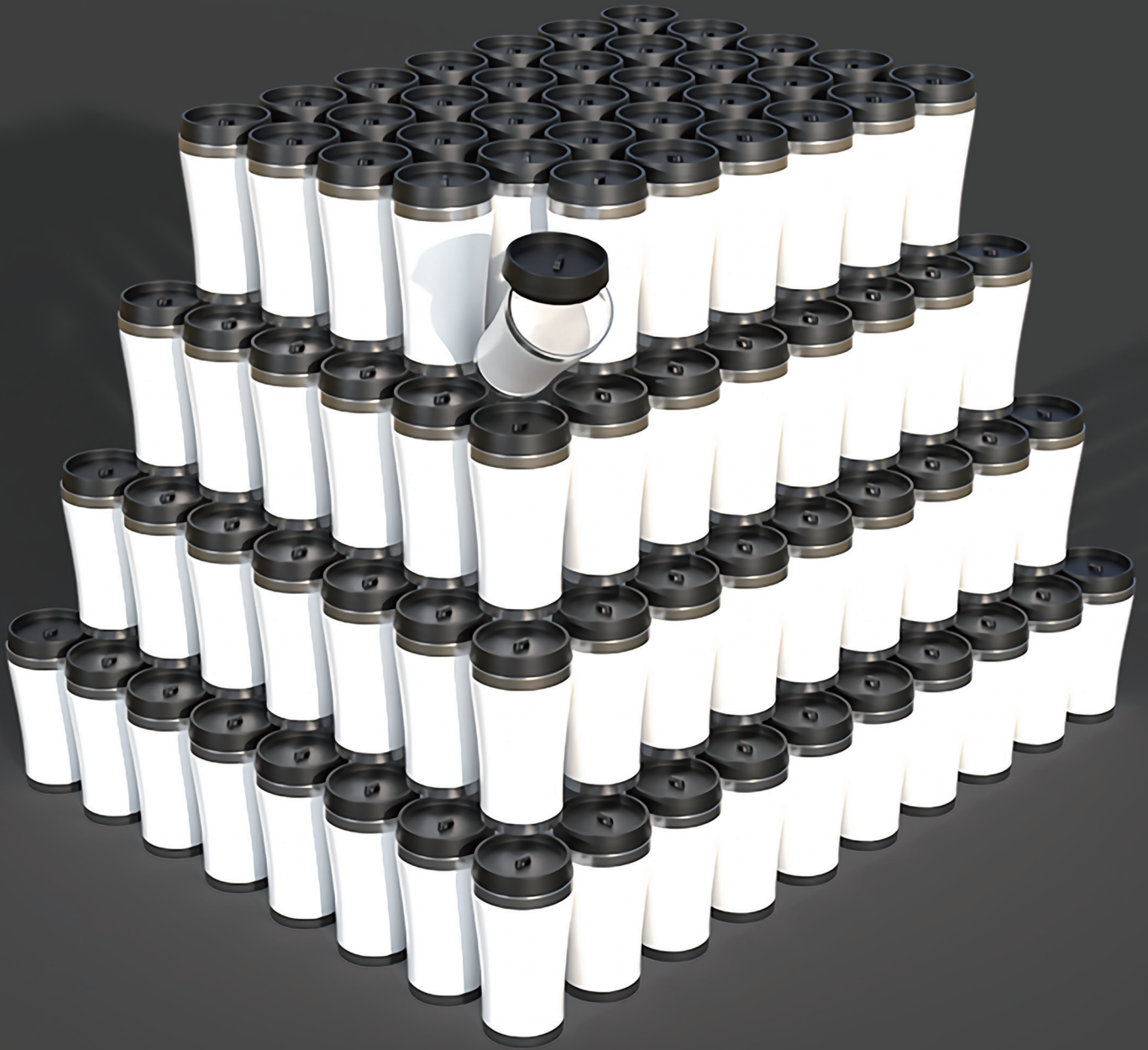
- 국내외 기관 동향 NOW
- 국내외 학술 동향 NOW

www.kipf.re.kr

ISSN 2635-7127



대한민국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텀블러를 쓸까?”

일회용 종이컵보다 환경 보호 효과가 크기 위해서는 텀블러를 **최소 39번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오래된 것일수록, 많이 쓴 것일수록 좋습니다.

텀블러는 하나면 충분합니다.

* (세라믹 재질 기준) | 미국 수명 주기 사용 에너지량 분석 연구소, <Reusable Vs Disposable>, 1994

재정성과평가 동향과 이슈

2024 AUTUMN+WINTER
하반기



PART I. 재정성과관리제도,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 08 재정성과관리제도 INSIDE
- 22 재정성과평가센터 FOCUS
 - ① 비촉지원 사업 | 조은빛 재정성과평가센터 선임연구원
 - ② 문화예술향유지원 | 이은솔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원
 - ③ 부담금 제도 및 최근 정비사항 | 김경훈 재정성과평가센터 선임연구원

PART II. 성과관리 이야기

- 46 전문가 목소리 ①
인공지능을 재정사업 성과평가에 활용한다면? | 오영민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50 전문가 목소리 ②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참여하며 | 이명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60 현장 이야기 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 김현아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주무관
- 66 현장 이야기 ②
세종특별자치시청 | 이정목 세종특별자치시청 연구관
- 72 현장 이야기 ③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 김수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PART III. 재정성과관리 NOW

- 80 1. 국내외 기관 동향 NOW
- 108 2. 국내외 학술 동향 NOW

발행인 이영 KIPF 원장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044-414-2114(대표)
발행일 2024년 12월 31일
등록 세종, 사00016
홈페이지 <http://www.kipf.re.kr>
편집위원
강희우 재정평가연구실 실장(편집총괄)
백종선 재정성과평가센터 선임연구원(실무총괄)
권선정 재정성과평가센터 선임연구원
이응준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원
최한영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원
조한준 재정성과평가센터 위촉연구원
디자인/제작 고려씨엔피

증거기반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필요성

우리 사회는 현재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 기후위기, 지역 불균형, 소득 양극화 등의 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정책적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재정 및 조세 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투입은 때때로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해 재정투입의 성과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재정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과평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의 재정사업이 실제로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이를 반영한 지속적인 개선은 필수적입니다.

증거기반의 성과평가는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운영방식을 점검하며,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발견하여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각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제로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사업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증거기반의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직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투입은 그 규모와 범위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효과를 증거에 기반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향후 인구정책, 지역균형발전, 복지정책, 교육정책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의미한 성과정보의 생산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성과평가제도 관련 연구도 함께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할 것입니다. 재정성과평가제도는 지속적으로 진화하면서 초기의 성과목표의 설정·확인·점검에서 출발하여 성과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넘어, 여러 재정사업의 사회적 영향을 비교분석하여 (impact assessment) 재정사업의 우선순위와 바람직한 정책조합을 도출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평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재정 투입이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성과와 사회적 영향 중심의 재정정책 운영을 강화해 나아가 할 때입니다.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PART

I

재정성과관리제도,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재정성과관리제도, 이렇게 운영했습니다〉는 ‘2024년 재정성과관리제도 운영 소회’와 ‘재정성과관리제도 INSIDE’, ‘재정성과평가 센터 FOCUS’ 등 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재정성과관리제도 소회’에서는 금년도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운영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생각을 담고 있으며, ‘재정성과관리제도 INSIDE’에서는 올해 실시된 재정사업자율평가와 성과목표관리제도 등 다양한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운영 과정, 결과 등을 소개한다.

‘재정성과관리제도 INSIDE’는 사회적 이슈, 국정과제 등에 해당되는 주요 사업의 성과관리제도 운영 현황을 소개하는 코너로, 이번 호에서는 ‘비촉지원’과 ‘문화예술향유지원’사업, ‘부담금 제도 및 최근 정비사항’을 주제로 작성하였다.





재정성과관리제도 INSIDE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중심으로 하는
재정성과목표제도와 재정사업자율평가를
비롯한 재정성과평가제도,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1)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기관의 임무목표와 연계하여 사업별(프로그램 단위) 목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 성과계획서¹⁾와 성과보고서²⁾ 작성을 통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2003년 성과계획서 작성 시범 실시 이후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제8조 제2항)으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이 마련되었다.

성과계획서는 각 부처가 전략목표 및 당해 연도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25년도 성과계획서³⁾ 작성대상 기관은 60개 중앙부처에 해당하며, 추진일정에 따라 5월 31일까지 해당 소관 자체평가위원회의 검토 절차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다.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성과계획서는 분야별 전

1) 성과계획서는 차년도(n+1년도)의 사업별(프로그램 단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등을 미리 설정하여 차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2) 성과보고서는 전년도(n-1년도)의 재정운용 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미흡 원인 등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보고서 구성항목으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3) 기획재정부, 「2025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2024. 참고

문기관⁴⁾과 재정성과평가단의 확인·점검 과정(6~7월)을 거쳐 각 부처에서 수정·보완(8월)하도록 하여 국회에 제출(9월 초)되었다.

'25년도 성과계획서 확인·점검 과정의 검토내용은 프로그램 목표체계 및 성과지표, 측정방법의 적정성 등을 포함한 성과계획서 작성 전반에 대한 것이다. 또한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평가유형, 등급), 지출구조조정금액 및 개선계획, 부처별 자체평가위원회가 선정한 우수·미흡 프로그램 내용 작성 등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등 '25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새롭게 반영된 부분에 대한 작성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점검하였다. 이렇게 확인·점검된 내용을 부처에 제시하여 수정 및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성과계획서의 질적인 측면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2025회계연도의 60개 부처 성과계획서의 프로그램 목표는 총 488개이며, 프로그램 성과지표는 총 529개이다.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었으며, 성과지표의 유형별로 구분하였을 때 투입지표 15개(2.8%), 과정지표 17개(3.2%), 산출지표 137개(25.9%), 결과지표 360개(68.1%)로 구성되어 있다.⁵⁾

성과보고서는 결산보고서의 구성항목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후 결산보고서와 함께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24년 2월 말까지 자체평가위원회 검토 후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으며, 3월에는 기획재정부의 확인·점검 과정을 거쳐 부처가 성과보고서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4월 감사원 제출과 성과보고서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최종적으로 제출되었다.

2023회계연도의 성과보고서 작성 대상기관은 총 58개 중앙부처이며, 전략목표 181개, 프로그램 목표 475개, 성과지표 1,068개로 구성되어 있다.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기준으로 58개 기관의 성과달성도를 분석한 결과, 성과지표 총 1,068개 중 819개(76.7%)가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249개(23.3%)는 미달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처에서 작성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재정당국과 관련 전문기관 및 재정성과평가단에서 확인·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대국민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작성주체인 부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충실한 작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2024. 8.

4) 프로그램 성과지표는 분야별(일반재정, 정보화, R&D)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전문기관에서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일반재정 분야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R&D 분야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정보화 분야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5) 기획재정부, 「2025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2024. 참고

2) 재정사업자율평가

재정사업자율평가는 사업 수행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기획재정부가 확인·점검하는 방식으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특히 재정사업자율평가는 성과평가 후 미흡사업을 중심으로 평가대상 총예산의 1%를 감액하여 차년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모든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개선계획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각 사업 수행 부처가 미흡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제고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주요 절차는 평가 대상 검토, 각 부처의 자체 평가 수행, 지출구조조정 검토, 평가보고서 제출로 진행된다. 2023회계연도에 대한 재정사업자율평가는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모든 성과관리 대상 사업에 대하여 평가 대상 검토를 진행하여 자율평가 대상 사업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각 부처는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3월까지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처가 제출한 지출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검토가 4~5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각 부처는 지출구조조정 계획 등의 검토를 반영한 재정사업자율평가 최종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및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에 공개(5월 말)함으로써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가 종료되었다.

그림 1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 일정

구분	일시	내용
평가준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지침 확정·통보(기재부 → 각 부처)
자율평가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 자체평가 계획 수립(각 부처) 평가 대상 사업 확인
	1~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부처 자체평가 실시
확인·점검	3.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평가 결과 제출(각 부처 → 기재부) 평가 결과 1차 입력(디브레인)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 자체평가 결과 확인·점검 지출구조조정 부적절 사업 확인 (필요시) 지출구조조정 계획 2차 제출
평가결과 공개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의 및 평가결과 예산실 송부 평가 결과 최종 입력(디브레인) 및 공개(열린재정 홈페이지)

기재부의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에서는 평가 대상 검토와 부처 자체평가 결과의 확인·점검, 일반 재정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적정성 검토⁶⁾ 등을 수행하였다.

먼저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은 2023회계연도 성과계획서상 성과관리 대상 사업을 수행한 58개 부처의 5,759개 사업이며, 이 중 타 평가⁷⁾ 대상 여부 및 일정 규모⁸⁾ 이하의 소액 사업 해당 여부 검토 등을 통해 1,711개 사업이 평가 대상 사업으로 확정되었다. 평가 대상 사업을 수행한 각 부처(53개 부처)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수행하였고, 평가 결과와 함께 그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3월 말)하였다.

각 부처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사업자율평가 확인·점검이 필요한 45개 부처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상대평가 준수 여부,⁹⁾ 미흡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규모 준수 여부, 지출구조조정 적정성 검토, 지출구조조정 목표 달성 여부 등에 대해 확인·점검을 수행하였다.

먼저 모든 평가 수행 부처가 상대 평가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미흡사업 지출구조조정 규모 준수 여부 점검에서는 1차 검토 결과 확인·점검 대상 45개 부처 중 8개 부처만 모두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차 검토에서는 평가 사업 수 기준 283개 미흡사업 중 127개 사업에 대해 자료 및 근거 보완 요청과 함께 미흡사업 지출구조조정 규모 준수 여부를 재검토하여 모든 미흡사업이 지출구조조정 규모를 준수하도록 점검하였다.

지출구조조정 계획의 적정성 검토는 부처에서 제출한 각 사업별 지출구조조정 계획이 적정한 지출구조조정 계획인지 검토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였으며, 1차 검토 결과 전 부처의 지출구조조정 계획 금액 1조 2,554억원 중 9,127억원에 해당하는 지출구조조정 계획이 부적정한 계획으로 판단됨에 따라 부적정한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하였다. 이에 2차 검토를 통해 부처에서는 1조 3,601억원 상당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 평가대상 예산의 1%(1조 840억원)에 해당하는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였다.

그림 2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 주요 결과

	1차 검토	2차 검토
상대평가 준수 여부	준수	-
미흡사업 지출구조조정	156개 사업 준수 / 127개 사업 미준수	283개 사업 준수
지출구조조정계획 적정성	부적정 지출구조조정 금액 비중 72.7%	부적정 지출구조조정 금액 비중 0%
지출구조조정 목표 달성도	구조조정 목표 금액 대비 30.8%	구조조정 목표 금액 대비 125.5%

자료: 확인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6)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수행

7) R&D, 재난안전, 균형발전, 복권기금, 일자리, 중소기업지원 사업 소관 평가기관의 평가대상 사업

8) 일반 재정 30억원 미만(정보화 10억원 미만)의 사업

9) 상대평가 비율은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이며, 사업 수가 3개 미만인 부처는 상대평가 미 실시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사업을 중심으로 1조 3,601억원 상당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들도 적지 않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대평가 기준에 따라 각 부처의 평대대상 사업 중 15%의 사업이 미흡사업에 해당하는 가운데, 2023회계연도의 경우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의 수는 7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도 평가부터 적용되는 3년 연속 미흡사업의 원칙적 폐지 지침에 따라 2024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는 3년 연속 미흡사업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연례적으로 미흡을 받는 사업들에 대한 성과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다. 미흡사업에 대해 작성하는 성과관리 개선계획을 통해 미흡의 원인 분석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도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 2024. 1.

3)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를 반영하는 사업군을 3대 분야 12대 핵심재정사업군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군에 해당하는 사업들에 대해 5년간(2023~2027년) 밀착 관리하는 형태의 성과관리제도이다.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부처 단위의 단년도 관리 중심인 기존 성과관리 틀에서 벗어나, 정부의 핵심 정책비전이 반영된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조기 성과창출을 지원하여 국정운영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에 신설되어 2024년도에 2년차를 맞이하였다.

그림 3 3대 분야 12대 핵심재정사업군

3대 분야	12대 핵심재정사업(군)	
서민·사회적약자 복지 강화 	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②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	장애인 돌봄(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③ 청년 자산형성·일자리 지원*	청년도약계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④ 생활물가 안정 지원	농산물 비축지원
	⑤ 지역균형발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미래대비·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지원 	⑥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반도체특성화대학, 국립대학 반도체 분야 기자재 확충, AI반도체 응용 실증지원
	⑦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	차세대 원자력 분야 기술개발, 차세대 반도체 분야 기술개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위탁 수행)
	⑧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외투기업 및 유턴기업 지원
	⑨ 중소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창업성장기술개발(TIPS),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
국민안전·글로벌 리더국가 책임 강화 	⑩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고도화	산불대응능력 강화(산불예방 숲가꾸기, 산림헬기 도입·교체, 고성능산불진화차, 산불진화임도, 영농부산물활용 미세먼지저감)
	⑪ 국방력 강화*	군장병 근무여건 개선(병 인건비, 병내일준비지원, 관사 및 간부숙소, 기본급식)
	⑫ 국격·외교역량 강화	기후변화 대응 ODA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첨단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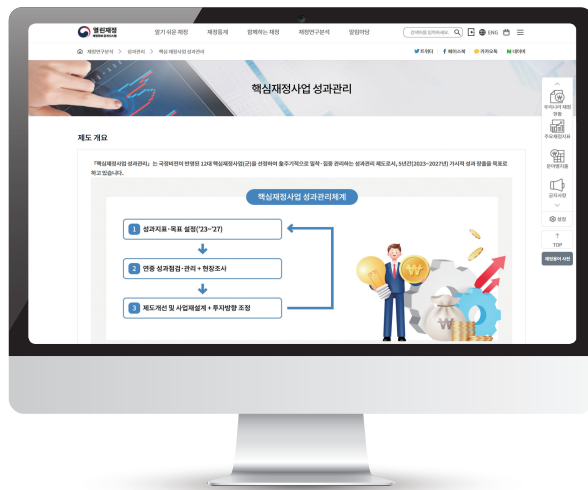
주: * 표시 과제는 2024년부터 모니터링 과제로 전환
 자료: 기획재정부(2023. 1.),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p. 7. 및 과업지시서(내부자료) 바탕으로 재구성

2024년 하반기 현재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13개 분야 중 9개 분야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작업반이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성과관리를 위한 주요 이슈가 해소된 3개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 모니터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다부처 협업과제로 ‘첨단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

성' 사업에 대한 작업반이 추가적으로 구성('24년 6월)되어 운영 중이고, R&D 과제(차세대 원자력 분야 기술개발/차세대 반도체 분야 기술개발)에 대한 성과관리 작업반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통해 운영 중이다.

2024년도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에서는 각 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재정당국의 재정건전성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각 사업별 효율화 방안 및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제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한편 2024년부터는 성과관리의 적시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PI보드(Performance Information Board)가 도입되었다. PI보드는 핵심재정 성과관리 사업에 대해 분기별로 성과지표 달성도, 집행 현황, 제도개선 진행 상황 및 분기별 추진계획 이행 현황 등을 점검하는 방식의 성과관리체계이다. 곧 분기별 성과관리에 중점을 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매 분기 종료 시 각 사업부서는 분기별 성과 달성도와 예산 집행 현황, 분기별 추진계획 이행 현황 등을 작성하여 재정당국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 점검팀¹⁰⁾의 점검 의견을 종합하여 등급을 확정된 뒤 점검 결과에 따라 4색등(빨강, 주황, 노랑, 초록)으로 표시하여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에 공개¹¹⁾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PI보드 운영을 통해 각 사업부서는 핵심재정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추진 계획의 이행과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2023. 1.
 _____,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2024. 1.

10) 기재부 과장, 해당 사업 작업반장, 외부전문가, 조세연 사무국장으로 구성
 11) 매 분기(Q) 종료 후 점검 기간을 거쳐 Q+2개월 내에 공개

4) 재정사업 심층평가

2023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2023년 9월에 착수되어 2024년 7월에 마무리되었으며, 총 3개의 사업군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3개의 사업군 중 ‘농산어촌 정주 활성화 사업군’은 농어촌 정착지원, 교육훈련 제도, 시설환경 개선 등과 관련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사업목표의 명확성 부재와 정주 활성화 사업군을 평가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과지표 관리 등에 대해서 지적 및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하수도 관리 사업군’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하수관로정비사업,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등의 관련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되었다. 해당 사업군 평가에서는 하수처리 서비스 시장의 특수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등을 수행하였으며, 규모별 비용효율성과 생산효율성의 비교, 개별 사업별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해 하수도관리사업의 유역단위 실행방안 마련과 하수처리장 설치 및 하수관로 보급사업 사이의 비용효과성 검토 필요 등이 제시되었다.

끝으로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군’은 문화재 보존을 위한 보수·정비 지원사업과 문화재 주변 경관 및 관람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에 의하면 본 사업군의 예산은 국민들이 문화재 보존을 위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비용인 문화재 보존가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할 때 향후 재정 확대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점이 권고되었다. 일련의 세 사업군의 평가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평가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2024년 6월에 착수되어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이다. 올해의 경우 5개 사업군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5가지의 평가요소(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효용성, 지속가능성)를 중심으로 재정운용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참고자료

이동규·장희선·전호철·양석·이지연·김유진, 『2023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하수도 관리 사업군』,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7.

이명현·김진영·박상곤, 『2023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군』,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7.

주하연·정진화·문성만, 『2023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농산어촌 정주 활성화 지원 사업군』,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7.

5) 기금평가

2024년도 기금평가는 기금운용평가와 기금존치평가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기금운용평가는 각 기금별 사업운용에 대한 평가(사업운용 부문)와 자산운용에 대한 평가(자산운용 부문)로 나뉘는데, 사업운용 부문에 대한 평가의 경우 부처에서 수행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준용하였고, 자산운용 부문의 경우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여 2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평가가 이루어졌다. 기금존치평가의 경우도 기금운용평가단에서 동일하게 2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평가를 수행했다.

기금운용평가 자산운용 부문(이하 '기금 자산운용평가')의 경우 총 24개 기금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졌다. 연평균 100조원 미만의 대형 및 중소형 23개 기금의 경우 전년 대비 평가점수가 소폭 하락하였는데(73.1 → 72.1점), 주요 사유는 계량평가에서 전년 대비 평가대상 기금의 상대수익률이 하락한 점과 비계량평가에서 일부 기금의 자산운용 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우수' 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기금 수는 전년과 동일하며, 해당 등급의 비율은 오히려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그림 4 2024년 대형 및 중소형기금 자산운용평가 결과(등급)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년 기금평가 결과」, 2024. 5. 28.

대규모 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전년 대비 운용수익률의 향상(2022회계연도 $\Delta 8.28\%$ → 2023회계연도 14.14%)으로 인해 평점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평가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하였다.

기금존치평가의 경우 기금의 주요 재원인 부담금(출국납부금)이 폐지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의 경우 폐지를 권고하였고, 기금 수입의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과 사회진흥기금의 경우 사업 이관 및 규모 조정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하였다. 기금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 및 이관을 권고하였고,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등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31개 사업에 관해서는 제도개선 권고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재원구조와 관련해서는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여유자금이 과다한 7개 기금에 대해서는 공자기금 예탁 확대 등

을 권고하였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여유자금의 과소한 7개 기금은 신규 수입원을 발굴하거나 기금 내 사업을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2024년 기금평가는 5월 28일 국무회의 보고와 5월 31일 국회 보고서 제출을 끝으로 평가가 일 단락되었다. 이후 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제도 개선 업무가 진행 중이다.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이번 년도 평가 대상인 기금들로부터 기금평가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평가자인 기금운용평가단으로부터는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평가제도 개선 이외에 기금 자산운용평가는 대형 및 중소형 기금을 대상으로는 단기금융상품(MMW, MMT 등)의 운용 및 관리 현황을, 대규모 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을 대상으로는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 현황을 방문 정밀실사할 예정이다. 기금준치평가는 연말에 2024년 기금준치평가 결과를 각 기금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금평가는 상반기 평가 이후 하반기에는 평가제도 개선과 후속 진행업무를 통해서 평가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지침 I」, 2023. 1.
 _____,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지침 II」, 2023. 1.
 _____, 「2024년 기금준치평가지침」, 2024.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년 기금평가 결과」, 2024. 5. 28.
 기획재정부·기금운용평가단·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 II 자산운용부문」, 2024. 5.
 _____, 「2024년 기금준치평가보고서」, 2024. 5.

6) 보조사업평가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2월 평가대상과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편람」을 확정하고,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하여 1~5월까지 5개월 간 평가를 수행하였다. ‘재평가’는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침」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연장 평가를 실시한 사업 중 사정변경 등으로 평가 결과 반영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1회에 한해 진행되며, 7~8월까지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되어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를 2024년 9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2024년에 존속기한 3년 도래 사업 423개 세부사업, 18조 5,107억원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423개 세부사업의 평가 결과는 사업 개수 기준으로 ‘정상추진’ 7개(1.7%), ‘즉시폐지’ 29개(6.9%), ‘단계적폐지’ 32개(7.6%), ‘통폐합’ 14개(3.3%), ‘감축’ 204개(48.2%), ‘사업방식변경’ 137개(32.4%) 사업이었으며, 예산규모 기준으로 ‘정상추진’ 6,434억원(3.5%), ‘즉시폐지’ 4,375억원(2.4%), ‘단계적폐지’ 2,686억원(1.5%), ‘통폐합’ 1,431억원(0.8%), ‘감축’ 10조8,532억원(58.6%), ‘사업방식변경’ 6조1,648억원(33.3%)이었다.

그림 5 사업 개수별 최종 판정 결과

구분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변경	정상추진	합계
사업수(개)	29	32	14	204	137	7	423
비율(%)	6.9	7.6	3.3	48.2	32.4	1.7	100.0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2024. 9.

그림 6 예산규모별 최종 판정 결과

구분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변경	정상추진	합계
예산(억원)	4,375	2,686	1,431	108,532	61,648	6,434	185,107
비율(%)	2.4	1.5	0.8	58.6	33.3	3.5	100.0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2024. 9.

재평가는 7월부터 총 3개 부처, 5개 사업에 대해 실시하여, 상당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기존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3개 부처, 3개 사업에 대해 평가 결과를 조정하였다.

그림 7 보조사업 재평가 사업별 결과

소관	세부사업	평가연도	평가 결과	재평가 결과
국토교통부	광역버스공공성 강화지원	2022년	감축(높은 수준) 사업방식변경	사업방식변경 • 감축(높은 수준) → 삭제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혁신 바우처지원	2022년	감축(일정 수준) 사업방식변경	사업방식변경 • 감축(일정 수준) → 삭제
산림청	임업산림공익 직접지불금	2024년	감축(높은 수준) 사업방식변경	감축(일정 수준) 사업방식변경 • 감축(높은 수준) → 감축(일정 수준)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2024. 10.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2024년 보조사업평가는 9월 2일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및 2025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과 함께 종료되었으며, 이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후속조치로서 ‘주요사업 컨설팅’ 과 ‘평가 개선업무’가 진행 중이다.

‘주요사업 컨설팅’은 보조사업의 집행 및 관리체계 개선 등 평가과정 중 지적된 문제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각 평가위원 주도 아래 76개의 세부사업을 진행 중이며, 10월 말 대면면담, 11월 의견수렴 및 보고서 작성 등을 거쳐 12월 초 컨설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평가 개선업무’는 연장평가제도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업무가 진행될 예정이며, 초안 마련 후 보조사업평가단 및 각 피평가부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2월 말 최종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국고보조금 관련 지침 개정」, 2023. 12. 29.
- 기획재정부,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침」, 2023. 12.
- 기획재정부,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편람」, 2023. 12.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2024. 5. 28.
- 기획재정부,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2024. 9.

7)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는 총 126개의 복권기금 지원사업(법정배분 95개, 공익지원 31개)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른 종합평점은 81.9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8점 상승했으며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평점의 평가 결과가 도출되었다. 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등급은 우수 등급 83개 사업, 보통 등급 41개 사업, 미흡 등급 2개 사업으로, 전년도에 비해 우수 등급은 증가(61 → 83개)했으며 미흡 등급은 감소(9 → 2개)했다. 이런 결과는 법정배분사업과 공익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였다.

전년도 평가에 따른 지적사항 개선에 따라 우수 등급이 증가하였으며, 신규 사업의 집행률 향상을 위해 사전검토 체계를 강화하여 미흡 등급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평가 결과 개선이 이루어졌다. 2024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는 제167차 복권위원회의 평가 결과 의결을 통해 마무리되었고, 평가 이후 평가단에서는 신규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통해 해당 사업의 성과 및 제도개선 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편람'을 개정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8 2023~2024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평가 등급 분포

(단위: 개)

구분 ¹⁾	법정배분사업		공익지원사업		전체	
	2023	2024	2023	2024	2023	2024
우수	44	63	17	20	61	83
보통	41	30	13	11	54	41
미흡	7	2	2	0	9	2
합계	92	95	32	31	124	126

주: 1) 2023년도 평가는 5등급 체계였으나, 2024년도와의 비교를 위하여 3등급 체계로 개편하여 작성함(매우우수/우수 → 우수, 보통 → 보통, 미흡/매우미흡 → 미흡).

자료: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복권기금사업성과평가단, 「2023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보고서」, 2024. 4.

그림 9 2021~2024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종합평점

(단위: 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77.8	80.0	79.1	81.9
법정배분사업	77.6	80.8	78.9	81.7
공익지원사업	78.2	78.1	79.7	82.2

자료: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복권기금사업성과평가단, 「2023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보고서」, 2024. 4.

참고자료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복권기금사업성과평가단, 「2023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보고서」, 2024. 4.
복권위원회, www.bokgwon.go.kr, 검색일자: 2024. 10. 11.

8) 부담금평가

부담금평가의 법적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은 2001년 12월 31일 개정·공포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전체 부담금은 18개 부처 91개에 이르며, 부담금 징수실적은 약 23조2,562억 원으로 2022년 대비 8,852억원이 증가하였다. 2007년에 102개까지 증가했던 부담금 수는 2013년 96개, 2014년 95개, 2015년 94개, 2016년 90개, 2017년 89개, 2018년 90개로,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8년 폐기물처분부담금, 2023년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신설로 최근 소폭 증가하여 현재 91개에 이르고 있다.

부담금평가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매 3년마다 전체 부담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2003년, 2006년, 2009년에는 전수평가가 실시되었으나 2010년부터는 매년 약 1/3을 대상으로 순환평가를 실시하도록 변경되었다.

부담금평가는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 및 부담금의 부과 타당성, 부과기준, 사용용도, 권리구제 절차 규정, 가산금·중가산금규정, 감면·면제규정, 징수율 제고 등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2024년 부담금평가는 10개 부처의 19개 부담금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 중이다.

부담금평가 결과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되며, 이에 따른 이행실적 점검은 기획재정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4년 부담금평가는 8월에 착수하여 10월 말까지 최종결과를 도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후 개선 계획을 포함한 최종결과를 12월 중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계획으로 진행 중이다.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24. 5.

비축지원 사업



→ 작성자 | 조은빛 재정성과평가센터 선임연구원

1. 배경

정부는 1978년부터 국민생활에 있어 가격안정이 요구되는 농산물들을 수확기에 비축하여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비수기에 가격 급등이 예상되면 방출하여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는 비축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약 40년간 지속되어 온 사업으로 그동안 태풍, 전쟁,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공급량 부족에 대응해 가격안정을 도모한 경험이 축적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해 다양한 이슈로 농산물의 가격이 불안정한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최근에는 ‘애플레이션’이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사과와 가격이 폭등하였고, 배추도 추석 이후 한 포기 1만원을 웃돌 정도로 가격이 안정적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40년간 지속되어 온 정부 사업이 충실한 역할을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정부가 비축하는 작물이 무엇이며 농산물 시장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농산물 비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의 역할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한다.

2. 사업개요

농산물 비축지원사업은 1978년부터 수행된 사업으로, 정부가 국내산 농산물을 수매 또는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 비축한 후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여 농산물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농산물안정기금으로 운영되고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시행하며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한다. 2024년 기준으로 비축사업 대상 농산물은 고추, 마늘, 양파, 땅콩, 콩, 사과, 배, 배추, 무, 생강, 참깨, 팥(녹두),

그림 1 | 농산물 비축사업의 추진체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024. 1.

밀, 감자 등이다.¹⁾

비축은 수급, 수입·수매, 보관, 방출, 유통 단계로 구분된다. 고추, 마늘, 양파, 땅콩, 콩, 감자 등의 경우 수급 동향 분석에 기반하여 비축 규모와 기간이 설정되고, 이에 따라 수입·수매가 진행되어 비축 물량이 확보되면 전국 14개의 비축기지를 이용하여 농산물이

보관된다. 가락시장 가격 추이를 반영하여 방출 시기가 결정되면 공매, 상장, 직배 방식으로 방출된다. 유통은 비축 농산물을 유통·가공업체에 보내는 단계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사후 관리까지 포함한다. 올해 이슈가 되었던 사과 및 배추가 최근 어떻게 비축되고 방출되었는지 사례를 검토하면서, 가격변동과 비축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고자 한다.

사과의 경우 냉해와 우박 등 각종 기상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폭등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1) 국내산 농산물 수매 비축은 11개 농산물(고추, 마늘, 양파, 땅콩, 콩, 사과, 배, 배추, 무, 밀, 감자)이며, 외국산 농산물 수입 비축은 9개 농산물(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땅콩, 콩, 팥(녹두), 감자)이다.

표 1 추석 이후 배추 전통시장 소비자가격 (단위: 원/포기)

조사일	평균	1시장	2시장	3시장	4시장	5시장	6시장	7시장
9.19	12,577	13,300	10,500	9,330	13,700	13,600	10,600	12,000
9.20	12,444	13,300	11,600	10,300	13,700	13,600	10,600	12,000
9.23	13,231	15,800	11,000	10,300	16,400	13,600	11,300	13,300
9.24	13,960	16,300	11,000	10,300	16,400	13,600	13,000	13,600
조사일	8시장	9시장	10시장	11시장	12시장	13시장	14시장	15시장
9.19	12,000	14,450	14,300	12,000	11,600	11,600	15,000	12,800
9.20	12,000	12,350	12,300	14,000	11,600	11,600	15,000	12,800
9.23	12,000	12,550	13,600	13,300	10,100	11,600	20,000	14,300
9.24	14,300	14,300	14,600	13,300	10,100	12,300	22,000	14,3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5년 농식품부 예산안 18조 7,496억원 편성」, 2024. 9. 25.

2024년 3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사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88.2% 상승하여,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역대 최대로 상승했다.

사과 가격 폭등에 대하여 정부는 납품 단가 인하, 할인 지원 확대, 대체 과일 수입 등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였다. 사과 역시 정부비축사업 대상 품목에 포함된 작물이다. 그러나 2001년까지 과실류에 대해 정부수매가 시행된 적은 있지만, 사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비축을 시행하지는 않았다.

다만 2025년부터는 사과 또한 비축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될 예정으로, 2025년 예산에 사과의 출하처·출하 시기까지 관리하는 지정출하²⁾ 물량 시범 운영 예산(2만톤, 258억원)이 반영되었다. 반면 비축을 통해 관리되었던 배추도 가격의 변동이 작지 않았다. 특히 추석 이후 배추는 포기당 1만원을 웃돌았고, 일부 시장에서는 2만원까지 상승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배추 생산량이 많은 봄과 가을에 비축하여 생

산량이 적은 여름과 겨울에 대비하고 있다. 2024년의 경우 2분기에 봄배추 9천톤을 비축하였고, 추석에 대비하여 2024년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매일 150톤~200톤씩 도매시장에 방출하였다. 방출시기부터 추석 직전까지(2024년 8월 7일~2024년 9월 12일) 배추 소매가격은 포기당 평균 6,772원 정도였지만, 비축 배추를 거의 방출한 추석 이후부터는 다시 가격이 상승하여 평균 9,300원까지 오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을배추 일부 물량을 조기 출하하고, 신선 배추를 수입하는 대책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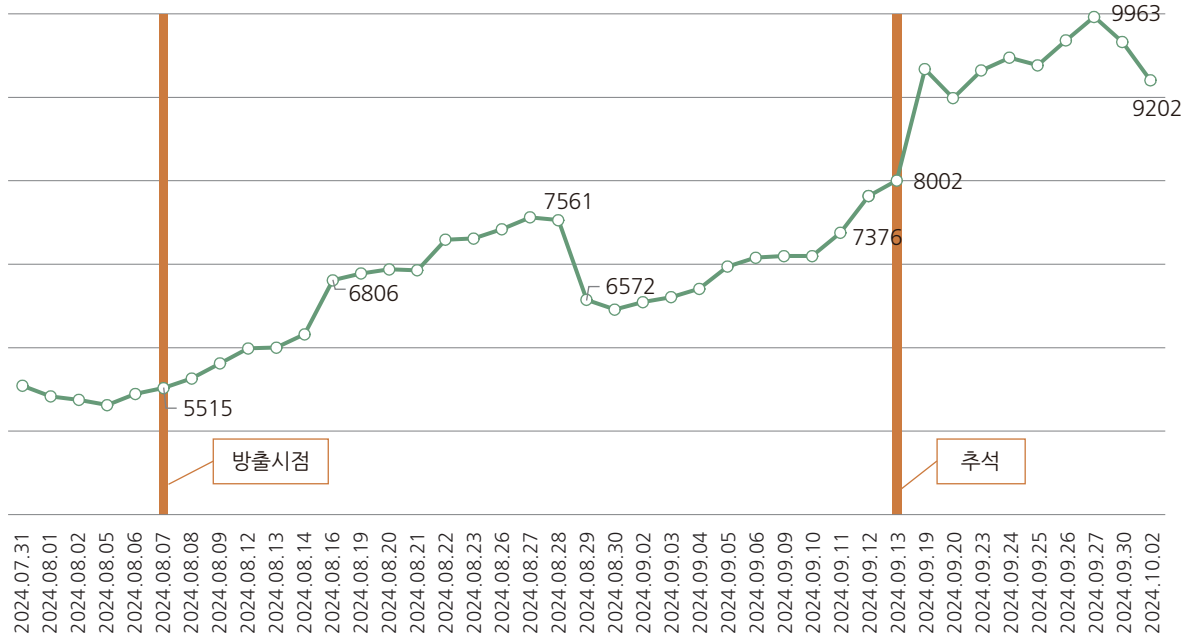
사과와 배추 사례를 통해 비축지원사업은 사업 대상 품목에 해당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매와 수입을 통해 적극적으로 가격에 대응하고는 있지만 일정 부문 가격 불안정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축 이외에도 대체 작물 수입, 할인 지원 등 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다.

2) 정부가 정한 출하 시기에 지정된 출하처로 일정 물량을 공급

그림 1 | 2024년 배추 방출 전후 소매가격 변동(2024년 8월~2024년 9월)

(단위: 원/포기)



자료: KAMIS, <https://www.kamis.or.kr/customer/info/retail/period.do?action=daily>, 검색일자: 2024.10. 4.

3. 성과관리 현황

1) 성과지표

비축지원사업은 ‘비축농산물 연간 가격 진폭률’을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지표는 성과관리가 시행된 이후로 꾸준히 사용되고 있을 만큼 사업의 성과를 적절히 나타내는 결과지표에 해당한다.

연간 가격 진폭률 지표의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면, 성과관리제도가 시작되면서 최초에는 품목별 매출액 비율을 가중치로 둔 연간 진폭계수((연간 최고 가격 - 연간 최저 가격)/최저가격) 값의 합으로 측정하였다. 당시 해당 품목은 참깨, 마늘, 고추에 한정되었다. 2012년 ‘수입’ 농산물 가격의 연간 진폭률로 성과지표 명을 변경하였지만 측정산식은 동일하였으며, 다만 품목이 콩, 팔, 참깨, 고추, 생강으로 변경되었다. 2013년부터 비축사업이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는 현재의 지표로 수정되었다. 2013년 현재와 같은 측정산식을 도입하면서 조사대상 품목을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팔(녹두)으로 정하였다. 현재의 성과지표까지 조사대상 품목은 동일하지만 가중치가 변경되었는데,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가중치를 매출액 비중으로 두었고, 2019년부터 판매물량 비율로 변경하였다.

2) 정부사업평가 결과

비축지원사업은 2023년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87.5점,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는 78.8점,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평가 결과를 받았다.

국고보조사업의 평가 결과에서는 본 사업의 비용이 비축사업 위탁에 필요한 행정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시장 상황에 맞는 사업운영 수수료를 선정할 필요

연도	목표	실적	측정산식	품목
2008	0.14	0.12	$\sum_{k=1}^n R_k \frac{(\text{최고가격} - \text{최저가격})}{\text{최저가격}}$ · R_k : 품목의 매출액 비율	참깨·마늘·고추
2009	0.09	0.09		
2010	0.15	0.29		
2011	0.12	0.15		
2012	0.22	0.10		
2012	4.4	5.6		
2013	5.3	3.5		
2014	5.3	1.6		
2015	4.6	2.5		
2016	3.2	3.3		
2017	2.8	8.5	$\sum_{k=1}^n C_k R_k$ · C_k : 단경기변동계수 · R_k : 품목의 판매물량 비율	고추·마늘·양파·참깨·콩·팥(녹두)
2018	3.1	2.6		
2019	3.1	3.5		
2020	2.9	5.8		
2021	3.5	3.0		
2022	3.5	3.0		
2023	3.4	2.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성과계획서 바탕으로 저자 작성

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하여 핵심사업평가가 진행 중이다.

4. 개선방안

비축농산물 연간 가격 진폭률은 비축지원사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결과지표로 적절하지만, 다른 사업들이 분기지표와 보조지표들을 활용해 분기별로 평가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비축지원 사업은 연간지표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시의적절하게 평가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업의 본질이 가락시장 가격의 추이에 따

라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지표로 결과적인 성과는 반영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다만 관리 측면에서 사업 진행 단계에 분기별로 평가할 성과지표가 분명히 필요하다. 비축사업은 수급, 수입·수매, 보관, 방출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관 단계는 다른 단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덜 받는 편이다. 작물별로 저장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하여 보관 현황, 감모율 등을 활용한 분기지표 개발을 강구해 볼 만하다. 한편 현재의 지표를 구성하는 작물이 참깨, 콩, 팥, 고추, 마늘, 양파 등에 한정되고,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배추, 무, 사과, 배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고 있다.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작물로 구성된 연간 가격 진폭률을 도입하여 현재의 지표와 비교·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동 사업은 4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사업으로 수요자, 생산자,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경험치가 축적되어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배추의 경우 정부가 생산량이 많은 봄과 가을에는 비축하고, 생산량이 적은 여름과 겨울에는 방출하여 가격을 조정할 것이며, 만일 공급 부족·수요 증가로 가격이 폭등하면 배추를 수입하여 공급량을 증대시킬 것이라 예상하고 대응할 수 있다. 또한 김장철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공급 측면에서 면밀한 관리가 진행된다면 배추는 지금보다 더욱 가격이 안정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배추의 저장성이 길지 않아 비축지원사업으로 가격을 안정시키기에 한계가 있어서, 오히려 저장시설 기술 개발이 가격 안정 측면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성과관리 보조지표로서 비축저장시설의 기술개발을 장려하거나, 감모 및 폐기 기준을 적절히 업데이트하도록 하는 등의 정책적 유인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대통령실 보도자료, 「사과 등 농산물 가격상승, 정부 대책 부족 때문? → 기상재해로 인한 공급 부족, 정부 특단 대책으로 물가 안정 총력 대응」, 2024. 3. 19.,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fact/vAkyhQ9T>, 검색일자: 2024. 10. 4.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5년 농식품부 예산안 18조 7,496억원 편성」, 2024. 8. 27.,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iUyRjU3MTI4MCUyRmFydGNsVmllldy5kbyUzRg%3D%3D>, 검색일자: 2024. 10. 4.

_____, 「2만원대 배추 값은 극히 일시적 일부 사례」, 2024. 9. 25.,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iUyRjU3MTxOCUyRmFydGNsVmllldy5kbyUzRg%3D%3D>, 검색일자: 2024. 10. 4.

농림축산식품부, 「2010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2009.

_____, 「2011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2010.

_____, 「2012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2011.

_____, 「2014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2013.

_____, 「2018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2017.

_____, 「2019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2018.

_____, 「2021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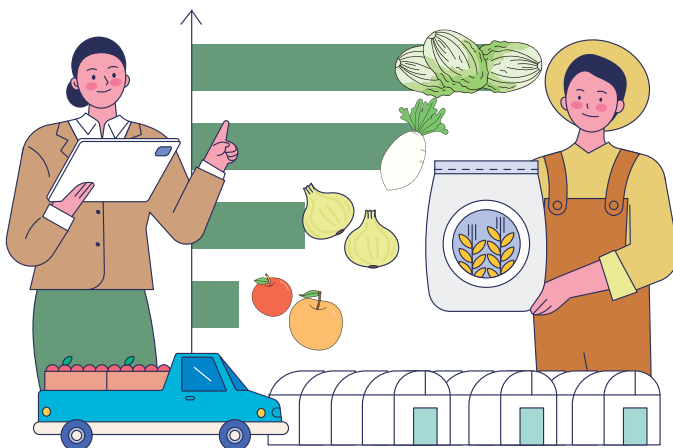
_____, 「2023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2022.

_____, 「2024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2023.

_____,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024. 1.

〈웹사이트〉

KAMIS, <https://me2.do/xiwaxMp0>, 검색일자: 2024. 10. 4.



문화예술향유지원

-통합문화이용권을 중심으로-



→ 작성자 | 이은솔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원

1. 배경

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으나, 몇몇의 요인으로 인해 사회 취약계층은 여전히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렵다. 2023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8.6%가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였는데, 이 중 가구소득이 높거나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살수록 문화예술을 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소득의 경우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3.1%가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였으며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6.8%가 관람하여 두 집단 간의 문화 양극화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문화 양극화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적 박탈감을 주며 문화 해독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박선희, 2022).

문화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를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

기까지 문화예술향유 확대를 위한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현 윤석열 정부도 문화예술향유를 국정과제¹⁾로 채택하여 취약계층의 문화 누림 기회 확대로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의 향상과 지역 간 문화격차의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예술 향유의 중요성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복지 증진 시책 강구)과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²⁾에서 주요 정책의 성과로 국민 문화향유를 언급³⁾하였으며, 핵심 추진과제 1번으로 문화여가비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여가비 지출 경감

1)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2022. 7.)

2)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2024. 2.

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 기본계획, 문화향유 지원으로 문화예술관람률, 여가 만족도 상승」,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2024. 2.

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문화향유를 위한 사업들은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하에서 추진되며,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과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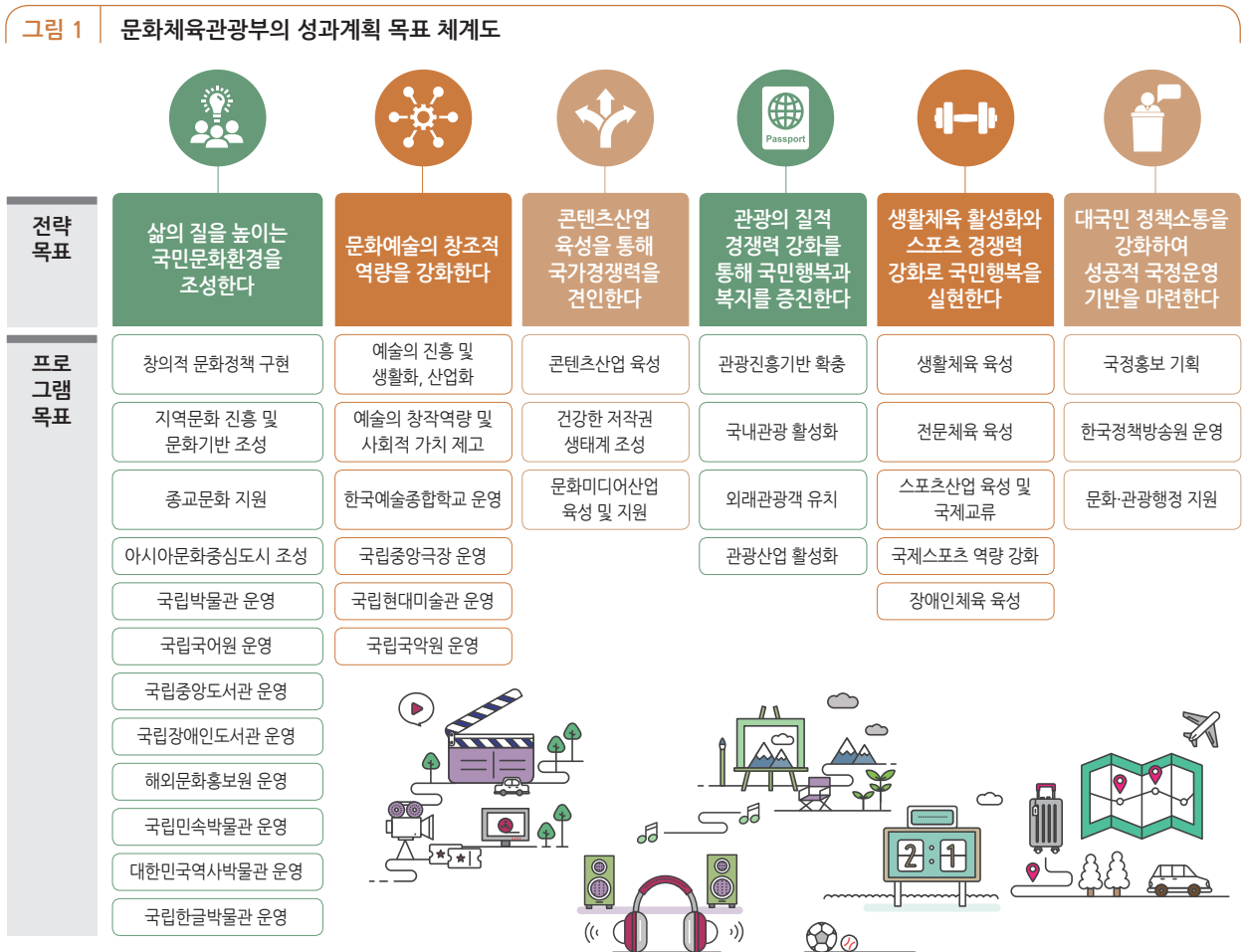
문화예술향유사업은 통합문화이용권, 청년문화예술패스,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은 2024년 시행되었고 신나는예술여행은 2025년에 지역문화진흥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에 보고는 가장 오랫동안 시행되어 많은 평가를 받고 예산 비중이 높은 문화예술향유사업의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개선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2. 사업개요

[그림 1]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성과계획 목표 체계도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정책 비전을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총 6개의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와 같은 전략목표하에 취약계층의 문화향유와 여가비 절감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시행된 후부터 지금까지 예산과 수혜자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관련 연구와 논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학술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도 성과계획서」, 2023. p. 2.

표 1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및 예산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세부사업 예산	
		2023년	2024년
문화예술향유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청년문화예술패스	248,526	275,149
	신나는예술여행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도 성과계획서」, 2024, p.196.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표 1>과 같이 단위 사업인 ‘예술향유기회 확대’ 사업의 세부사업인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역사업이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2005년 문화바우처 시범사업의 추진을 시작으로 문화, 여행, 스포츠관광 이용권으로 나뉘어 있던 사업을 2014년에 통합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추진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17개 시·도 및 지역 주관처⁴⁾이다. 2014년에는 가구별 1매 1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15년부터 개인당 1매 5만원으로 변

경되었으며, 2024년에는 개인당 1매 13만원까지 증액되었다. 카드 예산은 2015년에 78,986백만원이었으며 2023년에는 293,650백만원까지 증가하였으며, 카드발급 매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3. 성과지표

통합문화이용권은 보조사업으로 ‘문화누리카드 사용자 만족도’ 지표를 설정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자 만족도’ 지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영실적평가 주요 사업의 평가지표로도 활용되고 있는 지표로, 연도별 목표 및 실적은

4)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복권기금 전출) 후원

표 2 통합문화이용권의 예산 및 지원금액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카드 예산 (백만원)	-	78,986	76,500	96,636	115,176	128,000	153,900	197,000	289,300	293,650	-
1인당 지원금 (연간)	지원 금액	10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	11만원	13만원	
	지원 기준	가구별 1매*	개인당 1매(6세 이상)								
카드발급 매수(매)	-	1,378,368	1,450,801	1,523,506	1,591,777	1,629,036	1,752,875	1,975,071	2,319,973	2,554,011	
발급률(%)	-	87.3	94.8	94.6	96.7	101.8	102.5	100.3	88.2	95.7	-
이용률(%)	-	76.9	84.2	85.8	87.8	92.3	91.9	89.8	78.5	85.7	

주: * 청소년(6~19세)에게는 가구당 최대 5인까지 1매씩 추가 지급하고, 복지시설 거주자에게는 1인당 1매 지급하였음.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p. 6.;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p. 6.; 문화누리(<https://www.mnuri.kr/main/main.do>), 검색일자: 2024. 10. 28.

〈표 3〉과 같다. 2021년에 비해 실적치는 소폭 하락하였으나 2022년에는 달성도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2023년에는 99.7%를 달성하였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복권기금사업평가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항목 중 성과지표의 타당성 항목과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2022년과 2023년 복권기금사업평가에서는 성과지표를 ① 발급자 수(명), ② 이용자 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도(점), ③ 발급자 지원금 이용률(%)로 설정하였다. 2022년 발급자 수는 112.7%, 이용자 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도는 100.2%, 발급자 지원금 이용률은 99.3%의 달성률을 보여 주었으며, 2023년에는 3개 지표 모두 10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사업평가 현황 및 유사 사업 비교

1)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사업방식 변경 권고)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잔액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개선 방법으로 실제 카드 이용률을 향상 시켜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2) 복권기금 사업평가 현황(우수사업)

2023년에 실시한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통합

문화이용권사업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하였다. 평가 부문 중 특히 성과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급하여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격차를 완화하는 등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 외에 사업효과 부문에서는 가맹점과의 제휴 강화를 강조하였으며, 홍보 부문에서는 문화누리카드 누락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권리구제 서비스’를 확대하여 거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찾아가는 발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혜자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3) 2022년 재정사업 심층평가(장기적 관점 제시)

2022년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 중 대표적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의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시점을 평가한 타 평가와 달리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실증분석을 통한 중장기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문화 관련 지출 수준이 높아지고 문화소비 격차가 완화되는 등의 여건이 조성된다면 유럽 국가들과 같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청년층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바우처 방식을 유지한다면 미성년자가 있는 저소득 가정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프로그램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 3 통합문화이용권의 성과지표

(단위: 점)

성과지표	구분	2021	2022	2023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문화누리카드 사용자 만족도	목표	(신규)	87.2	87.9	$\Sigma[(\Sigma(7\text{점척도}-1) \times 16.7) \div \text{전체 응답자 수}]$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용자 만족도점수)	전문 조사기관 보고서
	실적	88	87.4	87.6		
	달성도	-	100.2	99.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성과보고서」, 2024, p. 471.

4) 통합문화이용권 만족도 조사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만족도 조사를 통해 평가와 함께 실제 사용자의 현황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제3장 성과지표 부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23년의 통합문화이용권 만족도는 87.6%였으며, 특히 20대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주로 도서 부문에 사용하였다.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지적하였던 불용액과 관련한 지원금 사용금액 부문에서는 지원금 전액을 사용한 사용자는 65%, 지원금 절반 이상을 사용한 사용자는 30.8%, 지원금 절반 미만을 사용한 사용자는 4.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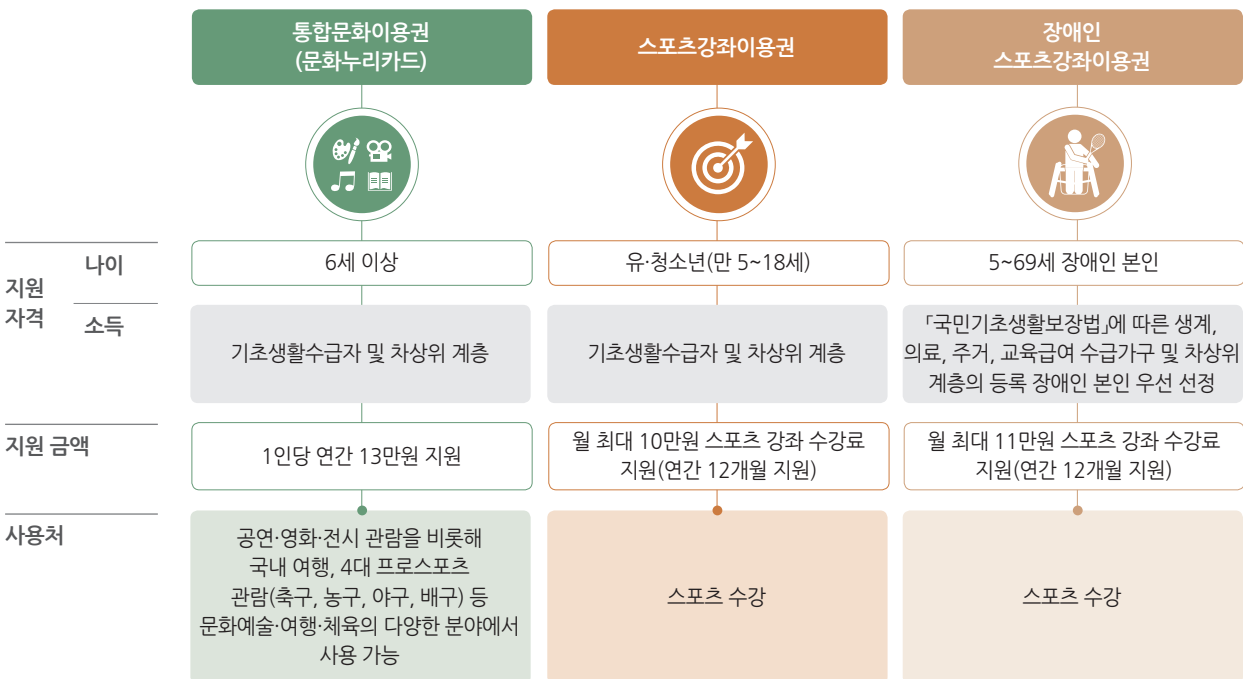
복권기금평가에서 강조한 가맹점 현황은 실제로 2019년에 2만 5,251개에서 2023년에 2만 9,505개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홍보 부문에서 60대는 행정기관 담당자의 전화 및 대면 안내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5) 유사 사업 비교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적인 이용권으로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을 꼽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취약계층의 여가비 지출 경감을 위해 문화 부문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금을 인상하고, 스포츠 부문에서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가비 지출 경감이라는 목적이 유사한 두 사업을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그림 2]와 같다.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나이 부문에서 차이점이 드러난다. 지원 금액은 스포츠강좌이용권이 월 최대 10만원으로 연간 12개월을 지원하여 1인당 규모가 더 크지만, 스포츠 수강에 한정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통합문화이용권은 다양한 사용처

그림 2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 강좌이용권 비교



자료: 문화누리, <https://www.mnuri.kr/main/main.do>, 검색일자: 2024. 10. 28.

에서 이용 가능하다. 2018년부터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도 통합문화이용권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5. 개선방안

본 장에서는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 중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 정리한 것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보조사업 성과지표인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만족도’ 지표는 실적이 2021년도부터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8년(85.9%)과 2019년(86.8%)에 비해서는 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달성률이 100%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목표치의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복권기금 사업평가에서는 발급자 수와 같은 단순 산출지표는 결과지표 또는 발급자 대비 이용액 수와 같은 지표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평가 부문에서 복권기금 사업평가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익명성을 보호하여 낙인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 만족도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로 가맹점을 이용하면서 어려움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이용자를 찾아볼 수 있다.⁵⁾

통합문화이용권의 사용과 관련한 지적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복권기금 사업평가는 가맹점이 이전에 비해 많이 늘어났으나 여전히 가맹점을 찾기 어려워 지원금을 다 사용하지 못한 사용자가 있고,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가맹점을 확보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국가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지적한 불용액과 관련하여서도 실제로 지

원금을 모두 다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가맹점을 찾기가 어려워서’나 ‘이용하고 싶은 분야나 가맹점이 없어서’⁶⁾라고 답한 이용자가 있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이용권사업은 여가비 지출 경감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적인 유사 사업이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스포츠이용권 또한 우수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적⁷⁾을 받는 등의 복합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한 사업들이 다양한 평가를 공유하고 미리 장단점을 보완해 간다면 사업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자료

- 박선희,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향유정책에 대한 연구 -통합문화이용권의 운영실태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27(3), 2022, pp. 111~133.
-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1)』, 2022.
-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복권기금사업성과평가단, 『2022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보고서』, 2023.
- _____, 『2023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보고서』, 2024.
-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문화 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군』, 2023.
- 대한민국정부,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2022.
-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23.
-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2024.
-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성과보고서』, 2024.
- _____, 『2025년도 성과계획서』, 2024.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2019.
- _____,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2023.
- 문화누리, <https://www.mnuri.kr/main/main.do>
- 손봉선, 2024.10.22., 「문체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중복지원·부정사용 허점 노출」, 『매일일보』,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70548>, 검색일자: 2024.10.28.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p. 197.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p. 48.

7) 손봉선, 「문체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중복지원·부정사용 허점 노출」, 『매일일보』, 2024. 10. 22.

부담금 제도 및 최근 정비사항



→ 작성자 | 김경훈 재정성과평가센터 선임연구원

1. 부담금 개요

가. 부담금 개념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 및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며, 부담자가 공공사업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특정 사업으로부터 편익을 얻게 되는 경우 등에 부과된다. 부담금의 법적 개념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

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¹⁾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부담금의 정의에 따라 부담금은 부과대상자의 범위와 징수목적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집단이 다른 집단 또는 일반적 납세의무자보다 해당 부담금 징수목적과 관련하여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함을 뜻한다.

나. 부담금과 조세 등 유사 개념과의 차이

부담금은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세와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담금과 조세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

¹⁾ 기획재정부,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24, p. 4.

인 데 반해,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부담금은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데 반해, 조세는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일반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한다. 셋째, 부담금은 사업소요 경비, 사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반면, 조세는 납세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다만 조세 중에서 목적세는 특정한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경비라는 점에서 부담금과 성질이 같으나, 부담금과 같이 그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 개인에 대하여 그 납세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 부담금의 분류

부담금은 설치목적 및 성격에 따라 크게 ‘이용자·원인자부담금’, ‘수익자부담금’, ‘유도성부담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이용자·원인자부담금’은 각종 시설의 건설 또는 유지 등을 위하여 그 사용자 또는 원인자에게서 관련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로,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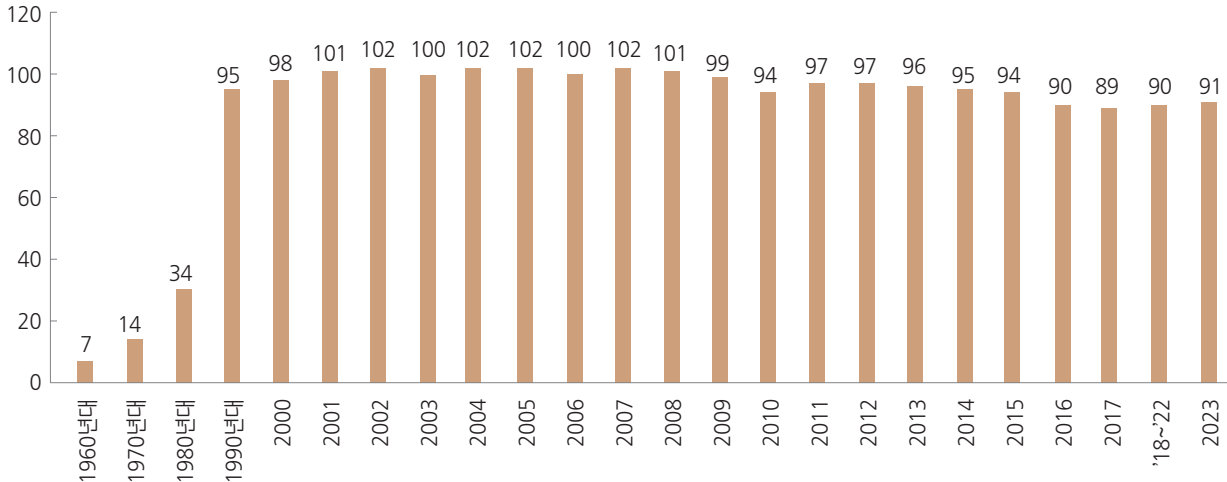
표 1 부담금과 관련된 유사 개념과의 차이

개념	정의	부담금과의 차이
사회보험료	피보험자의 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사고에 의한 소득상실에 대하여 보험원리에 의거하여 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하여 피보험자와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금은 특정의 공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 부과되는 반면, 사회보험료 는 피보험자들 간의 연대적 배분 및 차등적 조절을 감안해서 부과됨
수수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에 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요금	부담금은 특정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한 이해관계자에게 부과하는 데 반해, 수수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개별적인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요금), 사용료 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재산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대가)로서 부과됨
사용료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사용의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	
과태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일정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벌	
벌금	국가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납부를 명령하여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범죄인의 재산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부담금은 특정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한 이해관계자에게 부과하는 데 반해, 행정제재금 은 재정수입의 목적이 아닌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또는 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부과됨
범칙금	일정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되나,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금전벌	
가산금	일정한 행정법상의 급부 의무 또는 작위의무를 진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지는 금전부담	
과징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상의 제재로서의 금전지급의무	
이행강제금	행정청이 일정 기간 내에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정의 금액을 부과·징수할 것을 예고한 후 당해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벌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24, p. 4.

그림 1 연도별 부담금 수

(단위: 개)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24, p. 24.

시설 설치비용,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이 있다. 둘째, ‘수익자부담금’은 공공사업 또는 시설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 농수산물수입이익금 등이 있다. 셋째, ‘유도성부담금’은 직접적인 규제수단이 아닌 금전에 의한 간접적인 규제수단에 의하여 일정한 국가목적에 유도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 배출부과금, 과밀부담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으나, 부담금 간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의미상 서로 중첩되는 부분도 있어 개별 부담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라. 부담금 현황

2023년 기준 18개 부처에서 91개의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다. 1960년대 및 1970년대에는 각각 7개의 부담금이 신설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총 34개의 부담금을 운용하였다. 1990년대에는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 설치 필요성 등으로 부담금이 크

게 늘어나 95개의 부담금이 운용되었다. 2001년 이후 100여 개의 부담금을 유지하다, 2010년에 3개의 부담금을 관리대상에 추가하고, 예치금·보증금 성격의 8개 부담금을 제외하여 94개의 부담금이 운용되었다. 이후 여러 번의 평가를 통해 2018년 이후로 90개의 부담금을 유지하다가 2023년에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 신설되어 현재는 91개의 부담금이 운영 중이다.

2023년도 부담금 징수실적은 23조 2,562억원으로 전년 대비 8,852억원(4.0%) 증가하였다. 전체 부담금 징수액 중 86.5%인 20조 1,053억원이 중앙정부의 기금(17조 3,729억원)과 특별회계(2조 7,324억원)의 수입으로 귀속되었고, 나머지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수입으로 귀속되었다.

2. 부담금 관리제도

가. 부담금 관리제도 도입 배경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각종 공익사업

을 추진하고, 특정 목적의 달성을 추구하며, 사회적 비용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세 외에 다양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이는 부담주체인 국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한 부담금 징수 증가로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재원에 여유가 생겨 사업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지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측면도 있었다. 이 외에도 중복부과, 부과대상 및 방식이 불합리한 경우 등 제도적으로 비효율적인 측면도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에 경제단체에서 준조세가 634건에 달하여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제도적 정비를 정부에 건의하여, 정부는 불필요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경감하는 작업을 시행하였

다. 2000년 12월, 국민여론과 경제단체 등의 건의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존재근거를 상실했거나 부과대상과 사용용도 간 관계가 밀접하다고 보기 힘든 부담금 등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무분별한 부담금의 신설이나 증설을 억제하고 부담금 부과·징수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담금의 신·증설 시 심사,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지속적인 부담금운용평가 등이 제도화되었다.

나. 부담금 관리제도의 주요내용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한 부담금관리제도의 주요내용은 부담금의 신설·변경 시 심사(제6조),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 제출(제7조),

그림 2 부담금 신설·변경 시 심의절차



부담금운용평가제도(제8조),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작성 및 국회 제출(제6조의2)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부담금의 신설·변경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입법예고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부담금운용보고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또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제6조의2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다음 연도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3월 말까지 부담금운용계획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부담금운용평가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부담금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부과실태 및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도록 하였고, 평가 결과 부담금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

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담금운용평가는 부과 타당성, 부과기준의 적절성, 사용용도의 적정성,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권리구제 절차의 법률 규정화 여부, 가산금·증가산금 부과규정의 적정성, 징수율 제고 노력을 평가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담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부담금운용평가를 처음 시행한 2003년을 비롯해 2006년, 2009년은 3년마다 전체 부담금을 평가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매년 전체 부담금의 1/3씩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2018년부터는 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는 부담금의 수입과 지출(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평가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존치평가와 평가단을 통합하고 평가주기 및 평가대상을 일치시켜 상반기에는 기금의 존치평가를, 하반기에는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부담금을 동일한 평가위원이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3. 최근 부담금 정비사항

가. 추진 배경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는 2024년 3월 27일에 전면적인 부담금의 정비를 통해 기업활동 촉진 및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부담금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후 최초의 전면정비로서,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부담금을 폐지 및 감면하여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담금 정비의 기준은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정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정립된 정당화 요건, 부담금운용평가 결과 및 외부 지적사항 등에 따라 정비하였다. 폐지기준은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과목적·대상 간 관련성이 미흡하거나, 경제·환경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부담금 부과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그리고 부과실적이 없거나 미미하여 부과실효성이 낮은 경우이다. 감면기준은 지출 대비 부담금 수입이 과다한 경우, 부담금의 수입 일부를 사용 용도와 다르게 운용하는 경우, 그리고 부과기준의 합리성이 부족한 경우이다. 이 외에 금융기관 출연금,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국민건강·환경보전 등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진 55개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정비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번 부담금 정비는 국민과 기업이 경감효과를 직접 체감이 가능할 수 있는 부담금에 집중하였다. 전기요금, 항공요금, 영화관람료 등 실생활과 밀접함에도 그간 국민들이 납부 사실조차 잘 몰랐던 전력기금부담금, 출국납부금, 영화상영관입정권부과금, 국제교류기여금 등을 중심으로 정비하였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기업·사업시행자 등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을 정비함으로써 국민부담 전가분에 대한 완화를 유도하였다.

나. 주요 부담금 정비내용

1)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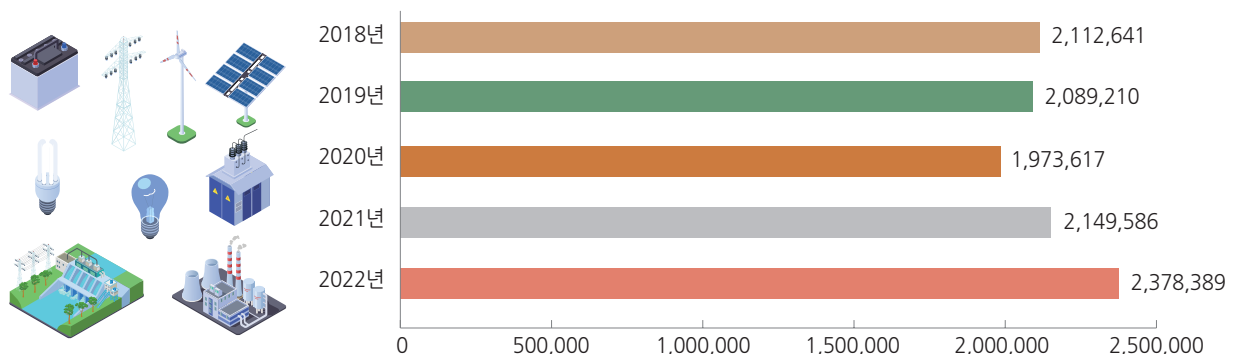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전력산업 기반조성사업(「전기사업법」 제49조)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1년 2월

부터 전기사용자로부터 부담금 징수를 시작하였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현재 1천분의 37(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기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본 부담금의 부과요율은 2001년 3월 3.13%에서 2002년 4.591%로 인상되었다가 2005년 3.7%로 인하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요율을 유지 중이며, 2023년 기준 법정부담금 수입은 약 3조원이다. 본 부담금은 100%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귀속되어 기금의 사업지출을 위해 사용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주요 수행사업은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 및 보급, 전기안전관리, 농어촌전기공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기반구축 지원, 전선로지중화, 전력해외진출지원 등이 있으며, 2023년 기준 약 2.5조원의 사업비를 지출하였다.

기금존치평가에서 중기이용자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시작된 2013년 이후 기금의 적립 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과요율 인하 등 부과요율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부담금평가에서도 동일한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2011년 발생하였던 대규모 블랙아웃 사태 이후 전력수급안정에 대한 준비를 위해 기금의 적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의 부과요율은 낮춰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해

그림 3 전력산업기반기금 연도별 부담금 수입 규모

(단위: 백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24, p. 332.

당 부담금이 주요 수입원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은 2019년 말 기준 약 4조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위탁하는 수준까지 증가하게 되었다. 이후 2022년에 에너지특별회계(약 1.3조원), 기후대응기금(2,000억원)으로 전출이 이루어졌으며, 2022년 말 기준으로 1조 1,800억원을 공자기금에 위탁하고 있다. 2023년에 약 1.5조원의 에너지특별회계 및 기후대응기금으로의 전출이 추가로 예정되어 있어 기금의 여유자금 과다상태는 어느정도 해소되었으나, 향후에도 부담금을 비롯한 기금의 수입이 지출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의 지속적인 여유자금 과다 상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17년 35개의 세부사업(사업비 약 1.68조원), 2020년 60개(사업비 약 2.66조원), 2023년 101개(사업비 약 2.41조원)의 세부사업을 수행하였다. 사업의 수와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2023년 부담금평가에서는 현재 부담금의 법적 사용용도를 광의로 해석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사용용도를 구체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5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7월 1일부터 부과요율 감면을 시행하여 0.5%p 인하된 3.2%로 부과하고 있으며, 부담금요율을 2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7%까지 인하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약 9천억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해당 부담금 수입의 축소를 통해 기금의 과도한 여유자금 규모를 줄여 기금의 설치목적과 합목적성이 낮은 사업의 확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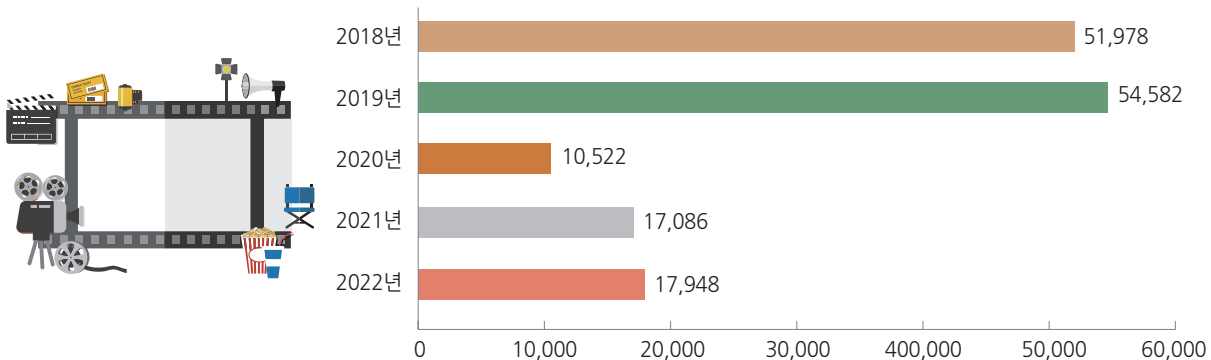
2)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은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 산업의 진흥을 위해 2007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며,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3%를 관람객에게 부과한다.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운용하는 영화발전기금으로 귀속되며,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등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2006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영화발전기금 4,000억원 조성을 계획으로 국고에서 2,000억원이 출연되었고, 2014년까지 7년간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 2,000억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2011년 부담금평가 시 기존의 목표대로 2014년까지 영화발전기금 조성 목표를 달성하고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있었다. 이후 2013년까지 2,132억원이 부과되어 영화발전기금 조성 목표가 달성되었으며 2014년 일몰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14년 12월 국회 의결로 2021년까지 7년을 연장하게 되었고,

그림 4 | 영화상영관입장권 연도별 부담금 수입 규모

(단위: 백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24, p. 244.

2021년 12월 다시 한번 징수기한을 7년 연장(2028. 12. 31.까지)하였다.

본 부과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2018년과 2019년에는 약 500억원대의 부과금 수입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2020~2023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약 100억원대로 부과금수입이 급감한 반면, 동 기간 동안 큰 타격을 입은 영화계의 피해 회복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의 사업비 지출은 더욱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그동안 부과금으로 적립해 왔던 기금은 모두 소진하고, 2023년부터는 연간 약 800억원대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발생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과금 수입 규모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2023년 부과금 수입은 약 263억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고, 이로 인해 본 부과금이 영화발전기금의 지출을 부담하는 비중은 더욱 감소하였다.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의 부담주체인 영화관람객은 영화산업 진흥이라는 특정 공익사업의 원인제공자 혹은 직접 수혜자라고 보기 어려워 부과금 부담자와 수혜자 간 직접적 연계성이 낮으므로, 부과금 부과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과거부터 존재하였다. 2008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판결 2007헌마860) 9인의 헌법재판관 중 5인이 본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난 바가 있으며, 2023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부과금 부담

자와 수혜자 간 직접 연계성이 낮으므로 부과금 부과의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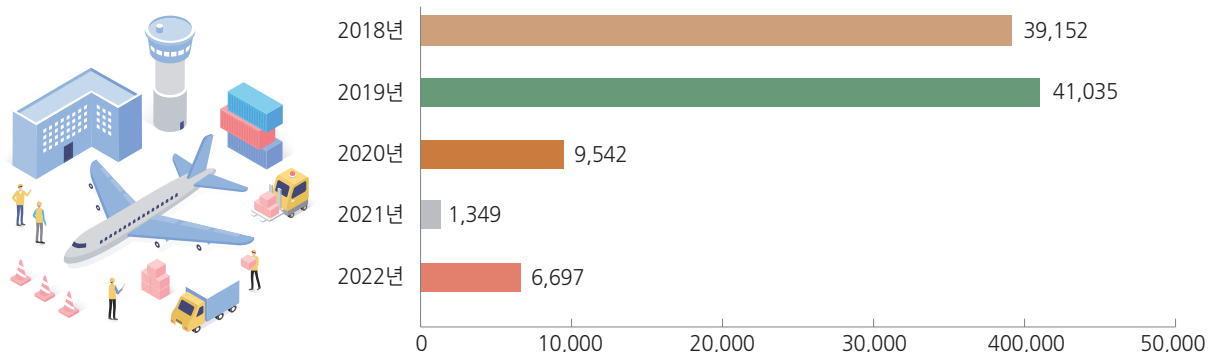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27일에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은 폐지하고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산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해당 발표는 두 가지의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부과금을 폐지하여 영화관람료를 인하할 수 있다. 본 부과금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546억원, 코로나19 이후 2022년에는 179억원을 징수하였으며, 2024년에는 약 294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부과금 폐지를 통해 해당 금액만큼 국민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소형·단편영화 제작지원, 영화산업 기초 인프라 지원 등과 같이 영화산업의 기초 분야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은 정부가 일반재정을 투입하여 안정적으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을 하여 정부의 영화산업 육성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출국납부금(「국제질병퇴치기금법」)

2007년 9월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 지원

그림 5 출국납부금(「국제질병퇴치기금법」) 연도별 부담금 수입 규모

(단위: 백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24, p. 181.



을 목적으로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 시행되었다. 국제 빈곤퇴치기여금은 일반 정부예산과 다른 혁신적인 방식으로 개발재원을 동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국제선 항공권 1매당 1,000원씩을 부과하였다. 당초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할 예정이었던 동 기여금은 2012년 8월에 5년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7년 9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되었다. 이후 2017년 1월 시행된 「국제질병퇴치기금법」에 따라 기존 2007년 국제빈곤퇴치기여금으로 우리나라에 신설되었던 항공권연대기금이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새롭게 출범하고, 기금의 재원인 부담금의 명칭이 ‘출국납부금(「국제질병퇴치기금법」)으로 변경되었으나 부담금의 부과대상이나 부과요율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코로나19, 메르스, 에볼라 등 국제 이동으로 전파가 확대되는 감염병에 대한 선제대응 측면에서 개발도상국 질병의 예방 및 퇴치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 보건안보 강화를 위해 설치되었다. 주요 사업은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 글로벌 국제질병 퇴치이며, 2022년

약 560억원, 2023년 약 360억원의 사업비를 지출하였다. 출국납부금(「국제질병퇴치기금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약 410억원이 징수되었으며, 2021년에는 13억원까지 줄어들었다가 2023년 약 294억원까지 다시 증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납부금 수입으로 인해 사업비 충당이 불가능하여 2022년 약 487억원, 2023년 약 100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하였으며, 2024년에는 약 520억원의 공자기금 차입이 예정되어 있다.

본 납부금은 2018년 부담금평가에서 부과타당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도상국의 질병에 대한 예방과 퇴치사업을 조세గా 아닌 별도의 부담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지는 않으며, 그 이유는 모든 국제항공 이용자가 개발도상국의 질병에 대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질병에 대한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여 글로벌 보건안보에 기여하고 모범적인 중견 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의미가 있음에 따라, 부담금보다는 조세수입

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담금의 정의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대상자의 범위와 부담금 징수목적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집단이 다른 집단 또는 일반적 납세의무자보다 징수목적에 대해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특정 개발도상국으로 출·입국을 하는 자가 아닌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모든 자에 대해 출국납부금을 부과하여 해당 재원을 개발도상국의 질병예방과 퇴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부담금의 성격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부과타당성이 부족한 본 납부금은 지난 3월 기획재정부 부담금 정비방안을 통해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동 부담금의 폐지를 통해 항공권 요금을 인하하여 연간 약 400억원의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부담금 정비 의의 및 시사점

이번 부담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적인 정비이다. 많은 부담금이 설치되었던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부담금 부과 타당성이 약화되었고, 부담금의 정의에 미부합하고, 부과목적과 대상 간 관련성이 미흡 또는 약화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 그동안 부담금운용평가와 외부 지적에 의해 부담금 존치의 타당성에 지적을 받아 온 여러 부담금이 있었으나 그 부담금들을 폐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 주요 이유는 일선 부처에서 부담금이 폐지되면 재원(수입)이 없어져 사업이 폐지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완전히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맞는 내용도 아니다. 부담금으로 수행 중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인정된다면 정부의 일반회계 사업으로 편입하여 수행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그 중요도나 필요성이

낮은 사업들은 자연스럽게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3개의 부담금은 실생활과 밀접함에도 국민들이 납부 사실조차 잘 몰랐던 부담금이었으며, 이를 정비하여 국민과 기업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장기간 부과실적이 저조하거나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존치되어 규제로만 작용하는 부담금을 정비하는 등 대대적인 이번 정비를 통해 그간 부담금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90개 내외로 유지되었던 부담금 수를 69개로 대폭 축소하였다. 이러한 부담금들은 국민과 기업의 실생활과 직접적인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부과실적이 매우 미미하거나 없음에도 해당 부담금에 대한 현황 파악, 평가, 기타 관리 등 부담금이 존재함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알기 어려운 다양한 행정력이 소비되는데, 이러한 낭비를 방지하였다는 데에도 이번 부담금 정비는 큰 의미가 있다.

부담금의 관리에 있어서 사후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부담금의 신·증설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담금의 경우 신설보다 폐지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이다. 가령 이미 설치목적은 달성하였거나 실효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저항에 부딪혀 폐지가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부담금을 신·증설할 경우 사전 통제방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더욱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2023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2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 2024. 3. 27.

PART

II

성과관리 이야기

〈성과관리 이야기〉에서는 전문가와 실무진의 경험을 통해 얻은 귀중한 인사이트 및 개선점을 공유함으로써 보고서나 평가 결과 등으로 다소 딱딱하게 제공되던 성과정보를 보다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또한 공유를 통해 성과관리의 새로운 방향성과 전략을 도출하며, 성과관리 시스템의 혁신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전문가 목소리’ 코너에서는 재정사업 성과평가에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루었으며, 지난해 심층평가가 진행되었던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군의 평가 결과와 주요 내용을 평가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여 쉽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현장 이야기’ 코너에서는 20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전체 사업 중 상위 20%에 해당하는 우수 등급을 획득한 사업들 중 일부를 소개하고, 해당 사업의 성과관리 노하우를 담당자로부터 직접 공유받았다. 또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세종특별자치시청의 사례를 공유하여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인공지능을 재정사업 성과 평가에 활용한다면?



오영민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 들어가며

최근 노벨상 수상의 최대 이변은 기초과학 연구자가 아닌 AI를 연구한 학자들이 수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노벨 물리학상은 머신러닝(기계학습)의 기반을 닦은 연구자에게, 노벨 화학상은 AI를 활용하여 단백질 구조를 연구한 학자들에게 수여되었다. 이렇듯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넘어 기초과학 영역까지 그 활용 분야가 넓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에 인공지능 기술을 어디까지 활용할 있을까? 바둑 대국에서 알파고가 사람을 이기고 Chat GPT가 사람의 의사결정을 대체하고 있는 현실에서 재정사업의 성과를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재정사업성과평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인공지능 기술의 개념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기계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을 의미한다. 인간의 시각 인지, 음성 인식, 의사결정 및 언어구사 능력 등과 같이 인간 지능이 필요한 분야를 실행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인공지능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많은 데이터, 좋은 알고리즘, 고효율의 하드웨어와 같은 조건들이 필요하다. 특히 인공지능이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여기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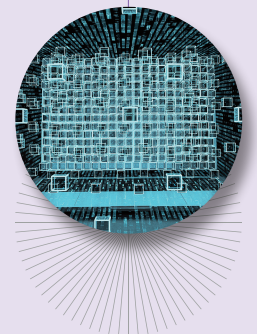
각된다.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보다 너무 방대하여 기존의 방법이나 도구로 수집, 저장, 분석 등이 어려운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들을 의미한다.

빅데이터는 크기(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을 특징으로 한다. 결국 빅데이터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매우 빠른 속도로 수집 생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데이터를 뜻하며, 인공지능은 이러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과 분석을 실시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인공지능은 특정 작업에 특화된 인공지능인 약인공지능(Narrow AI)과 인간처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할 수 있는 강인공지능(General AI)으로 나뉘며, 더 나아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초인공지능(Superintelligence)이 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약인공지능이며, Chat GPT와 같이 스스로 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문제에 답을 제시하는 Open AI 시스템은 강인공지능의 초기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인공지능의 학습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과 딥러닝(Deep Learning)을 통해 이루어진다. 머신러닝은 사람이 데이터에서 중요한 특징을 추출하여 모델에 제공한 후 다양한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방법이며,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이 데이터에서 스스로의 특징을 추출하여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는 머신러닝의 진화된 학습 방법이다.

3. 공공부문 평가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의 예

인간의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민간부문에서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위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공공부문에서의 활용은 더딘 편이다. 특히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다양한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공공부문 평가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제도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소수의 연구가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재정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탐색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분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업의 효과가 높은 수혜자 집단을 예측하였다. 또한 정부문서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성과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거나 재정사업에 대한 감성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와 태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김민호·한재필(2022)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기업의 특성 정보와 과거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하였다(Random Forest). 이 연구는 머신러닝에서 선정한 기업이 현재의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된 기업보다 성과가 우수한 것을 확인하여 머신러닝 모델이 사람이 하는 선정평가보다 기업 성과 예측에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정재현·이환웅(2022)은 머신러닝의 알고리즘(Decision Tree 및 Boosting)을 사용하여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470개의 변수를 분석한 후, 노인자살 예방사업의 수혜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변수를 식별하였다. 김현민(2023)은 국가연구개발 사업 자체 평가에 등급에 미치는 Keyword를 딥러닝의 문서분류 모델인 KoBERT과 머신러닝 기법



인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하여 확인하고, 이러한 예측 키워드를 통해 인공지능이 자체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오영민 외(2021)는 어촌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에서 사업 관련 뉴스기사에 대한 감성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가 부진함에 따라 부정적 기사가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한 후, 이러한 부정적 키워드를 중심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후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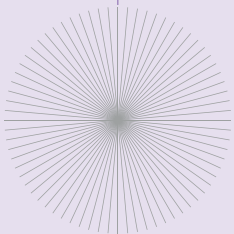
4. 재정사업평가에서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 탐색

학술적 차원에서 진행된 인공지능 기반 평가를 평가 단계별로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평가는 사전평가이다. 현재 정부는 민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 및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에서 적절한 수혜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정책의 효과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수혜자 결정은 사업 부서가 사전 기준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하거나 평가위원회에 의한 정성적 선정평가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성과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경우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 수혜자별 정책 효과를 학습한 후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수혜그룹을 식별하여 집중지원한다면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 기업지원에 대한 정책효과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중소기업 지원사업이나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인공지능의 학습에 의한 수혜 대상 판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수혜자 결정 외에 재정사업의 성과목표치를 설정하는 경우 인공지능의 예측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부처는 가능한 성과목표치를 낮게 설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어 목표치를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 만약 과거부터 축적된 성과지표의 실적치 자료가 충분히 있다면 인공지능의 예측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적정 성과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인공지능은 모니터링으로 대표되는 과정평가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현재 금융이나 세무 분야에서 이상 거래 흐름을 인공지능이 탐지하여 부정적 사례를 적발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인공지능이 보조금이나 대규모 재정지원사업의 예산 낭비나 부적절 집행사례를 사전에 학습하고 실제 사업에서 이상 및 부적절 집행 여부를 탐지하게 하는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사후평가의 정책 만족도 측정이나 메타평가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현재 많은 재정사업평가에서 정책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문항의 구성이나 지나치게 높은 만족도 점수로 인해 여러 문제가 있다. 이 경우 텍스트 마이닝의 감성분석을 활용하여 재정사업에 대한 국민 및 수혜자의 만족도와 인식 수준을 간접적으로 평가하여 사업 만족도 측정을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은 메타평가의 평가도구로 활용 가능하다. 메타평가는 기 진행되었던 평가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재평가하는 평가로서,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점검하기 위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연구개발사업 평가, 지역균형사업 평가, 재난안전사업 평가에서 실시되고 있다. 향후 인공지능의 텍스트 유사도 분석기법 등을 활용하여 사업의 등급과 유사도가 높은 단어나 표현을 식별하고 자체 평가보고서의 일치도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메타평가의 도구로서 활용 가능할 것이다.

5. 한계와 시사점

전술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 기술이 재정사업평가에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평가에서의 보편적 활용을 위해 고려해야 할 한계도 존재한다. 먼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침해의 문제이다. AI 및 빅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들은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할 수 있다. 특히 평가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평가 결과가 나쁠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인공지능 분석을 위한 데이터의 질과 양도 문제이다.

예를 들어 텍스트 마이닝을 위한 웹 크롤링 기반의 텍스트 분석은 표본의 일부 국민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약하므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데이터가 노이즈를 포함하거나 이상치 등이 존재하는 경우 분석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분석을 위해서는 방대한 수준의 시계열 및 변수 데이터가 필요하나 대규모 데이터가 축적된 분야는 보건 및 소득 자료 외에는 제한적이며, 부처 간 데이터 공유도 제한적이다. 데이터 문제 외에 인공지능 분석기법도 보완해야 할 한계가 있다. 아직까지는 데이터 분석 지표와 모형, 방법론 및 결과를 선택하고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은 상당 부분 인간이 주관적으로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기존 회귀분석 등 전통적 통계분석이 정확한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같은 자료에 대해서도 모형과 방법론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평가 결과도 달라질 수 있어 평가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복잡도가 증가할수록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인공지능에 관련 정부 거버넌스 측면에서 한계도 있다. 정부부처 내에 평가에 활용할 충분한 인프라나 관련 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현재 재정사업의 평가에서 체계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를 수집, 관리, 분석하는 전담 정부 부서나 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 부처 내 인공지능 관련 성과관리 및 평가 제도가 부재하고 관리 인력의 전문성 수준이 낮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의 활용은 거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향후 공공부문 평가에서도 다양한 인공지능을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재정사업 평가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을 위해 전략, 관리, 거버넌스와 역량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먼저 전략 측면에서 인공지능을 재정성과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지원, 교육, 보건, 국방, 치안 등 예산 규모가 크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





만 평가를 위한 국가전략계획과 실행 로드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신설된 재정사업관리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평가를 준비할 수 있는 전략과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분석의 기반이 되는 행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각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는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관리 프로토콜로 전환하고 부처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자료 및 과거 정책 및 사업평가 결과는 반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분석이 가능한 정형데이터로 전환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과거의 평가데이터를 평가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도를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인공지능 관련 조직과 인프라를 확대하고 평가 관련 인력의 인공지능 관련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향후 인공지능의 활용 증가에 대비하여 관련 전략수립, 데이터 관리, 데이터 평가를 담당하는 재정성과관리 AI 담당관을 부처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재 평가 담당 인력의 인공지능 관련 지식이 낮아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관련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무원 채용시험 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측정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재정사업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및 한계와 시사점을 살펴 보았다.

아직까지는 데이터 확보, 분석의 신뢰성, 거버넌스 및 관련 인력의 전문성 문제로 인공지능 기술을 재정사업평가에 전면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민간 부문에서 인공지능을 인간의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고 보조자료로 사용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평가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시범 재정사업평가 실시를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재정사업평가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성공사례가 축적되고 인공지능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더 많은 평가에서 인공지능 평가가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 김민호·한재필, 『AI 기술,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 한국개발연구원, 2022.
 김현민, 『임무지향 R&D 평가를 위한 AI 활용 및 신규평가방법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3.
 오영민, 『여론뉴딜 300 재정사업 심층평가』, 기획재정부, 2021.
 정채현·이환웅, 『머신러닝을 활용한 조세/재정정책의 평가와 설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참여하며 -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군



이명헌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국민이 내는 세금은 소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그것을 사용해서 행하는 여러 주체들을 지원하는 정책(보통 재정사업이라고 부른다)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우리 몸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에 간단한 국민건강검진부터 아주 자세한 MRI나 조직검사가 있듯이,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에도 여러 수준이 있다. 그중 가장 상세한 평가가 ‘심층평가’이다.

어떤 면에서 상세한가? 심층평가는 사업의 개요 및 현황 분석과 국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재정사업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체계·절차·전달체계 및 자원배분의 적절성, 사업 간·부처 간 유사중복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사업 및 사업군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분석, 그리고 종합적 지출효율화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정해져 있다(「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종합적 성과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무엇인지를 수량적으로 정의하고 사업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없었을 경우에 비해 그 수량적으로 정의된 지표가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023년부터 2024년에 걸쳐 시행된 심층평가 중 하나는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군에 대해서 행해졌다.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유형의 문화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비, 보수, 재난방지 조치를 취하는 재정사업이다. 이하에서는 그 심층평가의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¹⁾ 우선 이 사업이 시행되는 문화재 현황을

1) 이 글은 다음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 이명헌·김진영·박상근,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군」, 2023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최종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간단히 정리하고, 평가대상이 되는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군의 큰 열개를 소개한 후, 어떤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했는지를 설명하고, 끝으로 그 평가 결과 중 중요한 것을 요약할 것이다.

1. 문화재 현황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의 재정 규모는 일차적으로 문화재가 얼마나 많은가에 의해서 좌우된다. 국가유산청이 지정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는 2022년 기준 약 5,300건 정도이다. 신규등록은 매년 약 120~130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말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연간 2~3%씩 유지관리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의 재정소요가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의 지원대상에는 국가가 지정한 것뿐 아니라 시·도가 정한 지정·등록 문화재도 포함된다. 2022년 기준으로 이러한 문화재가 약 7,000개이며, 인구 1만명당 지정 건수는 전국적으로는 1.4개 정도이지만,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도(道)에는 2~4개 정도가 된다.

다음으로 문화재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조건은 문화재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이다. 개인 소유의 문화재는 개인이 그것을 활용하여 그것을 향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관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원 전부 또는 일부를 마련할 수 있다. 반면 개인이 아닌 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가 많다면 그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소유관계 통계를 보면 개인 소유 비율이 13%에 불과하다. 따라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원이 개인의 책임하에 마련되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유의 문화재 비율이 37%이다. 그 외에 법인, 단체, 혼합 소유가 48%이다. 이는 문화재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을 의미한다.

문화재 관리주체는 소유주체와 같을 것으로 짐작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다르다. 개인이 관리주체인 경우는 7%에 불과하고, 국가가 주체인 경우도 17%이어서 소유 비율 27%에 비해서 훨씬 낮다. 반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문화재 비율은 35%나 되어서 소유 비율 8%에 비해서 훨씬 높다. 즉 문화재의 관리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따라서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은 중앙정부의 재정사업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문화재의 종교적 성격을 보면 63%는 특정종교와 관련되어 있지 않고, 다음으로 불교문화재의 비율이 33%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다른 종교의 비율은 미미하다. 따라서 문화재의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국가유산청과 종교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2.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군 개요

평가의 대상이 된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군에는 2024년 예산 기준으로 8개의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다(〈표 1〉 참조). 이 사업들은 사업의 보다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서 3개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기존 문화재 보존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수와 정비를 행하는 ‘문화재 보수관리 부문’이다. 이것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문화자산을 일상적으로 ‘유지관리’하는 활동이다. 2024년 유지관리 사업군 전체에 투입된 예산이 약 6,800억원인데, 그중 5,700억원이 투입될 만큼 예산 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이다.

둘째, 보존가치가 높은 특정한 문화권이나 유산을 정비, 관리하는 ‘보존육성 부문’이다. 이것은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보존과 활용의 가치를 높이는 ‘개발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문화재라는 자산을 새롭게 형성하는 순투자 활동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문화재가 재난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을 때 이에 긴급히 대응하거나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재난방지 부문’이다. 이것은 위험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위험관리’ 활동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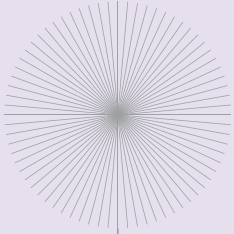


표 1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군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부문	담당부처	세부사업명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문화재 보수관리	국가유산청	문화재 보수정비	360,060	393,300	397,000	391,500	463,400	517,341
		문화재 돌봄사업	13,535	14,703	16,205	19,286	20,651	18,962
	문체부	전통종교문화 유산보존	25,354	23,842	27,206	27,954	35,944	37,360
	소계		398,949	431,845	440,411	438,740	519,995	573,663
보존육성	국가유산청	고도보존 및 육성	3,128	5,971	9,588	20,028	19,455	20,161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36,267	44,203	42,702	46,770	39,783	35,052
	소계		39,395	50,174	52,290	66,798	59,238	55,213
재난방지	국가유산청	문화재긴급 보수사업	4,121	4,121	4,121	4,121	3,710	4,076
		문화재재난 안전관리	18,909	25,835	24,482	25,341	26,606	26,012
		궁능방재 시스템구축	11,757	16,137	14,689	15,233	16,464	16,336
	소계		34,787	46,093	43,292	44,695	46,780	46,424
합계		473,131	528,112	535,993	550,233	626,013	675,300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https://www.openfiscaldata.go.kr>, 검색일자: 2024. 11. 1.



3. 평가 개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어떤 성과를 얻고자 하는지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에는 다양한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지만, 2023년 심층평가에서는 그 사업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성과는 ‘문화재를 보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성과가 얼마나 달성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정량평가는 다시 첫째,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지불의사 측정과 둘째,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측정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지불의사 측정이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일반국민에게 정부가 행하고 있는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의 개요를 설명하고, 그러한 사업을 위해서 기꺼이 부담할 용의가 있는 세금 수준을 알아보는 것이다.

다른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측정은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앞에서 설명한 사업 부문 및 개별사업별로 투입된 예산액에 따라서 지역의 경제성과, 즉 총생산(GRDP),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등이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 더하여 지역의 경제성과를 나타내는 변수로 각 지역에서 밤에 얼마나 불빛이 밝은지(야간조도(夜間照度))도 추가하였다. 야간조도를 경제성과를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한 까닭은 경제성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총생산 통계가 2015년에서부터야 비로소 모든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생산되기 시작했고, 그마저도 최신 데이터가 전국 데이터처



럼 빨리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야간조도 자료는 1992년부터 수집되고 있으며, 선행 연구를 통해서 야간조도와 GDP 사이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자료의 완비성이 낮은 지역단위 총생산 자료를 대신할 수 있는 변수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른 한편 정성평가는 개별 사업별로 집행률을 점검하고 그것이 낮은 경우 그 이유에 대한 분석, 지역 간 자원배분의 적절성, 부처 간 중복 존재 여부, 국고보조율의 적정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사업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지원대상 단체 구성원)들과의 면담과 통계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4. 정량적 평가 결과

국민들이 문화재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은 월 약 2,000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전국 가구수와 12개월을 곱하여 연간 국민들이 지불하려는 금액은 5,400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최근 이 사업군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 규모, 즉 5,000억~6,000억원은 일단 적어도 아주 과도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부문별, 또한 8개 세부사업별 예산이 각 지자체별로 투입되는 액수가 그 지자체의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통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보수관리, 보존육성, 재난관리로 나눈 부문별 예산액은 지자체의 경제활동에 크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하게 세부사업별 예산이 지자체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는 이들 사업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지만 일부에서는 이론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과 합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예컨대 고도보존 및 육성 사업은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2년, 3년, 4년 후에 지역의 조도를 유의미하게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사업도 시행 후 3년차에 지역의 조도를 유의미하게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의 의미를 검토해 보자. 우선 보수관리 및 재난방지 관련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 사업들이 의도한 효과가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업들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문화재의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지역에서 문화재 향유와 관련된 경제활동이 이전과 비슷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문화재 보존육성 부문에 속하는 사업들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어느 정도 경제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 역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들 사업들이 지역의 문화재라는 자원을 신규로 형성하는 성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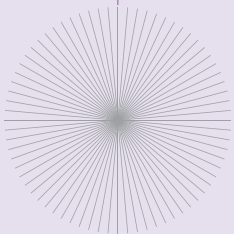
5. 정성적 결과

가. 집행률 문제

이 사업군에 속하는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경향이 있다. 우선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오랜 기간 평균적으로 8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별 사업 단위로 상세히 살펴보면, 사업예산 규모가 클수록 집행률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산액이 1억원 이하인 개별 사업 중에서 집행률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의 비율은 2023년 기준 17%이지만, 예산액이 1억~2억원 규모인 개별 사업 중에서는 그 비율이 33%이고,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비율이 40%를 넘었다. 또한 집행률은 문화재의 지정유형별로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집행률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개별 사업의 비율이 높은 유형은 국가등록문화재(48%)와 사적(35%)이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국가유산청이 조사하여 제공한 설문형태의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전문가 자문 이행에 따른 지연’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즉 집행률 80% 이하인 개별 사업의 1/3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그 다음으로 자주 언급된 이유는 ‘소유자의 변심’, ‘계약체결 지연 및 절대공기²⁾ 부족’ 등이다.

세계유산 등재 보존관리 사업의 경우에도 개별 사업의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집행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통계분석에 따르면 예산 규모가 1억원 증가하면 집

2) 계약당사자 간 계약상의 준수기간을 의미



행률이 0.27%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도 최근 7년 평균 실행률이 65% 정도로 낮다. 이 유형도 앞에서 언급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비슷한 이유로 집행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으나, 여기에 더하여 이 사업의 추진 절차상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대상이 동시에 재난안전관리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전자가 지체될 경우 후자도 함께 집행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들의 집행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첫째, 앞에서 본 것처럼 예산 규모가 높을수록 집행률이 낮고, ‘전문가 자문 이행’이 집행을 늦추는 주된 요인으로 가급적 보수정비 공사를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실 이미 2020년부터 집행률 개선을 위해서 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시행하는 기준이 되는 사업비 규모를 현행의 3억원에서 2억원이나 1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집행률이 특별히 낮게 나타나는 국가등록문화재와 사적은 예산 편성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국가등록문화재 관련 구체적 ‘표준수리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유산청이 등록문화재 표준시방서를 2010년에 작성·배포한 바 있으나, 그 내용은 일반적 사항만 기술한 정도이다. 그러므로 그 시방서를 구체적 사례 위주로 개선하여, 설계변경 단계 등에서 수리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적(事蹟) 관련 소유자의 변심으로 인하여 집행 부진이 다수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토지의 감정평가를 사업진행에 선행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적은 점(點)이 아니라 ‘면(面) 단위’ 문화재이기 때문에 사업진행을 위해서 토지매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때 그 매입가격을 놓고 토지소유자와 지자체 간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예산 신청 전에 감정평가를 먼저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업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재난안전관리 사업과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단계부터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목조문화재가 신규 지정될 경우, 사업예산 편성 전에 부서 간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나. 중복 문제

국가유산청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대상에는 사찰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또한 문화관광체육부가 행하는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사업은 사찰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업 사이에는 중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중복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복(重複)’을 개념적으로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중복이란 동일한 사찰에 두 부처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더 나아가 동일한 사찰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동일한 문화재나 부속건물에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사찰에 대해서 이루어지는가와 무관하게 사찰을 구성하는 요소 중 동일한 성격의 건물(요사채, 공양간, 종무원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중복 개념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중복의 개념을 적용하여 중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에 대해서 두 부처가 행한 개별지원 사업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기간 동안 두 부처 사업 중 어느 하나라도 지원 받은 사찰의 숫자는 267개였는데, 이 중 두 부처의 사업을 모두 지원받은 사찰은 162개, 동일 사찰 내 동일 부속건물에 대한 지원은 56건이었다.³⁾ 또한 사찰 중복 여부와 무관하게 사찰의 동일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루어진 지원을 살펴보면 요사채는 128건, 공양간은 90건, 종무원은 27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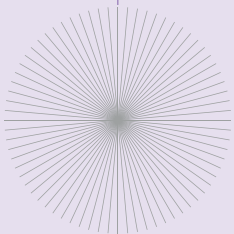
이같은 중복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사찰 내 문화재 및 그 문화재와 관련이 높은 시설물을 중심으로 국가유산청이 지원하고, 그 밖의 시설물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사찰시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종교시설(불전·강당·승당·종루·산문 등)의 경우,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문화재를 보호·수장하고 있는 시설 또는 문화재보호구역(단, 구체적인 구역의 범주·범위는 부처 간 상호 협의 필요)의 시설 등 문화재와 연관성이 인정되는 시설은 국가유산청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종교시설로 보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방안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이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상기 제시한 원칙을 기반으로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별 명확한 시설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관련 지침 및 지원계획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 국고보조율 합리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재 보수관리 사업군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 형태로 이루어진다. 국고보조의 적정한 보조율을 정하는 이론적 원칙은 사업의 편익이 국가 전체,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나누어지는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조율에 대한 검토가 특히 필요한 사업은 문화재 보존육성과 지역개발 사업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신라와 백제의 고

3) 예컨대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지붕보수는 국가유산청 사업의 지원을 받고, 내부보수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도인 경주, 공주, 부여, 익산 4개 시 지역의 지정지구에서 주거환경 개선(한옥으로의 신개축 등), 가로경관 개선, 역사문화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업의 혜택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사업에 참여한 개개의 자산 소유주에게도 개인주택의 가격 상승이라는 형태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이러한 가능성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를 지가(地價)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다음의 사실이 확인되었다. 첫째, 이 사업이 진행되는 4개 지역 사이 지가 상승률에 큰 편차가 존재한다. 경주의 경우 사업 구역에서 경주 전체의 주택가격 상승률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이지만, 다른 지역의 지가 상승률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둘째, 이러한 지가의 변화는 해당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 내에서도 지번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즉 사업의 영향을 받는 고도지역 내에서도 사업이 미치는 혜택의 크기는 가구별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사업의 영향 범위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고 사업대상 지역별, 가구별 혜택의 정도에 차이가 나는 사업이라면, 중장기적으로 국고보조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은 보조율 자체를 낮추는 방식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사업이 일정 단계 이상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완전히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예컨대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주택의 공사가 50% 이상이 마친 단계라면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과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원으로 분담하여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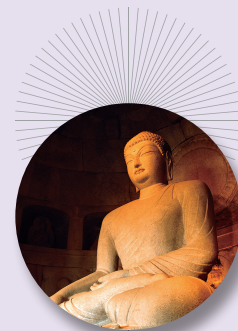
6. 맺음말

심층평가는 사업 시행 관련 상세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다 정밀한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여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설계와 시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 및 통계분석, 그리고 관련자 및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서도 개선 대안을 제시한다. 이 글은 심층평가를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군에 대해서 시행함으로써 얻은 결과를 요약하였다.

심층평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사업의 시행을 통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액수를 추정하였고, 이 사업군에 속하는 개별사업 중에서 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것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집행률 제고, 부처 간 중복문제 완화, 적절한 국고보조율 결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참고자료

이명현·김진영·박상곤, 『재정사업 심층평가: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열린재정, <https://www.openfiscaldata.go.kr>, 검색일자: 2024. 11.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안녕하세요, 김현아 주무관님.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소개와 주무관님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은 우리나라가 'K-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광분야 정책 개발 및 중장기 계획을 총괄·수립하여 관련 사업을 집행하는 국제관광과에서 저는 과 예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관광 분야 국제기구 협력 지원, 관광·항공 협력 및 환승관광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으신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및 방한 관광시장의 질적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 및 관광홍보 마케팅, 한국관광 통계 관리, 중국 전담여행사 제도 운영, 국제관광기구 협력 등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현아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주무관

자랑하고 싶은 사업의 주요 성과는 무엇일까요?

먼저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점점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는 점이 뿌듯합니다. 방한 외래관광객은 올해 9월 초에 이미 작년 수준(1,103만 명)을 넘어, 9월 말 기준 1,200만 명을 돌파(잠정)하는 등 높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별 회복률도 꾸준한 상승 추세이고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방한객 규모가 '19년 동기 대비

100% 이상 회복한 국가만 134개국입니다.

또한 더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을 찾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성과입니다. 기존 중국과 일본 중심에서 구·미주와 동남아시아, 중동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24년 8월 구·미주 방한 관광객은 '19년 규모를 넘어 109.7% 회복, 동남아·중양아·중동 지역 방한 관광객은 '19년 대비 97.9% 회복률을 보였는데, 이는 전체 평균 회복률 93.7%에 비해 높은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지역별로 다른 방한 관광 수요를 고려, 시장의 성숙도에 맞게 연령, 주제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밀착 마케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시장 성숙도에 따라 성숙(일본·중국 및 중화권), 성장(동남아), 신흥(구미주), 고부가(중동) 등으로 나누어 시장별 맞춤형 전략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 시장은 2019년 전체 방한객 규모의 45%까지 점유하기도 한 핵심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은 가장 늦게 해외여행이 재개되었으나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방한 관광시장의 조속한 회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관광 시장 규모가 매우 큰 시장이라서 단체관광객 재개에 맞춰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저가관광 방지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고부가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우수상품을 선정·지원하고 있습니다. 20~30대 젊은층 및 40대 소규모 가족여행 등 개별여행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 현지 온라인 여행사와 연계하여 유치 프로모션을 병행하면서, 개별관광객과 단체관광객의 수요에 맞게 차별화된 상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은 '23년 전체 방한객의 21%(232만명)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성숙시장입니다. 특히 한국을 찾는 일본인 3명 중 2명이 여성, 3명 중 1명이 20~30대 여성인 시장인데, 방한 수요 회복이 빠른 한류 팬층 및 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방한 홍보를 집중하는 한편, 미래세대·남성 등 일본 내 신규 방한 수요를 창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재방문율이 약 74%에 달하는 지역으로 재방문자 대상 특별 마케팅을 통해 지속적인 재

방문을 유도하고, 이들이 서울을 벗어나 지방 관광으로 동선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왔습니다.

동남아, 중동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아웃바운드 관광 회복이 매우 빠르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해외여행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신흥·잠재 시장입니다. K-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높아 이를 방한관광으로 전환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이들 지역의 중산층을 타깃으로 고부가 가족관광 상품 및 럭셔리 관광상품을 활성화시켜 고부가 전략시장으로 개척하고자 하였습니다. 구·미주시장은 2019년 전 세계 관광객의 64.8%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자 세계 관광지출 상위 10개국 중 7개국이 포함되는 고소비 지역입니다. 또한 원거리 관광객이 많아 체류기간이 길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미주 시장의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 재외동포, 비건, K-컬처 팬, 고소득 액티브 시니어 등 대상별 다양한 특성에 맞춘 마케팅을 추진하였고, 구·미주 방한관광객은 2023년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치를 달성하고 2024년도 8월 기준 이를 넘어 2019년 동기 대비 1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역별 종합적 마케팅과 함께 주요국 관광업계·미디어 팸투어를 진행하고 해외 주요 관광박람회에도 적극 참석하여 관광업계 네트워크 재건을 위해 노력했으며,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여 방한관광 회복 가속화에 힘썼습니다. K-관광 로드쇼는 세계적 한류 열기를 한국 관광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세계 주요 도시에서 잠재방한객과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한국문화·관광 체험(B2C)과 관광상품 판매, 기업 간(B2B) 상담회, 언론 홍보 등을 진행하는 대형 행사입니다. 지난해에는 도쿄 츠타야서점과 뉴욕 록펠러센터, 방콕 아이콘시암, 상하이 환치우강소핑몰, 로스앤젤레스 컨벤션센터 등 15개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주요국 대도시에서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K-관광 메가 로드쇼'를 개최, K-컬처와 연계해 한국 관광을 홍보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현지인들의 높은 관심을 방한 수요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2024년 25개 도시에



서 'K-관광 메가 로드쇼'가 개최될 예정이며, 9월까지 22개 도시에서 로드쇼를 개최, 현지 소비자 56만명을 대상으로 한국관광을 홍보했고, 국내·외 약 1,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관광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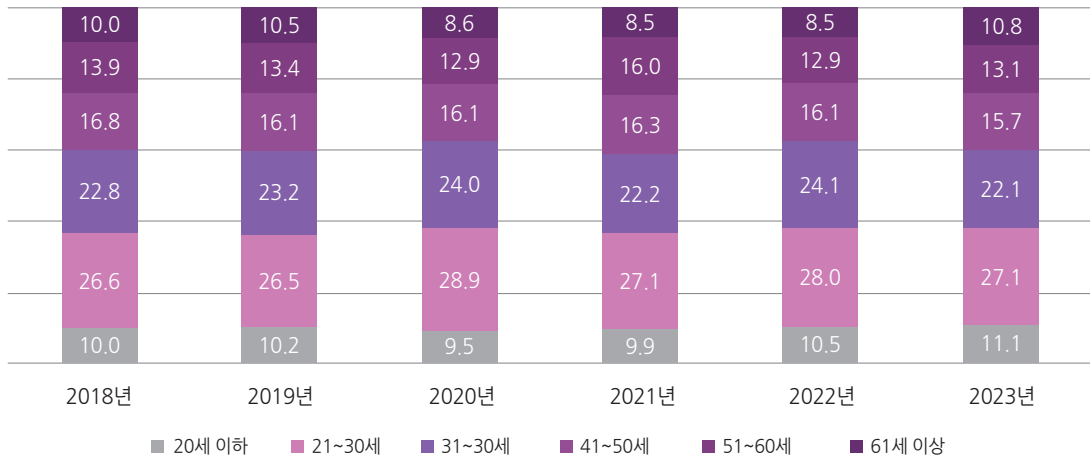
향후 동 사업의 발전 방향은 무엇이며, 더 나은 사업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 이후로 국제관광 트렌드는 큰 변화를 보였습

니다. 관광 형태는 단체 관광에서 개별 관광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으며, 그리고 체험 위주 관광 선호가 등장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은 점점 젊어지고 있고, 단체보다 개별관광객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2023년 외래관광객 중 20~30세대의 비중이 절반(21~40세, 49.2%)에 육박했고, 개별관광객 비중이 84%에 이르는 등 통계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한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그림 1 | 연령별 입국자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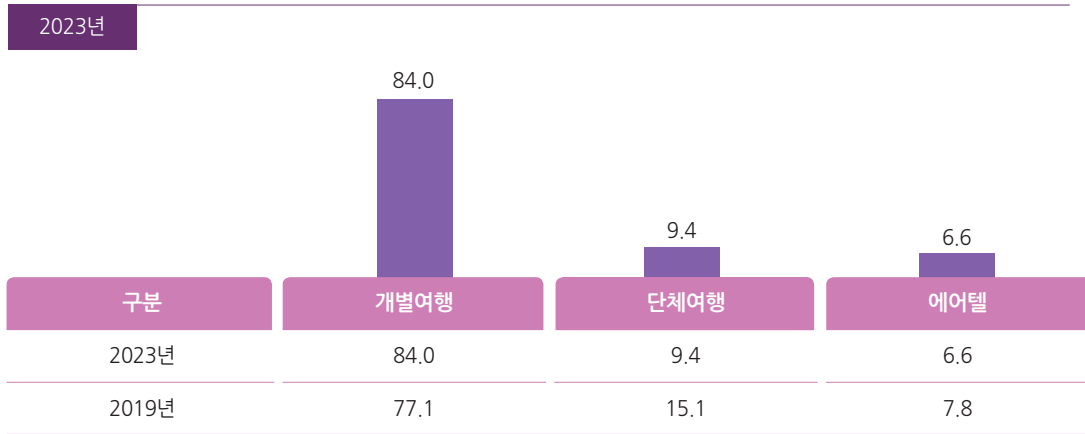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2023 외래관광객 조사」

그림 2 | 2023년 외래관광객 여행 형태

(단위: %)



자료: 「2023 외래관광객 조사」



유명 관광지(destinations)를 중심으로 면세점 쇼핑을 즐기고 명소들을 관람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요즘은 현지인처럼 체험(experiences)하는 것을 중심으로 쇼핑물·로드샵 등 로컬쇼핑을 즐기고, 미식·미용·의료 등 특별한 활동을 직접 해보는 것을 선호하는 식입니다. 방한 관광에서도 K-콘텐츠 인기에서 파생된 K-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다양한 체험 수요가 확대된 것이지요. 예를 들면 한강에서 라면을 끓여먹거나,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는 것과 같은 체험을 즐기는 방한관광객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러한 외래객들의 체험 수요는 기존의 방한 관광 진흥 사업에서 주요 파트너였던 방한여행사나 대형면세점만으로는 충족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외래객들은 더 많은 체험 콘텐츠를 원하고 있고요. 즉 관광서비스 제공주체가 단순히 여행사뿐만 아니라 의료, 뷰티 등 다양한 서비스 업체나 소비재 기업, 온라인여행사(OTA) 등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 소비재·서비스 기업들과 연계해, 체험형 방한 관광상품의 기획·개발을 지원하고, 이들이 해외 현지에서 전방위적인 방한 마케팅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5년에는 체험형 관광상품을 통해 외래객 유치에 관심이 있는 국내 기업들과 함께, 중화권, 일본, 아시아·중동, 구·미주 4개 권역을 각각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현지 특성을 고려한 마케팅 컨설팅과 해외 현지 판촉 홍보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체험 관광 지원을 통해 민간의 외래관광객 유치 역량이 강화되고, 외래객들의 체류 기간 및 지출액이 확대되어 관광수출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는 2024년 외래관광객 2천만명, 2027년 외래관광객 3천만 시대 개막을 목표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일본과 같은 주요 핵심시장의 외래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래관광객 수 증대라는 양적 성장 외에도 체류기간 확대, 관광지출액 상승, 방한국가 다변화 등을 목표로 방한시장의 질적인 상승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전염병, 전쟁 등 국가별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요인

그림 3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및 홍보지점 현황

지역	해외지사 주재 도시	개수
일본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3
중화권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양, 청두, 우한, 홍콩, 타이베이	8
아시아-중동	방콕,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하노이, 자카르타, 마닐라, 뉴델리, 두바이, 이스탄불, 알마티, 울란바토르	11
구미주	뉴욕, 로스앤젤레스, 토론토, 프랑크푸르트, 파리, 런던,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 시드니, 멕시코시티	10
계		32

지역	홍보지점 설치 도시	개수
아시아-중동	타슈켄트, 리야드, 도하	3
구미주	시카고, 밴쿠버, 밀라노, 스톡홀름, 바르샤바, 상파울루, 오클랜드	7
계		10

자료: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의 영향에 따라 국제관광이 얼마나 큰 변동을 보일 수 있는지 저희는 경험했습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지속적인 시장 다변화를 통한 위험 요소 해소 및 관광시장의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구미주와 아·중동 시장의 중요성 더욱 커졌습니다.

더 다양한 나라의 외래관광객이 한국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주요 대형 행사들을 방한 홍보계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7~8월에는 2024년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현지에서 한국관광 홍보관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고, 2025년에는 APEC 정상회의 한국 개최, 오사카 세계박람회 등과 연계하여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과 판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한관광시장의 다변화 달성 및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신시장 개척이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는

23개국 32개소 분포해 있습니다만, 그 외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부재 지역에서도 현지 홍보대행사를 활용하여 홍보지점을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신시장 개척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는 10개 지역에 홍보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우리나라 관광수출은 약 207억 달러로 서비스 산업 중 유일한 5대 수출산업*에 해당하였던 만큼, 내수활성화와 수출에 있어 관광산업은 매우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관광수출의 확대를 위해서 외래관광객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관광 지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고부가 관광상품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교육여행 활성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여행은 외국 국적의 유학생뿐만 아닌 예비 유학생, 교환학생, 단기 연수 근로자,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상품으로, 체류기간이 길고 소비 금액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하여 친지·친구의 방문을 유도하는 등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교육부와 협업을 통한 교육여행을 홍보에 힘쓰고자 합니다.

* 수출액('19년, 억달러): ① 반도체(939) ② 자동차(430)
③ 석유제품(407) ④ 자동차부품(225) 순

이번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해당 사업이 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 등급을 받게 된 성과 관리 요령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의 2023년 성과 지표는 3대 전략시장 방한 외래객 수입입니다. 3대 전략시장은 비중국 중화권, 일본, 아·중동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지표는 기존 중국 중심의 방한관광시장 구조를 탈피하여 인바운드 관광산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정된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의 '23년 목표치는 450만명이었으나, 실적치로는 638.1만명을 기록하여 달성률 141.8%로 초과 달성하였고, 감사하게도 해당 사업은 이번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연초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항공노선 현황, 세계 관광정책 현황, 전년도 관광 통계 등을 고려하여 국가별 외래관광객 전망치를 산출하고, 이를 참고하여 목표치를 설정합니다. 2023년 초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제관광이 아직 위축되어 있었지만, 방한관광시장의 조기 회복과 재도약의 의지를 담아 외래관광객 1,000만명, 그중 3대 방한전략시장 외래객 450만명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023년의 외래관광객 유치 전략은 ▲주력시장(일본, 대만)의 수요 집중 회복 ▲중남아·구미주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한 시장 다변화 ▲중국 관광재개 즉시 수요 선점 추진으로 설정되었고, 그 결과 2023년 외래관광객 1,103만명을 유치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연중에는 주기적으로 주요 국가별 권역별 외래관광객 통계를 확인하여 목표 달성 현황을 점검하고 어떤 사업이 효과적이었으며, 어떤 사업의 효과가 부진하여 개선이 필요하지 파악합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해

외지사를 통해 주재국 관광정책·아웃바운드 관광 동향과 각종 로드쇼, 팸투어 등 구체적인 행사나 사업의 계량 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반 환경과 해외 사례 정보를 수집하고 사업 추진 방향에 환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종료 시기인 연말에는 종합적으로 각 상사사업의 실적과 외래관광객 유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체시장의 점진적 회복이 예상되는 2024년에는 중국인 방한관광객 유치 목표를 상향 설정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직접 국제관광 동향과 관광업계의 목소리 등을 찾아 듣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아오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문체부와 보조사업 기관의 사업담당자들의 노력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진행하시면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아쉬웠던 점이 있을까요?

관광산업은 매우 유동적입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환율, 전쟁 등 전 세계적 혹은 국가별 경제적·정치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항공 노선, 출입국 제도 등 타 부처 소관 제도와 연관되어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외래관광객 유치 실적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사업 외적 요소로 인한 영향과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각각 계량적으로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과지표 실적이 우수하지 못한 때에는 순수한 사업의 효과성만을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외국인의 방한관광은 연관 산업의 활성화, 한국 국가이미지 상승 등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청



안녕하세요, 이정목 연구관님.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연구관님께 사 담당하고 계신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2012년 탄생한 도시로서, 현재까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를 포함한 47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했고,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우리나라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16개 주요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했습니다. 최근에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를 통해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22년 시정 4기를 맞이하여 행정수도 완성과 더불어 자족기능을 확충하고자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비전으로 교육발전특구 및 사이버보안 기회발전특구, 한글문화단지 및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국회세종의사당 세종 이전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2024 정부합동평가 특·광역시 종합 1위('24. 4.), 2024 균형발전사업 시도평가 전국 17개 시도 중 1위('24. 11.) 등의 성과도 달성하였습니다.

저는 세종시에서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시대 종합계획(세종특별자치시 발전계획) 및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세종시 발전계획)은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에 대한 종합계획이자 5년 단위의 중기계획으로서,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세종시 비전 및 목표, 분야별 사업 등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균형발전·자치분권을 총괄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있고, 각 시도에도 시도별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평가·모니터링, 세미나·포럼 등 개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한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이정목
세종특별자치시청
연구관

평가 업무도 맡고 있는데, 올해까지 3년 연속 균형발전사업 시도평가 1위 및 5년 연속 균형발전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도 이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 관련 조사·연구·계획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업무를 통해 2019년에는 세종시 생활SOC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년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로의 인구 유입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고, 올해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계획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세종시 생활SOC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량적 지표를 활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활용한 이유와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들이 사용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계획을 추진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과연 세종시는 각 지역에 알맞게 생활SOC 시설을 공급하고 있는가?, 분야별·지역별로 부족한 시설은 무엇이고, 혹시 중복되거나 과잉되는 시설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면밀한 현황 분석을 통해 필요한 시설을 도출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생활SOC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시 생활SOC 관련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세종시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에 필요한 시설을 도출하고자 하였고, 계획 수립 과정 중에 주민 설문조사 등도 함께 포함하여 정량적인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였습니다. 본 계획 수립 과정의 특성상 객관적 지표를 생성하여 활용하고

표 1 | 생활SOC 분석 지표

분야	시설	시설 세부 항목	시설 수	
문화체육	공연문화시설	공연시설	공연장, 기타공연시설	15
		전시시설	박물관, 미술관	
		종합시설	문화예술회관	
	주민교류시설	생활문화센터, 복컴 주민프로그램실		15
공공체육시설	간이운동장, 생활체육관, 구기체육관, 축구장, 야구장, 수영장, 테니스장, 전천후게이트볼장, 롤러(인라인)스케이트장, 기타체육시설		132	
교육	도서관	공립도서관, 작은도서관	14	
	유치원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61	
	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	49	
보건복지	보육시설	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358	
	노인여가복지시설	복컴 노인문화센터, 노인대학	15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3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	12	
	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1	
	공공보건시설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	19	
국토 (교통복지)	도시공원	국가도시공원	124	
		생활권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주제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53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내부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자 하였고, 그 결과 문화·체육·복지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 위주로 도시공원, 공연문화시설,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등 총 14종의 지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분석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우선 기존에 활용되던 다양한 지표를 찾아보았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활용되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기준, 「국토기본법」에 의거한 국토지표, (구)「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한 (지역)균형발전지표 등을 검토하였고, 이러한 지표들의 검토를 통해 세종시 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표를 도출하였습니다. 기존 활용되던 지표를 검토하며 각 지표에서 의미하는 시설의 범위 등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통일된 지표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유아교육법」, 「도서관법」 등 각 시설별로 법령을 참조·검토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

로 세부지표 및 지표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세종시 생활SOC 계획에서 활용된 지표가 기존 지표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얻은 주요 분석 결과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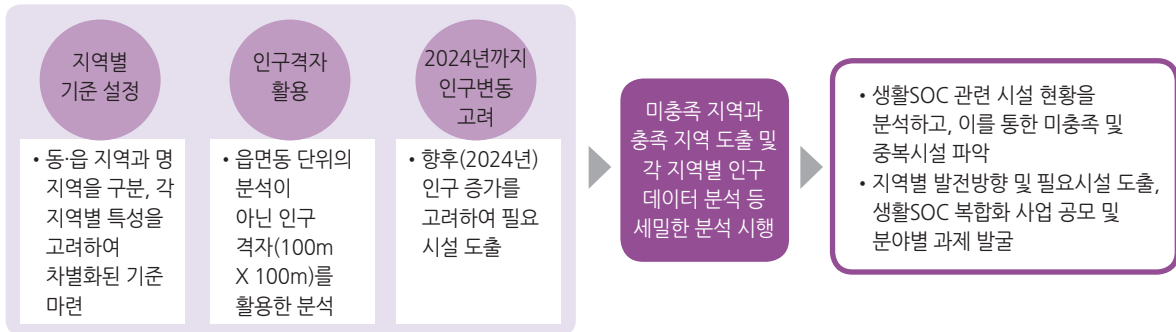
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점은 면(농촌) 지역과 동(도시) 지역은 양적·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기준 등 기존 지표를 검토했을 때에는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간의 차별화된 기준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은 생활환경, 인구구성 등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동일한 기준에 의거하여 분석하는 것이 아닌,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세종형 생활SOC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

표 2 | 생활SOC 지표 및 시설별 접근성 기준

시설	세부 항목	접근성 기준	
		동·읍 지역(km)	면 지역(km)
공연문화시설	공연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1.76	7.72
주민교류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주민 프로그램실, 생활문화센터 등	읍면동별 1개소	
공공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1.49	6.20
도서관	도서관(공립, 작은)	1.59	7.06
유치원	유치원	0.88	3.50
초등학교	초등학교	0.93	3.55
보육시설	어린이집	0.45	3.51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교실, 노인문화센터	2.03	9.29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초등 아동 300명 이상 읍면동별 1개소 (공동육아나눔터 기준에 따름)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	미취학 아동 300명 이상 읍면동별 1개소 (생활SOC 복합화 시설별 가이드라인)	
병원	병원	1.6	12.22
공공보건시설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	2.00	3.44
도시공원	도시공원(생활권공원, 주제공원)	0.72	5.74
주차장	주차장(노상, 노외)	1.1	6.14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내부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그림 1 | 분석 개요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내부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를 활용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차등화된 접근성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시 지역은 균형발전 선도도시로서 세종시 위상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서울 및 수도권 이상의 양질의 생활SOC 시설 공급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그래서 국토모니터링 보고서상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접근성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농촌 지역은 기존 농촌 지역(군·지역) 중 세종시 면 지역과 면적이 유사하고 비교적 시설이 잘 구성되어 있고, 1인당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도 전국 최고 수준(7,629만원, 2019년)을 자랑하는 ‘충북 진천군’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종형 생활SOC 공급 기준을 설정했다는 점이 타 생활SOC 계획 및 기존 지표 분석 등과 크게 차별화되는 면이라 생각하고, 국내의 수많은 도농복합도시에 충분히 적용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읍면동 단위의 분석이 아닌 100m×100m 표준화된 인구 격자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접근성 충족 지역과 미충족 지역 도출 및 각 지역별 인구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행정경계를 넘어선 세밀한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시사점으로는 인구 격자 데이터를 활용한 덕분에 신규 추가 시설 설치 입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고, 시각적으로도 시설이 필요한 지역이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면을 제시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농촌 지역이 오히려 시설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 지역에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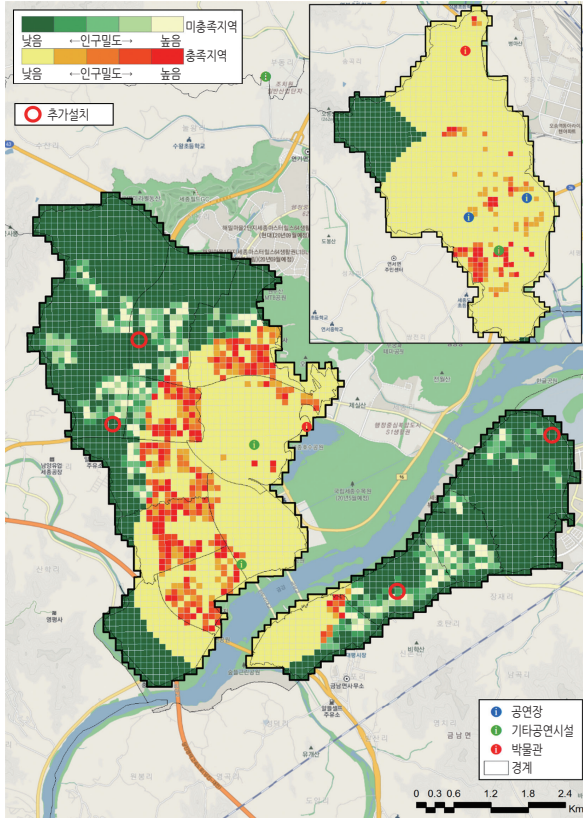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또한 어떤 부분에서 연구의 한계점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지표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자료 구득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신화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었고, 법적인 기준에 의한 명확한 데이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각 부서를 통해 자료를 받고, 그것을 여러 루트를 통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시설의 규모나 이용 정도를 반영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시설이 어디, 얼마나 위치하고 있느냐도 생활SOC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각 시설의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이용인원 혹은 이용행태는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계획이 달라질 텐데 그러한 점을 계획에 반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애초에는 시설의 규모, 이용행태 등을 분석하여 중복시설은 없는지 까지 계획 범위로 놓고 도출하고자 했는데, 중복 시설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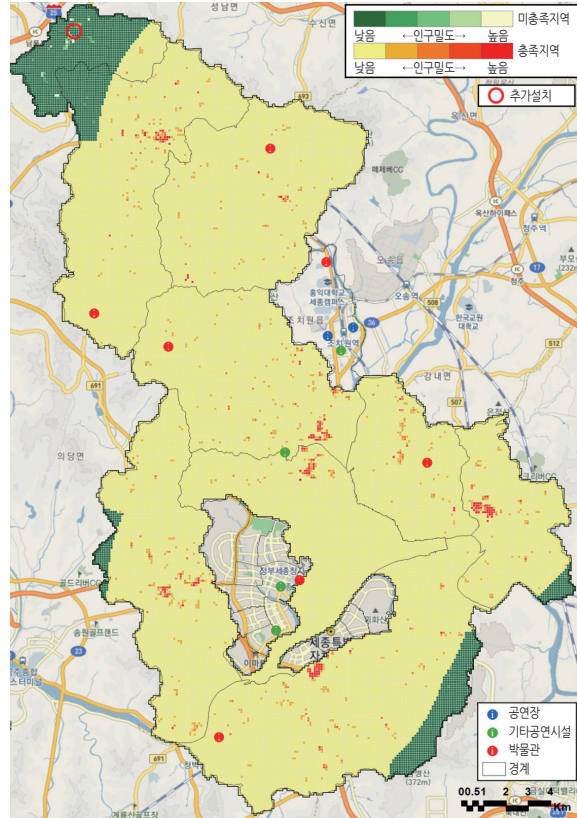
그림 2 현황분석 결과(공연문화시설)

<동읍 지역 현황분석 결과>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내부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면 지역 현황분석 결과>



석 및 파악은 향후의 과제로 남겨 두게 되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추후에는 빅데이터 허브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와 연계한 데이터 구축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자 거주지역, 성별, 시간대, 이용자 수, 세부이용시설 등 기존 시설의 이용자 현황 데이터를 구축하여 신규 시설의 규모, 시설의 구체적인 위치 설정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는 빅데이터 허브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패턴 구축, 인구 분석, 세종 축제 분석, 공공자전거 어울링

분석 등의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서관, 체육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시설별 이용자 현황과 관련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빅데이터 허브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세종시에 필요한 시설을 적재적소의 위치와 적절한 규모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생활SOC 계획 수립을 통해 얻은 경험을 앞으로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이번 계획수립을 통하여 세종시 내 생활SOC 시설 현황이 어떠한지 정량적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앞으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 내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SOC 관련 시설을 공급할 때 본 계획을 활용하여 세부적인 공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는 균형발전·자치분권 분야에서의 중기계획이자 종합계획이라 할 수 있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세종시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생활SOC 5개년 계획 수립 결과를 바탕으로 세종시 발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였고, 앞으로도 정책수립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한편 본 계획에서 사용한 분석 기법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토지표 활용 가이드북에 대표적인 활용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북에서는 일률적인 생활SOC 목표가 아닌 각 지역이 추구하는 생활인프라 목표를 설정하여 총족/미충족 지역을 확인·분석하고 데이터 기반의 생활SOC 계획을 제안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국토지표 활용 가이드북을 통해 본 계획 분석기법을 많은 시군구에서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등을 수립할 때 활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본 계획은 법적인 계획이 아니다 보니 지속적으로 계획이 보완되거나 생활SOC 시설 관련 데이터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생활SOC 시설 관련 데이터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빅데이터 등과 연계한 시설 이용패턴 연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앞으로 다양한 생활SOC 시설을 공급 또는 개선할 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안녕하세요, 김수찬 사무관님.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소개와 사무관님이 담당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는 1948년 11월 문교부 문화국, 공보처의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의 명칭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2008년 2월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사무는 「정부조직법」 제36조에서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업무는 대통령령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의 진흥, 국민의 문화복지 구현,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육성, 국민체육의 진흥, 건전 종교활동 지원, 국정에 관한 홍보 지원 등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세출 예산·기금의 규모는 약 7조원에 이르고,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31개의 다양한 분야의 소관 공공기관과 함께 '국민 일상과 지역에서 누리는 문화,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콘텐츠·관광·체육 산업 육성, K-컬처 확산' 등의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콘텐츠정책국에서는 각 부서마다 다양한 콘텐츠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인력양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외에도 콘텐츠정책국 대 국회 업무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수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담당하고 있으신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의 명칭인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은 사업목적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인데, 콘텐츠산업의 생

표 1 콘텐츠 인재캠퍼스(서울 홍릉)

· 시설 개요

구분	면적	주요 시설
1층	1,871m ²	사무실, 회의실, 시제품제작실, 버추얼라이브러리 등
2층	1,808m ²	프로젝트 공간, 스튜디오(사운드·편집·그래픽·종합제작 등)
3층	2,133m ²	프로젝트 공간, 강의실(소·중·대) 등

· 공간 세부 구성

공간	면적	용도	주요 시설·장비
종합제작 스튜디오	200.4m ²	특수영상 제작	크로마키, 카메라, 조명, 모션캡처 장비 등
사운드 스튜디오	63.6m ²	녹음	마이크, 콘솔 등 리코딩 장비
편집 스튜디오	63.6m ²	영상편집, 스티칭 등	워크스테이션 등
시제품제작실	187.7m ²	하드웨어 제작	3D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CNC 등
버추얼 라이브러리	207.2m ²	미디어파사드 시연, 모션캡처 등	버추얼 프레젠테이션 시스템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역량 있는 콘텐츠 창작·제작 인력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여 우수한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시설 및 장비가 구축된 '콘텐츠인재캠퍼스'와 콘텐츠 기업을 위한 입주공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인력양성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은 201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본격 추진되었는데, 콘텐츠 분야 정상급 전문가(멘토)와 창의교육생(멘티)이 1:1 도제식으로 상담하여 청년 인재의 창작 능력을 계발하고 콘텐츠 산업계 진출을 지원하는 예비 창작자 육성 사업입니다. 멘토로 참여하는 전문가는 해당 분야 10년 내외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로, 베테랑 극작가, 영화 제작자, 감독, 게임 개발자, 웹툰 작가, 작곡가, 무대 연출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분들이 다수 참여하였습니다. 매년 300~400명의 창의교육생(멘티)은 전문가-창의교육생 간 1:1 도제식 교육인 '멘토링', 전문가와 함께하는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전문가 특강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2023년 신규로 추진한 '신기술콘텐츠융복합아카데미'는 디지털기술(인공지능, 3D프로젝션맵핑, VR, AR, MR, XR, 4DX 등) 기반 콘텐츠산업 현장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전 과정을 리드할 수 있는 융합형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디지털기술 기반 실무 인력을 비학위과정(1년+1년)으로 운영하는 장기과정과 장르별 프로젝트 중심(6개월)의 단기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과정의 경우 콘텐츠산업의 이해 및 신기술트렌드 등 '공통교과'와 실시간 엔진 기반 콘텐츠 제작 중심 '기본교과', 버추얼프로덕션/가상시각화/인터랙션기획/이머시브 공간 등 '모듈별 심화교과'로 운영 중이며, 단기과정은 영상·음악·전시·체험형콘텐츠 등 장르별 콘텐츠와 기술을 융합한 프로젝트 레벨업과 결과물 도출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팀 단위 전담 도우미를 연결하여 멘토링 및 컨설팅 등의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직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직무교육, 열린 세미나 등으로 이루어진 '콘텐츠 현업인 재교육', 국내 유일의 콘텐츠 전문 온

표 2 | 2023년 콘텐츠 창의인재등반사업 멘토링 과제(16개)

번호	플랫폼 기관명	멘토링 과제명
1	주식회사 젤블로컴퍼니	K-보드게임 국내외 마켓 진출 및 커뮤니티 확대 프로젝트
2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인디 게임 개발자 양성 멘토링
3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LEVEL UP Together Next step-게임 산업 전문 멘토들과 함께 성장하는 게임 전문 멘토링 프로그램
4	재단법인 춘천인형극제	인형극 창작예술가 양성 및 극단 창단을 위한 인형극학교
5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KSWA 확장가능형 원천 IP 개발 프로그램
6	사단법인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넥스트 제너레이션 영화영상 창작자 양성 사업
7	주식회사 알비더블유	K-pop 콘텐츠 크리에이터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8	주식회사 이오엔터테인먼트	영화/드라마 IP 실용 산업화를 위한 인터랙티브 도제식 멘토링 프로젝트 S.4(시즌.4)
9	에이치제이컬쳐 주식회사	"Make a Creative" 우수 공연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젝트
10	사단법인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크로스오버 애니메이션 창작인력 육성 프로젝트
11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K-Pop 리소스 제작 문화기술 인재 양성
12	씨엔씨레볼루션㈜	콘텐츠IP의 'IP코믹스'를 선도하는 웹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양성과정
13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Into the Creation!_2023>
14	(주)모스트콘텐츠	글로벌 K-Drama OST 기반 융합콘텐츠 인재 육성
15	서울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방송분야 K-콘텐츠 레벨업 멘토링
16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	K-그림책 창작자 양성 사업 - "장애와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K-그림책을 JOB하라!"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3 | 2023년 신기술콘텐츠융복합아카데미 업무협약체결 기관

	기관명	주요 협력내용
콘텐츠분야 활용 기술 선도기업	1 에픽게임즈 코리아	1) 장기과정 공동/기본교과 교육과정 개발/운영 협력 및 강사 추천 2) 단기과정 기본교육 교과 개발/운영 협력 3) 수료증 취득 교육과정 제공 등
	2 유니티 코리아	
	3 한국마이크로소프트	
	4 한국어도비 시스템즈	
신기술콘텐츠분야 선도기업 및 종합콘텐츠기업	5 넥슨코리아	1) 장기과정 공동교과 교육과정 개발/운영 협력 2) 단기과정 교육 강사진 참여 3) 교육과정 내 자사 IP 활용지원 등
	6 컴투버스	1) 장기과정 공동교과 교육과정 개발/운영 협력 2) 단기과정 교육 강사진 참여 3) 교육생 메타버스 공간 제공 등
	7 디스트릭트	1) 장기과정 심화교과 교육과정 개발/운영 협력 2) 단기과정 교육 강사진 참여 3) 장기과정 2년차 교육 협의(인턴십 등) 4) 기업보유 시설/장비 연계 교육 운영 등
	8 로커스	
	9 비브 스튜디오	
	10 위지윅 스튜디오	
신기술콘텐츠분야 유관 교육기관	11 KAIST 문화기술대학원	1) 교육과정 개발/홍보/운영/사후관리 협력
	12 한국예술종합학교	2) 장기과정 2년차 연계 마이크로디그리과정 개설 협력 (KAIST 문화기술대학원, 한예중)
	13 한성대학교	3) 아카데미 단기과정 참여 프로젝트 가점 제공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라인 교육 서비스인 '사이버콘텐츠아카데미', 대학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교육 협력체계(컨소시엄)를 구축하여 학생들은 프로젝트와 연관된 정규교과목을 이수하며 이론적 토대를 다지고 현장실습 지원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콘텐츠원캠퍼스 구축 운영'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달성한 주요 성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요 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업은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인데요, 지난 12년간(2012~2023년) 분야별 전문가 1,766명이 참여해 창의인재 3,253명을 지도하였으며, 공모전 수상 실적과 작품 계약, 창작자 데뷔, 투자유치 등을 성사시키는 등 콘텐츠 분야를 이끌 젊은 인재들

을 대거 배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창의인재동반사업에 참여한 김익현 창의교육생이 집필한 시나리오 <이름에게>는 전문가와 창의교육생들이 협업하여 연출과 촬영 작업을 진행하여 2024년에 개봉할 예정이며, 이주민 창의교육생의 그림책 <주민이의 동네 한 바퀴>는 2023년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성과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완료하였고, 배보영 창의교육생은 JTBC 드라마 <킹더랜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ST) 12곡을 작곡하는 등 교육생들이 다양한 콘텐츠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 <파묘>의 감독을 맡은 장재현(2013년 창의교육생),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시나리오를 담

표 4 | 2023년 콘텐츠원캠퍼스 구축 운영 프로젝트(17개)

주관기관명	프로젝트명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AI 이미지 딥러닝과 게임 엔진을 활용한 트랜스미디어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3D 항공 디지털트윈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목포근대역사문화유산(목원동)' 실감형콘텐츠 제작 융복합 인재 양성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인공지능 생성 캐릭터를 활용한 메타버스 기반 실시간 모션캡처 공연 콘텐츠 인력 양성
한국영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웹툰콘텐츠 기반 공공문화 향유를 위한 지역 메타버스 구축 창의인재 양성
서울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AI 기술과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오디오북 콘텐츠(3D사운드 오디오 드라마) 창작 인력 양성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XR콘텐츠를 위한 버추얼 인플루언서 개발 인력 양성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3D 기술을 활용한 가상 세계 콘텐츠 구현 및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AI 언어모델 챗봇 활용, XR 실감공연 창제작 및 미래형 공연 인재 양성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인공지능 웹툰 제작 프로세스 진행 전문인력 양성(AI 이현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신구대학교 산학협력단	메타버스 패션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버추얼 휴먼 및 의상 제작 융복합 교육 과정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실감형 미디어아트 분야 인력 양성 / 꽃과 빛의 몽환적 판타지 "천국, 서천꽃밭"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인공지능이 담은 어르신들의 영상자서전' 콘텐츠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AI 웹툰창작 기반 <백제금동대항로 오악사(五樂師)> 실감미디어 융합교육 프로그램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디지털휴면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의 실사 혼합 XR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시선추적-음성-모션 기반 상호작용형 피내주사 간호술 XR 콘텐츠
차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 문제 해결형 XR 기능성 콘텐츠 제작 및 행복 증진 헬스케어 융합 인재 양성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융합테크 교육을 통한 스포츠-메타버스 공연예술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1 콘텐츠 창의인재등반사업 수료생의 주요 작품

			
<p>장재현 감독 (13년) 영화 <파묘> 1,180만 관객 영화 <검은사제들>, <사바하>(19) 등 감독</p>	<p>문지원 작가 (13년)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넷플릭스 20개국 1위, 본방 시청률 17.5%</p>	<p>이신화 작가 (13년) 드라마 <스토브리그> 제56회 백상예술대상 작품상, '21년 APAN 스타어워즈 작가상</p>	<p>김민석 작가 (16년) '22년 넷플릭스 <소년심판> 드라마 데뷔작 '22년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극본상' 수상('22년)</p>
			
<p>조유진 작가 (14년) 영화 <파일럿> 400만 관객, 드라마 <카시오페아> 각본 등</p>	<p>김경배 감독 (19년) 애니 <아멘 어 맨> 캐나다 판타지아 국제영화제, 곤 사토시 상 등 수상</p>	<p>홍준표 감독 (16년) 애니메이션 <태일이> '22년 안시국제애니영화제 특별상, 판타지아국제영화제 관객상, 서울인디애니페스트 대상</p>	<p>한정석 작가 (12년) 뮤지컬어워즈 극본상 수상 ('13, '15년)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계셔>, <쇼맨_어느 독재자의 네 번째 대역배우></p>
			
<p>최향용 감독 (16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고요의바다>(21년) 주연 공유, 제작 경우성 대한민국 첫 SF드라마</p>	<p>조병형 작곡가 (18년) OST <재벌집 막내아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결혼작사 이혼작곡> 등</p>	<p>유민호 작곡가 (19년) OST <기상청사람들> <경찰수업>, <지리산> <경우의수>, <공작도시> <동백꽃무렵>, <녹두전></p>	<p>안수민 작가 (19년) <견우와 선녀> 네이버 웹툰 일본, 중국, 태국 연재 매출: 10억원 이상 누적 조회 수, 구독자 3,500만명</p>
			
<p>채용택 작가 (13년) 네이버 웹툰 <부활남>, <참교육>, <하우스키퍼> 웹툰 세계관 '슈퍼스트링' 중 최고 조회수, '블루스트링' 총괄 PD</p>	<p>성일모 작곡가 (19년, 20년) 넷플릭스 <D.P.> 구교환, 정해인 주연 OST 작곡 및 세션 참여</p>	<p>김경희 작곡가 (19년) OST <눈물의 여왕>, <그 해 우리는>, <사랑의 불시착>, <환혼>, <사이코지만 괜찮아></p>	<p>박지윤/우현주 작가 (20년) 미디어아트 디스트릭트 아르떼뮤지엄 - 시공을 초월한 자연 - Night saferi, flower</p>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당한 문지원(2013년 창의교육생),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의 극작·작사를 담당한 한정석(2012년 창의교육생), 〈스토브리그〉의 이신화(2013년 창의교육생), 애니메이션 〈태일이〉의 감독 홍준표(2016년 창의교육생) 등처럼 방송, 음악, 웹툰,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뷔하거나 프로젝트 상업화에 크게 성공하는 등 K-콘텐츠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콘텐츠 생태계 조성 사업의 발전 방향은 무엇이며, 더 나은 사업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K-콘텐츠의 전 세계적 성공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우수한 제작 역량을 갖춘 인적자본이 축적되어 이룬 성과로 볼 수 있는데, 글로벌 콘텐츠산업은 경쟁이 심화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적 역량 수준 역시 높아지고 급격한 디지털 기술변화에 따라 기업의 숙련된 디지털 신기술 전문인력 수요 지속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콘텐츠 산업의 성장 및 K-콘텐츠 확산 지속을 위해서 상상력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양성, 신기술과 콘텐츠를 연계한 융복합 콘텐츠 제작 인재양성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콘텐츠산업 현장의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주요 기업·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한 현장 수요 맞춤형 교육을 지

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와 성과관리 요령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의 인력양성 사업의 성과지표는 ‘교육만족도’입니다. 인력양성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교육에 대한 개선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할 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수혜자 면담 등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성과지표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 수요생의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사업화 지원을 함께 하는 것도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로 교육만족도는 '22년 90.9점, '23년 91.1점으로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로 나타나는 사업의 성과 외에,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의 경우 짧게는 1년 내외에서 길게는 10년 내외 경과 후 흥행작이 나타나며 중장기에 걸친 인력양성 효과를 거두고 있고 교육생으로 사업에 참여한 이후 창작물과 경력이 누적되며 멘토로서 사업에 재참여하는 사례가 존재해, 인력양성의 선순환 모델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PART

III

재정성과관리 NOW

재정성과관리 NOW 파트에서는 국내외 기관의 성과관리 동향과 성과 관련 주요 연구결과들을 모아 소개한다.

미국에서는 감사원(GAO)을 통해 연방기관의 부적정 지출 및 증거기반 정책에 대한 보고서가, 영국 감사원(NAO)에서는 일반 보조금 제도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아일랜드에서는 공공지출개혁부의 2023년 공공 서비스 성과보고서, 재무부의 '인구 고령화와 공공 재정'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호주 감사원은 2022년과 2023년 성과보고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성과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 정확성 등을 확인하였다.

성과 관련 연구와 관련하여 해외에서는 전략적 계획의 사용자 수용성, 성과정보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가, 국내에서는 성과관리 활동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국가계약 분야에서는 미국과 세계은행 등 해외 관련 동향과 조달청이 발표한 국내 동향을 살펴보았다.







미국

2024. 6., 미국 감사원(GAO)

연방기관의 부적정 지출

Improper Payments:
Key Concepts and
Information on
Programs with High
Rates or Lacking
Estimates



→ 작성자 | 권선정 선임연구원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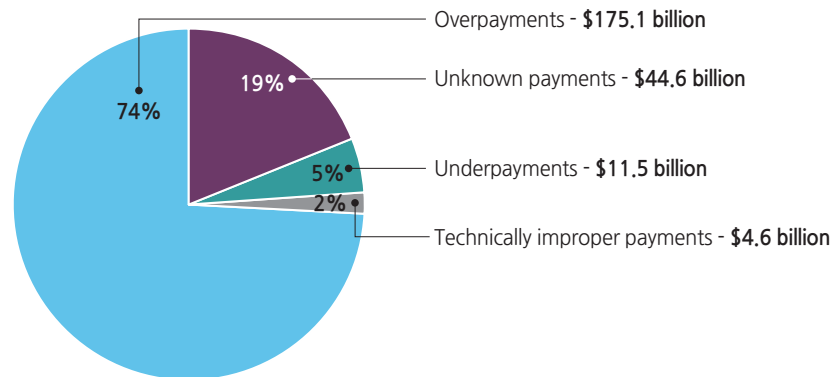
회계연도 2023년도에 연방기관은 부적정 지출로 약 2,360억달러를 보고했다. 부적정 지출이란 지급되어서는 안 될 지출, 잘못된 금액으로 지급된 지출 또는 충분한 증빙 서류가 없는 지출을 말한다.

부적정 지출은 연방정부의 오래되고 중대한 문제이다. 2003년 이후 누적된 부적정 지출만 약 2조 7,000억달러에 달한다. 부적정 지출을 추정하는 것은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줄이는 방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단계이다. 2023년도에 기관들은 16개 프로그램에 대해 10% 이상의 부적정 지출율을 보고했다. 그중 10개 프로그램은 2년 연속 10%를 넘었다. 또한 기관들은 2023년도에 9개 프로그램에 대해 필요한 추정치를 보고하지 않았다.

검토 결과

회계연도 2023년 기준 부적정 지출에 대한 추정치는 [그림 1]과 같다. 초과지출이 전체의 74%, 알 수 없는 지출이 19%, 지출금액 미달이 5%, 충분한 증빙 서류가 없는 지출이 2%를 차지하였다.

그림 1 | 부적정 지출에 대한 추정치(2023년)



자료: GAO analysis of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PaymentAccuracy.gov.data



참고자료

미국 감사원(GAO), <https://www.gao.gov/products/gao-24-107482>, 검색일자: 2024. 9. 2.



미국

2024. 8., 미국 감사원(GAO)

증거기반 정책 입안: 역량평가를 위한 기관의 추가지침 필요

Evidence-Based
Policymaking:
Agencies Need
Additional Guidance to
Assess Their Capacity



작성자 | 권선정 선임연구원



배경

2018년 증거 기반 정책 수립법(Evidence Act)에 따라 각 기관은 4년마다 평가를 수행한다. 이는 연방 정책 결정권자들이 프로그램이 목적에 맞게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잠재적인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결과와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한다.

GAO는 OMB와 평가 담당자 위원회(Evaluation Officer Council) 직원, 그리고 CFO법(Chief Financial Officers Act) 적용 기관인 24개 기관의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2022년에 처음으로 역량 평가를 발표했다.

검토 결과

GAO는 23개 기관의 평가를 분석하였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평가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 부족으로 기관들마다 평가방법과 결과가 달랐다.
- 둘째, 관리예산처(OMB)의 지침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평가에 대한 통일된 접근 방식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GAO는 OMB가 평가 담당자 위원회를 활용하여 기관 관계자들의 추가 지침 필요성을 식별하고, 평가 방법에 대해 문서화하고 공유할 것을 권고하였다.
- 셋째, GAO는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 간의 평가를 비교 가능하게 만들고, 공통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추가 지침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를 통해 기관들이 증거 구축 역량을 강화하고, 연방 정부 전반에서 더 나은 증거 기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GAO는 23개 기관의 평가 주요 결과



01 평가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 부족으로 평가방법과 결과의 차이 발생



02 관리예산처(OMB)의 지침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
평가에 대한 통일된 접근 방식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



03 기관 간의 평가를 비교 가능, 공통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추가 지침이 필요



참고자료

미국 감사원(GAO), <https://www.gao.gov/products/gao-24-106982>, 검색일자: 2024. 9. 2.



미국

2024, OMB

조달 혁신 및 연방 조달에서의 중소기업 참여

Acquisition Innovation
& Small Business
Participation in Federal
Procurement



→ 작성자 | 조한준 연구원



대통령 경영혁신과제(The President's Management Agenda, 이하 PMA)는 연방 조달 시스템을 강화하여 납세자에게 더 큰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형평성 증진, 미국 산업의 경쟁력 향상, 기후 위험 완화 등 미국의 최우선 과제를 해결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혁신적인 기법(techniques)과 기술(technologies)의 채택 및 확장은 이러한 모든 노력에 매우 중요하며, 이는 업무 인력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성과를 개선하며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기관의 임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이 보고서는 기관들이 조달 관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혁신적인 기법과 기술, 그리고 혁신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조달 혁신의 확장을 위한 로드맵을 제공한다.

혁신적인 기법과 기술

2016년부터 2023년 회계연도 말까지 기관들은 조달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데 도움을 주는 30개 이상의 혁신적인 전략과 기법을 알아냈고 실행하였다. 이러한 혁신적인 구매 전략은 입찰 및 제안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조달 혁신 주기율표(the Periodic Table of Acquisition Innovation, 이하 PTAI)의 혁신적인 기법 중 절반 이상은 중소기업에 이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기법들이 중소기업 참가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거나 정부 조달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관들은 조달 업무를 현대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계 학습, 자연어 처리,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와 같은 신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 기술들은 조달 과정 전반에서 인간의 개입을 줄여 업무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행정 비용과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도입되고 있다.

혁신적인 기법과 기술을 채택하기 위한 조치

1997년,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은 혁신을 연방 조달 시스템의 지침 원칙(guiding principle)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장려하기 위해 수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변화 이후 수년 동안 혁신을 추구하는 기관은 거의 없었다. 상부의 지원(top cover) 부족, 규정 준수 마인드, 조달 이의 제기(acquisition protest)에 대한 우려가 망설이는 이유였다. 이러한 망설임을 극복하고 위해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이하 OMB)과 최고획득책임자협의회(Chief Acquisition Officers Council, 이하 CAOC) 회원들은 2016년부터 조달 커뮤니티 내에서 혁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일상적인 조달 활동에 채택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시작했다.

가. 리더십

테스트 및 공유의 문화를 구축하는 것은 지도부가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지도부의 지원은 인력이 혁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산업체가 연방 조달에 보다 의미 있게 참여하여 임

무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지식관리

PTAI는 정부의 조달 혁신을 돕는 포털로, 성공적으로 테스트된 조달 방법의 사례를 제공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비즈니스 관행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추가 테스트와 채택을 촉진한다. PTAI의 조달 기법 페이지에는 15개 기관의 35가지 비즈니스 방법과 약 150개의 자료가 있다. 또한 조달 자동화 페이지에서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등 최신 기술을 사용한 프로젝트를 소개하여 조달 운영을 현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러한 정보는 기관들이 조달 혁신을 이루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다. 조달 혁신 대변자(Acquisition Innovation Advocates, 이하AIAs), 연구소 및 코치

AIAs는 새로운 조달 전략의 개발 및 채택을 지원해 주는 최고재무책임자법 기관(CFO Act Agencies)에서 임명된 담당자이다. AIAs는 모든 종류의 조달 개선을 지원하지만, 특히 비상품화 구매(non-commoditized buys)에 집중하고 있다. 2022년에는 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신기술 관련 담당자로 임명했다. 점점 더 많은 기관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조달 관행을 시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 기관 간의 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달 혁신 연구소(acquisition innovation labs)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설정했다: (i) 지도부의 지원, (ii) 새롭거나 잘 사용되지 않는 관행의 실험 및 적용, (iii) 정보 공유이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여러 연구소들은 연방 조달 생태계 전반에서 혁신적인 조달 관행의 채택과 적용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테스트와 공유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기관들은 인력 개발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 사용에 관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있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농무부(USDA), 상무부(DoC), 국방부(DoD), 국토안보부(DHS), 교육부(ED), 항공우주국(NASA) 등의 기관들은 DHS PIL 코칭 클리닉에 참석해 조달 혁신 코칭 교육을 받는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코치가 연방조달인증(FAC-C) Level II와 같은 조달 전문성과 함께 분석적·창의적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 협업, 적응력, 위험 감수 등 다양한 소프트 스킬을 갖추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한 미국 연방조달청(GSA)은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에 대한 멘토와 멘티 지원을 제공하며, 노동부(DoL)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한 전담 지원을 하고 있다.

라. 인력 개발

조달 인력을 교육하는 것은 혁신적인 관행의 채택에 매우 중요하다. 기관들은 인력이 전문가에게 배우고 조달에서의 유연성을 실험할 수 있도록 부트 캠프, 클리닉, 배지 프로그램, 경험학습, 지속적인 학습 학점 및 수료증과 같은 교육기회를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관들은 인력의 인식을 촉진하고 혁신적인 관행과 기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조달 혁신 행사들을 주최한다. 이러한 행사에는 로드쇼, 웨비나, 팟캐스트, 회의, 타운홀 미팅, 토너먼트 및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다.

마. 온라인 플랫폼

기관들은 혁신적인 조달 관행 및 관련 정보를 정부 전용 포털(내부 접근용)과 적절한 경우 대중(외부 접근용)에 게시하도록 권고 받는다. 현재 21개 CFO Act 기관은 조달 혁신을 위한 내부 전용 E-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최소 6개의 이노베이션 랩(innovation lab)에서는 외부 인식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중에게 공개된 포털을 유지하고 있다.

바. 측정(Measurement)

몇몇 기관들은 혁신적인 기법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DHS는 연례 경쟁 가치 모형(competing values framework) 평가를 통해 조직 내 계약 활동 전반의 문화적 변화를 측정하고 있고, DHS의 조달 혁신 랩(procurement innovation lab, 이하 PIL)은 조달에 대한 이의 제기 비율(protest rate)을 추적하고 있다. 현재 문화적으로 이의 제기에 대한 두려움이 혁신으로 얻는 보상보다 더 크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니어 리더(senior leader)가 인력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기관이 프로세스 초기 단계에서 법률 고문을 참여시키고 제안자(offeror)에게 강력한 디브리핑(debriefing)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DHS는 PIL 2022 연감(yearbook)에서 PIL 프로젝트의 혁신적인 조달 기법에 대해 2015회계연도 이후 받아들여진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어, 이러한 조치들이 효과를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의 길: 조달 혁신 가속화

보고서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연방 정부와의 비즈니스 개선을 원하는 조달 인력의 구성원들이 더 나은 방법을 시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가능성을 열어주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앞으로 연방 조달 정책실(the Office of Federal Procurement Policy)은 기관들과 협력하여 조달 인력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관행과 기술의 채택 및 확산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주요 행동 사항으로는 지식 관리에 대한 강조를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인력 내 소통을 이어가며, 적절한 조달 인력 개발 자원과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포함된다.

참고자료

OMB, "Acquisition Innovation & Small Business Participation in Federal Procurement," 2024,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4/05/SIGNED-Report-to-Congress-Acquisition-Innovation-Small-Business-Participation-in-Federal-Procurement.pdf?cb=1715634435>, 검색일자: 2024. 9. 24.



영국

2024. 7., 영국 감사원(NAO)

영국정부의 일반 보조금 제도

Government's general
grants schemes



→ 작성자 | 권선정 선임연구원

보조금의 정의

정부 보조금은 개인, 기업, 비영리 조직 또는 정부 기관에 자금을 이전하는 형태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지방 당국이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거나 화석연료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는 경우 사용될 수 있다. 보조금의 유형은 크게 일반보조금(General grants), 공식보조금(Formula grants), 기부보조금(Grant-in-aid)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보조금은 시장에서 단독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정책목표를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과학연구지원, 스포츠 시설 제공 등이 있다. 공식보조금은 인구규모와 같은 공식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주로 지방정부, 학교, 경찰 등에 제공된다. 기부보조금은 정부 내 한 기관에서 다른기관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2022년~2023년 주요 지출

2022~2023년도 회계연도에 중앙 정부의 보조금 지출(기부 보조금 제외)은 1,556억 파운드로, 이는 연간 정부 지출의 14%에 해당한다. 이 중 70%인 1,088억파운드는 공식 보조금에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30%인 468억파운드는 일반보조금에 사용되었다. 일반보조금이 지원한 분야는 에너지 요금 지원으로 에너지 비용 할인을 제공하고 사회복지 보조금을 통해 지방 정부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일반보조금 지출은 COVID-19 팬데믹 동안 크게 증가했는데, 2019~2020년 394억파운드에서 2020~2021년에는 1,556억파운드로 급증하였다. 이후 지출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높다.

결론

정부 보조금에 대한 마지막 보고는 2014년이였다. 그 결과 보조금의 중요도가 더 높았음에도 다른 자금조달 방법보다는 관심도가 낮았다. 2014년도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 진전을 이루었는지 살펴보면, 각 부서는 보조금 관리 능력을 개선했으나 부서별 보조금 집행능력에 차이가 있어 보조금이 일관되게 효율적인 가치를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조금을 제공하는 부서와 산하기관들은 제도과 보조금 지급 방식을 통합하여 보조금 체계를 단순화 시킬 수 있겠다. 이는 공통 시스템 체계의 도입에 대한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장애를 해결하여 수작업 프로세스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와 보조금 수혜자 모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매년 정부가 일반 보조금에 지출하는 수십억파운드가 최적의 비용 대비 가치를 제공하도록 도울 수 있다.



참고자료

영국 감사원(NAO), <https://www.nao.org.uk/reports/governments-general-grants-scheme/>, 검색일자: 2024. 9. 24.



아일랜드

2024. 6. 17, 아일랜드 공공지출개혁부

2023년 공공서비스 성과보고서 발간

Public Service
Performance Report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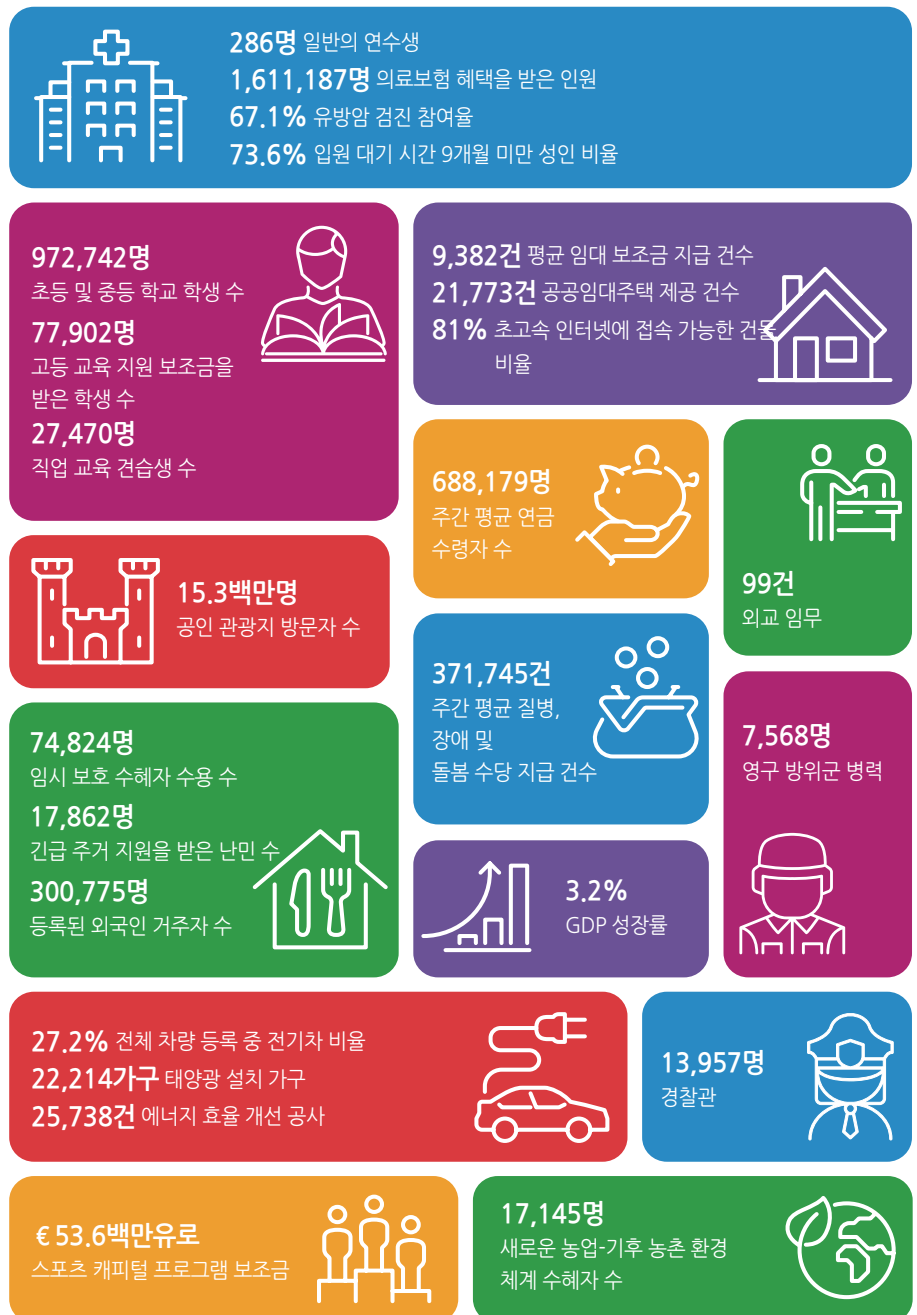


→ 작성자 | 이응준 연구원

배경

아일랜드 정부는 공공서비스 지출에 대한 성과를 검토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매년 공공서비스 성과보고서(Public Service Performance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주요 성과로는 3.2%의 GDP 성장률 달성, 약 2만건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약 7만건의 교육 보조금 제공, 약 160만명에게 의료보험 혜택 제공 등이 있다.

그림 1 | 2023년 아일랜드 정부 주요 성과



자료: 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2024), p.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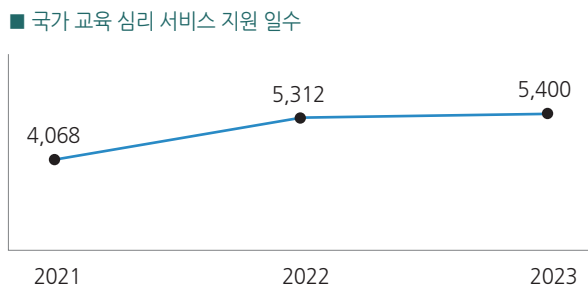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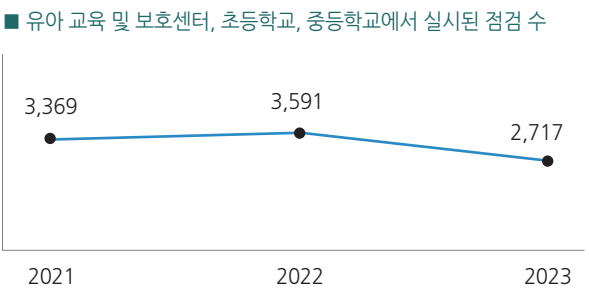
또한 동 보고서는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예산 구성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으며, 성과지표와 달성도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로 결과지표를 중심으로 정책 성과 측면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한국의 성과보고서와 다르게 아일랜드 정부의 성과보고서는 성과적 측면과 평등적 측면을 구분하고 있으며, 성과 측정 과정에서 산출지표와 결과지표를 모두 활용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림 2 공공서비스 성과보고서 예시 1

성과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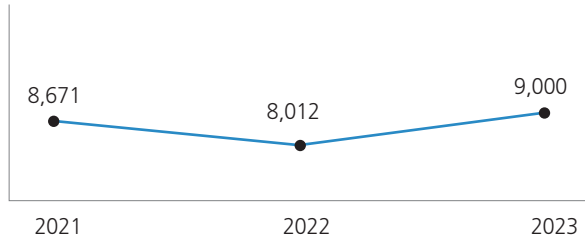
공공서비스 활동(산출물) 2023		목표 실적	달성률
초등 및 중등학교 학생 수	935,839		104%
	972,742		
초등 및 중등학교 교사 수	73,816		104%
	76,932		
특수 보조원 수	20,368		99%
	20,353		
스쿨버스 이용 학생 수	127,669		128%
	163,088		
100만유로 이상의 초등학교 건설 프로젝트 완료 수	90-100		184%
	184		
100만유로 이상의 중등학교 건설 프로젝트 완료 수	20-40		140%
	56		

공공 정책 영향(결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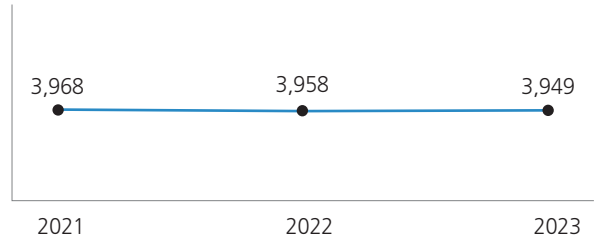


[그림 2]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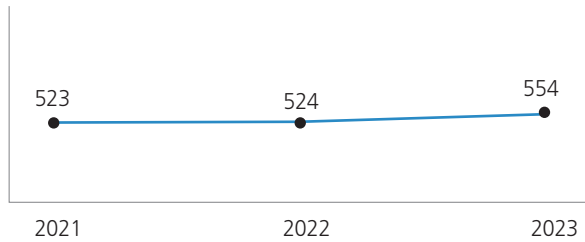
■ 심리학자와 상담을 받은 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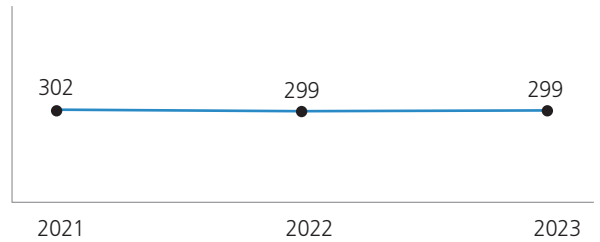
■ 초등 및 중등학교 수



■ 다중교/비중교 초등 및 중등학교 수



■ 아일랜드어 교육을 실시하는 초등 및 중등학교 수



자료: 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2024), p. 53.

그림 3 | 공공서비스 성과보고서 예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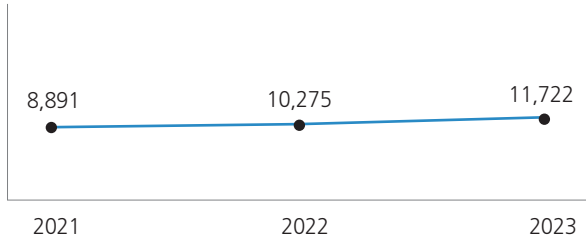
평등 지표

공공서비스 활동(산출물) 2023	목표 실적	달성률
특수학급 수	2,915 2,919	100.1%
신규 특수학교 수	30 42	140%
일반 학교 내 신규 특수학급 수	140 285	204%
교육 평등 기회 제공 프로그램 등록 초등학생 수	143,725 153,607	107%
교육 평등 기회 제공 프로그램 등록 중등학생 수	101,537 107,232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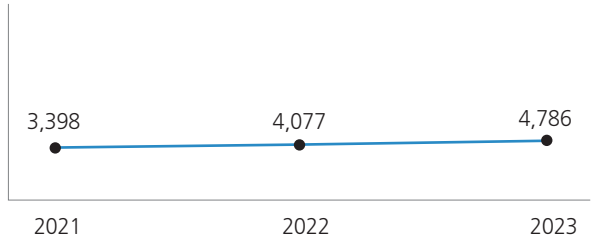
[그림 3]의 계속

공공 정책 영향(결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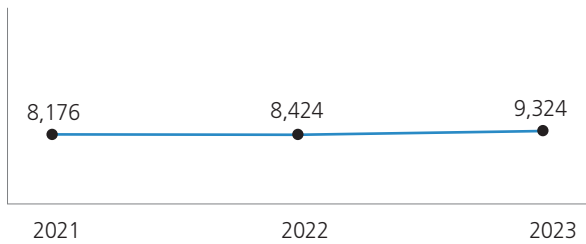
■ 초등학교 특수학급 등록 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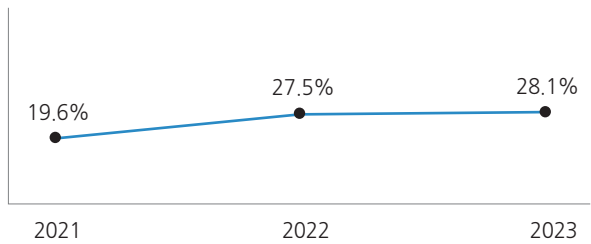
■ 중등학교 특수학급 등록 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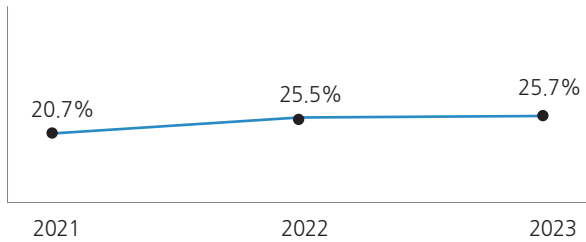
■ 특수학교 등록 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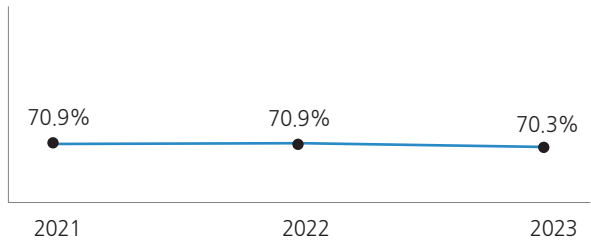
■ 교육 평등 기회 제공 프로그램 등록 초등학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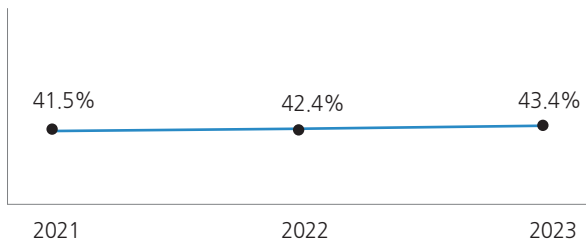
■ 교육 평등 기회 제공 프로그램 등록 중등학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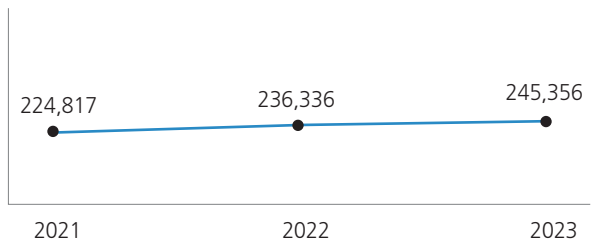
■ 6학년 남학생 과학, 기술, 공학 과목 수강 비율



■ 6학년 여학생 과학, 기술, 공학 과목 수강 비율



■ 다종교/비종교 초등 및 중등학교 수



자료: 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2024), p. 54.



[그림 2], [그림 3]에 아일랜드 성과보고서 중 교육부 사례 일부를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일랜드 교육부는 정책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산출지표와 결과지표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산출지표의 예로는 초등 및 중등학교 교사 수 지표를 활용하였으며, 2023년 달성률은 104%였다. 공공 정책의 영향을 나타내는 결과지표로는 국가 교육 심리 서비스 지원 일수가 활용되었으며, 2023년에 총 5,400일의 지원이 제공되었다.

또한 아일랜드 교육부는 성과관리 과정에서 평등적 측면을 반영하기 위해 평등 관련 지표를 추가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평등 관련 산출지표의 예로는 특수학급 수가 있으며, 2023년에는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공공 정책의 영향을 나타내는 결과지표로는 초등학교 특수학급 등록 학생 수가 사용되었으며, 2022년 1만 275명에서 약 10%가 증가하여 2023년에는 1만 1,722명이 특수학급에 등록하였다.

참고자료

아일랜드 Department of Public Finance, *Public Service Performance Report 2023, 2024*.



아일랜드

2024. 6. 24., 아일랜드 재무부

인구 고령화와 공공 재정

Population Ageing and
the Public Finances in
Ire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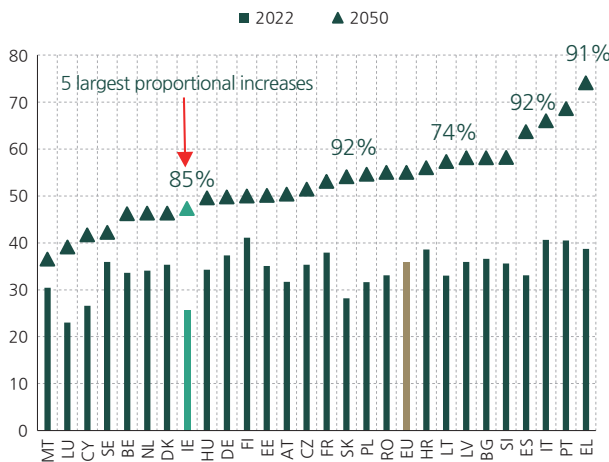
→ 작성자 | 이응준 연구원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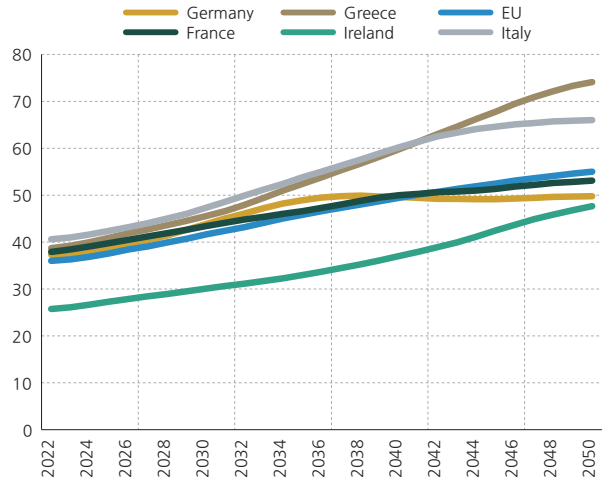
현재 아일랜드는 중위 연령이 39세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서 두 번째로 젊은 국가에 속하지만, 이러한 인구 구조는 향후 수십 년 동안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일랜드 정부는 근로 연령 인구(19~64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Old Age Dependency Ratio, OADR)가 2050년까지 22%p 증가하여 약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EU 회원국 중 가장 큰 증가 폭에 해당한다.

그림 1 EU 주요국 노년부양비

A: 노년부양비 2022~2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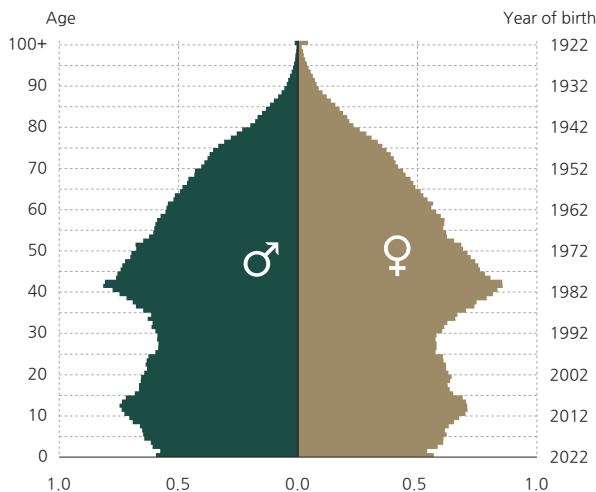
B: 노년부양비 추세 비교



자료: Department of Finance(2024a), p. 21, <Figure13>.

그림 2 아일랜드 인구 피라미드 변화

A: 2022년 아일랜드 인구 피라미드



B: 2050년 아일랜드 인구 피라미드



자료: Department of Finance(2024a), p. 21, <Figure12>.

노년부양비가 급증하는 주요 원인은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를 꼽을 수 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연금, 의료, 장기 요양 등과 같은 공공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향후 공공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일랜드의 고령화 관련 지출은 2022년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 대비 22%에서 2050년까지 약 6%p 상승해 2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이 추가 지출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매년 16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 연도별 고령화 관련 지출 전망

	2022	2030	2035	2040	2045	2050	△2022~2050
Pension	7.0	7.6	8.6	9.3	10.2	11.0	+4.0
Health care	7.6	8.0	8.3	8.7	9.0	9.3	+1.7
Long-term care	2.3	2.5	2.8	3.0	3.3	3.6	+1.3
Education	5.2	4.5	4.2	4.0	4.0	4.2	-1.0
Total age-related	22.0	22.7	23.9	24.9	26.5	28.0	+6.0

자료: Department of Finance(2024b), p. 2, <Table1>.

이와 같은 변화는 미래 세대에게 큰 재정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예상되는 비용 일부를 상쇄하기 위해 아일랜드 미래 기금(Future Ireland Fund)을 조성하고 있지만, 고령화와 관련된 재정 압박을 완전히 해결하려면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연금, 의료, 장기 요양 시스템의 개혁과 인구 이외의 정책에 대한 지출 절제, 세금 인상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문제의 규모를 감안할 때 다양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아일랜드보다 낮고 2050년의 노년부양비는 78.6%로 아일랜드보다 높게 예측되고 있다. 한국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국민연금 개혁, 의무경직성 지출 검토, 재정준칙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 충돌로 인해 조속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대한 충분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어 세대 간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크기에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개혁이 빠르게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아일랜드 Department of Finance, *Population Ageing and the Public Finances in Ireland - Changing Demographics and Populatin Ageing*, 2024a.
 ———, *Population Ageing and the Public Finances in Ireland - Fiscal Costs*, 2024b.



호주

2024. 2. 12., 호주 감사원

2022~2023년 호주 정부 기관의 성과보고서 감사

Audits of the
Annual Performance
Statements of
Australian Government
Entities 2022-23



작성자 | 이응준 연구원



호주 정부에서 발간하는 재무보고서는 지출 및 재정 상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성과측정 및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성과정보는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평가하며, 공공 자원의 사용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프로그램 개선 및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호주 정부는 의미 있는 성과정보 제공과 성과관리 및 책임성 확보를 목표로 2013년부터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PGPA Act)를 시행하여 성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22~23년 성과보고서 감사는 각 부처의 연례 성과보고서가 해당 기간 동안의 성과를 투명하게 보고하고, PGPA Act의 규정과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호주 감사원은 부처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고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정보를 보고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그림 1 | 2021~2024 성과보고서 감사 대상 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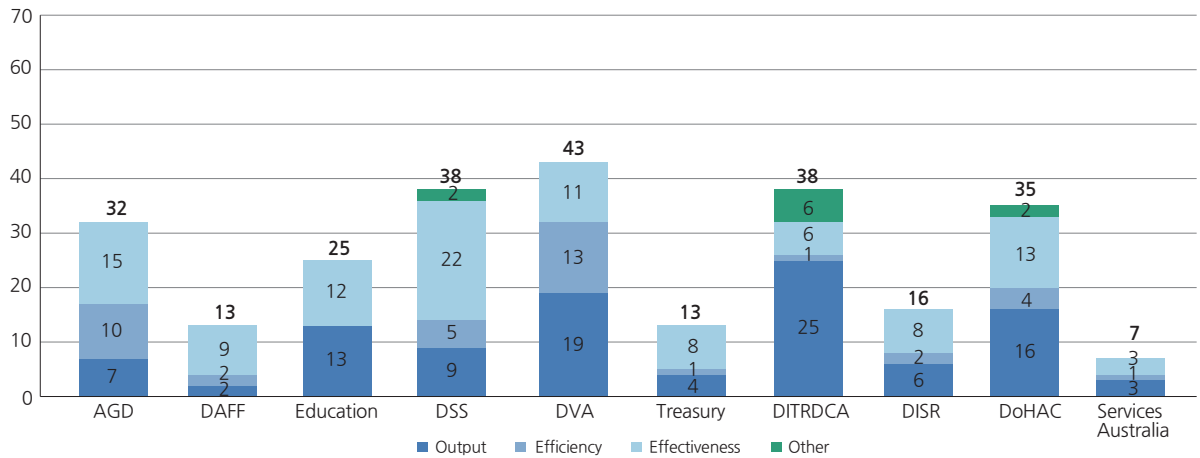
2021~22	2022~23	202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torney-General's Department •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 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Environment • Department of the Treasury 	<p>The six entities audited in 2021-22 and the following four entiti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 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and Resources • Department of Infrastructure, Transport, Regional Development, Communications and the Arts • Services Australia 	<p>The 10 entities audited in 2022-23 and the following four entiti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ustralian Taxation Office •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Agency • Department of Home Affairs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자료: 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2024), p. 19, <Table 1.1>.

이번 감사는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2021~2022년 감사 대상에서 4개 부처가 추가되어 총 10개 부처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감사 결과, 2021~2022년에 비해 개선된 점이 일부 확인되었다. 특히 중대한 정보 누락 또는 신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보고서의 비율이 전년 50%에서 40%로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결론을 유발한 부정확한 성과지표의 비율도 7%에서 4%로 감소하였다.

성과보고서와 관련된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4개 부처가 전체 성과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5개 부처에서는 성과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충분하지 않다는

그림 2 | 감사 대상 부처의 성과지표 구성



자료: 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2024), p. 52. <Figure 2.3>.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5개 부처는 보고된 성과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2개 부처는 성과정보가 충분히 유용하지 않다고 평가되었고, 3개 부처에서는 기록 보관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는 각 부처는 주요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평균 2.7개의 성과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부처의 성과지표는 산출지표(41%)와 결과지표(40%)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부처의 자원 활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효율성 지표가 여러 부처에서 충분히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일부 기관은 성과지표와 관련된 데이터의 신뢰성 및 검증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제3자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보완 사항으로 강조되었다.

한국의 경우 성과지표를 선정할 때 사업의 궁극적인 효과를 포괄적·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결과지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번 성과보고서 감사에서 알 수 있듯, 아일랜드의 경우 결과지표만을 이용해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지표와 효율성지표 등 여러 지표를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차이점으로 나타난다. 또한 성과측정 과정에서 활용되는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 절차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은 국내에서도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참고자료

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Audits of the Annual Performance Statements of Australian Government Entities 2022-23*, 2024.



World Bank

World Bank(2024)

정부 조달에서의 국내 법률과 보호주의

Domestic Laws and
Protectionism in
Government
Procurement



작성자 | 조한준 연구원



정부는 종종 공공 조달을 사용하여 중소형 지역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거나 환경 친화적인 관행을 촉진하는 등 사회경제적 목표를 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경제적 효율성에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조달 입찰에서 외국 공급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보호주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외국 공급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의 시행은 무역에 상당한 장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부가 상품과 서비스를 조달하는 가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정부 조달에서의 보호주의와 그에 따른 국경 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데이터와 기술적 (descriptive) 증거

본 보고서는 140개국을 대상으로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 협정(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이하 WTO GPA) 및 무역특혜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s)과 같은 국제 협정의 비준 및 국가 정책에서 비롯된 조달법을 검토한다. 이러한 법률의 내용을 검토하여 주요 법률을 세 가지 유형을 분류한다. 동등한 대우 조항의 부재(lack of equal treatment provision), 국내 입찰자에 대한 우대 조치(예: 특혜 마진), 그리고 국내 소싱(domestic sourcing)(예: '국내 생산' 조항)이다.

데이터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대다수 국가가 조달 규정에서 보호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1개국 중 124개국이 우대 조항을 두고 있으며, 오직 17개국에서만 우대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약 36%의 국가들은 정부 조달에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일반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은 반면, 60%의 국가들은 국내 소싱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WTO GPA와 EU와 같은 국제 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보호주의 지수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간 소득 국가들에 비해 고소득 국가들에게도 해당되며, 세계 거버넌스 지수(World Governance Indicator)로 측정된 바와 같이 제도가 더 나은 국가들에게도 해당된다.

정부 조달에 대한 본국법(National Law)의 보호주의와 무역 개방도 간의 관계에 대한 결과

본 보고서는 총 지출에서 수입(import)이 차지하는 비율과 각국의 조달법에서 나타나는 보호주의 지표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때 WTO GPA 및 EU 참여나 경제 발전과 제도적 품질과 같은 변수는 통제한다.

결과는 정부 조달에 대한 보호주의 법률과 무역 개방도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관계의 크기는 상당하다. 또한 정부 조달에서 보호주의 법률이 있는 국가가 평균적인 무역 개방성을 가진 국가에 비해 총 지출에서의 수입 비율이 9%p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결과는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더 강하게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산업에 적용된다. 또한 부가가치기준 무역(Trade In Value Added, TiVA)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부 구매와 민간 구매를 별도로 분석할 때, 보



호주의적 조달법이 더 많은 국가일수록 공공 시장과 민간 시장 모두에서 수입이 적다는 것을 확인했다.

본 보고서는 추가로 수출자와 수입자로 구성된 국가-쌍(country-pairs)을 관찰 단위로 하여 양자간 무역에서 무역 개방성과 정부 조달 보호주의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특히 보호주의 조치로 정부, 기업, 가계가 외국 공급자보다 국내 공급자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많이 구매하게 되는지 살펴본다.

결과는 보호주의 조달법이 있는 국가에서 국내 무역과 국제 무역 간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국내 입찰자에 대한 우대 조항의 존재로 설명된다. 국내 입찰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에서는 추정치에 따르면 국내 구매가 국제 구매보다 평균적으로 약 16배 더 크며, 특혜 조항이 없는 수입국의 경우에는 국내 구매가 국제 구매보다 7배 더 크다.

산업 차원에서의 결과는 정부 조달에서 보호주의와 무역 간의 부정적 관계가 산업별로 상이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상관관계는 서비스 부문보다 1차 산업과 제조업 부문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TiVA의 국제 산업연관표(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s) 데이터를 통해, 정부 조달에서 보호주의와 무역 간의 부정적 연관성이 공공 및 민간 구매 모두에 걸쳐 질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남을 발견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조달에서의 보호주의가 단순히 조달 입찰 과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특히 조달 계약을 체결한 국내 기업)의 소싱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입증한다.



참고자료

World Bank, *Domestic Laws and Protectionism in Government Procurement*, 2024, <https://documents.worldbank.org/pt/publication/documents-reports/documentdetail/099352010012430613/idu17835873d19f1e1402b184ca12dcc9be7c3a5>, 검색일자: 2024. 10. 14.



한국

2024. 6. 17, 조달청

조달청,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파로 역동적 조달생태계 구축



→ 작성자 | 최한영 연구원

조달청은 6월 17일 전수조사를 통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전수조사를 통한 킬러규제 혁신방안은 연간 209조원 규모의 규제를 본격적으로 혁파하며 장기 미해결 중인 킬러규제 17건과 현장규제 85건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섯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징벌 중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부정당업자 제재 면책 정비, 감경 범위 확대, 부과기준을 계약금액에서 납품금액으로 개선, 4단계 절차에서 3단계로 간소화 등이 있다.

둘째, 조달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인지세 부과대상을 취지에 맞는 조달계약으로 축소 및 신인도 대폭 정비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 업무 처리 방식을 효율화·간소화한다. 지속적인 현장 건의를 반영하고 다수 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횟수를 1회로 축소한다.

넷째, 네거티브 방식의 전면 개편을 실시하였다. 자체기준표를 폐지하고 직접생산 위반 판정기준도 축소하였다.

다섯째, 신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개편을 추진한다. 수의계약 한도를 확대하여 청년·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독려한다.

또한 민간 시장의 흐름에 발맞춰 공공조달시장에 ‘임차, 구독’ 등의 계약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하여 고가 장비, 첨단 융복합제품의 공공판로가 확대될 전망이다.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 01 징벌 중심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
- 02 조달거래 과정 불합리한 비용 부담 경감
- 03 업무 처리 방식 효율화·간소화
- 04 네거티브 방식 전면 개편
- 05 신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개편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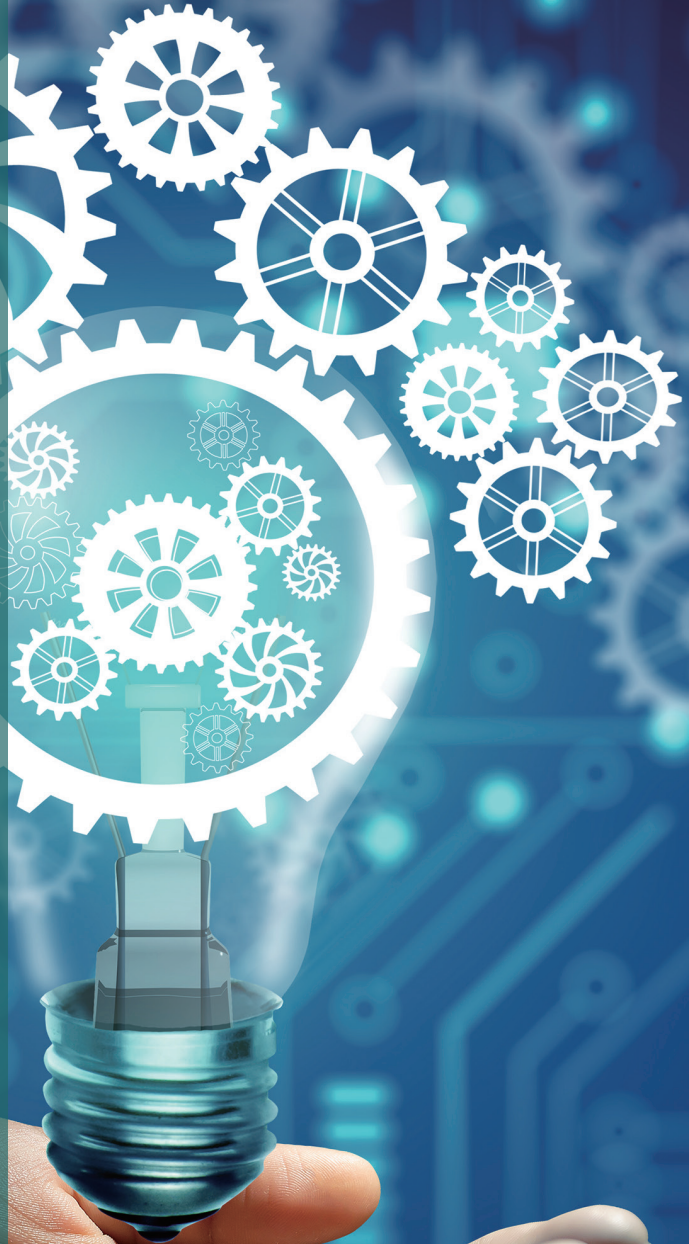
조달청 보도자료, 「조달청,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파로 역동적 조달생태계 구축」, 2024. 6. 17., <https://www.pps.go.kr/kor/bbs/view.do?bbsSn=2406170010&key=00634&pageIndex=18&orderBy=bbsOrder+desc&sc=&sw=&maxList=10>, 검색일자: 2024. 10. 3.



한국

2024. 6. 17, 조달청

혁신제품 제도
전면 개편 기업
‘기술혁신’.
‘부담완화’.
‘성장지원’ 돕는다



→ 작성자 | 최한영 연구원

조달청은 전방위적인 혁신제품 제도 개편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 촉진 및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해당 규정 개정은 「범부처 협업을 통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지원 방안」과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지원하며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각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 확대와 현장수요 기반의 기술우수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한다. 기술우수제품을 혁신제품 지정 평가 시 우대하고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 혁신제품 요건을 추가한다. 주민의 복지나 지역 공공문제 해결과 직접 연관된 연구개발(R&D) 결과물을 혁신제품 심사 시 우대한다.

둘째, 혁신제품 시범구매의 전략적 운영 강화를 통하여 판로지원 효과를 제고한다. 전략적 시범구매 매칭으로 혁신제품 체감성고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범구매 우선선위를 선정한다. 국민생활에 밀접하거나 긴급 수요 관련 혁신제품은 시범구매 절차를 단축한다. 해외수출 제품은 매칭 횟수 제한 예외를 두어 해외 시범구매를 우대할 예정이다. 단가계약 근거도 마련하여 혁신제품 구매 확산 및 수요기관의 구매편의를 지원한다.

셋째, 킬러규제 효과를 통하여 혁신제품 지정, 공공판로 확보, 기업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복잡한 규격 추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성평가 통화 제품의 심사를 면제하여 중복 평가를 방지한다.

범부처 협업을 통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지원 방안

- 01 각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 확대와 현장수요 기반 기술우수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연계
- 02 혁신제품 시범구매 전략적 운영 강화 통해 판로지원 효과 제고
- 03 혁신제품 지정, 공공판로 확보, 기업 부담 완화를 목표



 참고자료

조달청 보도자료, 「혁신제품 제도 전면 개편 기업 ‘기술혁신’·‘부담완화’·‘성장지원’ 돕는다.」, 2024. 6. 24., <https://www.pps.go.kr/kor/bbs/view.do?bbsSn=2406240010&key=00634&pageIndex=17&orderBy=bbsOrder+desc&sc=&sw=&maxList=10>, 검색일자: 2024. 10. 3.

전략적 계획의 사용자 수용성

User acceptance of
strategic planning:
Evidence from
Northern European
municipalities

2024. 9., Public Administration Review(PAR)

 작성자 | 백종선 선임연구원



연구배경

공공 행정의 핵심이자 성과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전략적 계획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전략적 계획은 공공부문의 주요 관리방식으로서 성과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전략적 계획을 필수적인 행정의 도구로 채택하고 있으며, 그 효과성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관련 전문가 및 연구에 따르면 전략적 계획은 단순한 기술적 절차가 아니며, 전략적 계획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참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전략적 계획에 대한 사용자 수용 이론을 적용하여 전략적 계획의 공식성, 참여, 관리자 수용, 전략적 계획에 대한 헌신 간의 관계 등을 살펴봄으로써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요인들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플랑드르(벨기에) 지역 및 핀란드, 노르웨이의 지자체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링(PLS-PM)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내용

분석 결과는 크게 전략적 계획의 공식성·참여·사용 용이성과 유용성 등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략적 계획의 공식성은 사용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유용성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식적인 계획은 목표 설정과 방향 제시에 도움이 되지만, 실제 실행의 용이성을 증가시키지는 않으며, 관리자의 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전략적 계획에의 참여와 관련하여 내부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유용성과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지만, 사용 용이성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외부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 모두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관리자의 전략적 계획에 대한 몰입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적 계획의 사용 용이성과 유용성 측면에서 사용 용이성은 전략적 계획에 대한





몰입과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유용성은 몰입과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전략적 계획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관리자의 몰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략적 계획이 지나치게 형식화되면 오히려 사용자의 수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으며, 외부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계획의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을 높여 계획에 대한 몰입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전략적 계획의 성공 여부는 개별 국가의 제도적 환경·역사적 배경 등 다양한 맥락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전략적 계획의 활용에 있어 분석적 사고와 체계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동시에 지나치게 형식적인 접근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각 조직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공식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참고자료

George, Bert, Dag Ingvar Jacobsen, Jan-Erik Johanson, Age Johnsen, and Elias Pekkola, "User acceptance of strategic planning: Evidence from Northern European municipaliti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024, pp. 1~16, <https://doi.org/10.1111/puar.138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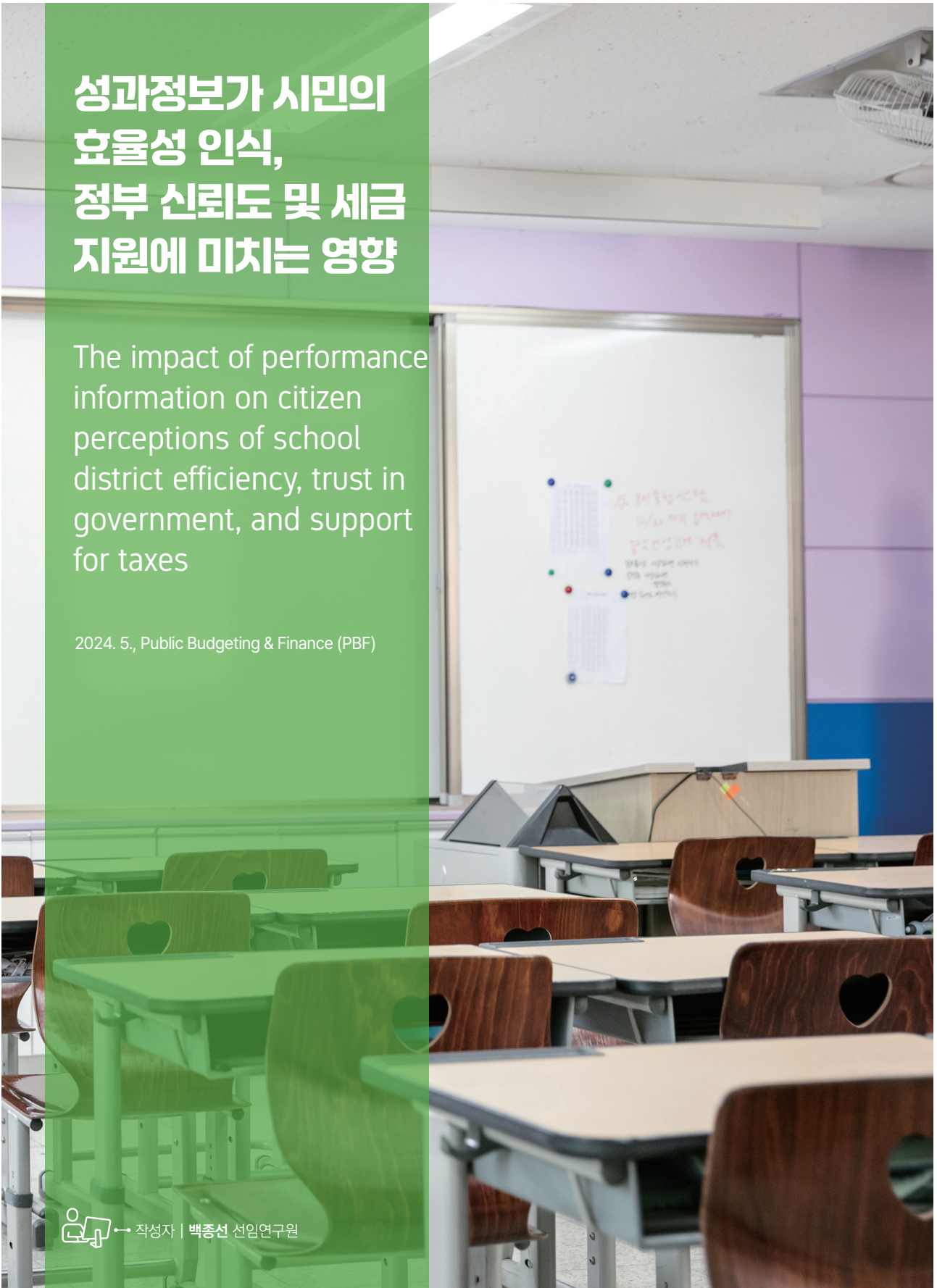
성과정보가 시민의 효율성 인식, 정부 신뢰도 및 세금 지원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performance information on citizen perceptions of school district efficiency, trust in government, and support for taxes

2024. 5., Public Budgeting & Finance (PBF)



→ 작성자 | 백종선 선임연구원



연구배경

정부의 효율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성과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 신 공공관리론(NPM)을 비롯한 정부개혁은 공공 부문에서 시장원리와 민간부문의 경영기법 활용을 강조하는 가운데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성과정보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성과정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성과정보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연구는 학교의 성과정보, 구체적으로 시험 점수에 대한 정보 제공이 효율성 인식, 업무에 대한 신뢰, 지출 확대를 위한 세금 인상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내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교 성과정보의 공개는 시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과는 학교의 성과와 시민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높은 성과의 학교는 성과정보의 제공을 통해 효율성에 대한 인식이 7.8% 증가하며,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과 세금 인상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각각 5.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낮은 성과의 학교는 성과정보를 제공해도 효율성 인식, 신뢰도, 세금 지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정보가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성과정보는 사전 지식이 없는 시민에게 새로운 정보의 제공, 일부 완전하지 않은 정보를 가진 시민의 기존 지식 보완, 이미 완전한 정보를 보유한 시민에게 있어 기존 지식의 확인, 부정적이고 부정확한 인식을 보유한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통한 교정 등의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연구의 시사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요건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성과정보의 공개가 정책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성과정보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정책성과의 향상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본 연구가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학교 정보 외에 다른 정부 서비스에 대해서도 본 연구결과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참고자료

Eric J. Brunner, Yusun Kim, Mark D. Robbins, Bill Simonsen, "The impact of performance information on citizen perceptions of school district efficiency, trust in government, and support for taxes," *Public Budgeting & Finance*, 44(2), 2024, pp. 6~44. <https://doi.org/10.1111/pbaf.12362>

성과관리 활동 품질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2024. 4., 한국행정학보



→ 작성자 | 백종선 선임연구원



연구배경

신공공관리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성과관리는 정부 조직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성과관리 제도의 도입 자체가 성과 제고로 이어지지 않으며, 목표 설정, 성과 측정, 성과 정보 활용 등 개별 활동의 품질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외 관련 연구에 따르면 성과관리 활동의 품질에 대한 격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상황으로, 이러한 배경하에서 성과관리 활동 품질(PMAQ)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특히 외부 정치 환경과 관리적 요인은 PMAQ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 실증분석을 통해 성과관리 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이론적·관리적 시사점 도출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내용

성과관리 활동 품질(PMAQ)은 ‘목표설정, 성과측정, 성과정보 활용 등 성과관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제 활동이 우수한 정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 실제 조직성과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중요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성과관리 활동 품질(PMAQ)에 있어 각 요인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부 정치 환경의 영향 측면에서 대통령, 국회 등 외부 정치 세력의 영향력이 클수록, 즉 정치적 요구와 간섭이 많을수록 성과관리 활동 품질(PMAQ)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부의 정치적 간섭을 줄이고,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구조적 보호’ 요인은 성과관리 활동 품질(PMAQ)을 향상시키며, 외부 정치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성과관리 전문성 측면에서 성과관리 전문가를 확보하고, 자체평가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성과관리 활동 품질(PMAQ)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내부 및 외부의 기억 역량이 높을수록 성과관리 활동 품질(PMAQ)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조직 학습을 통해 과거의 경험을 활용하고 조직원의 이탈을 방지하여 기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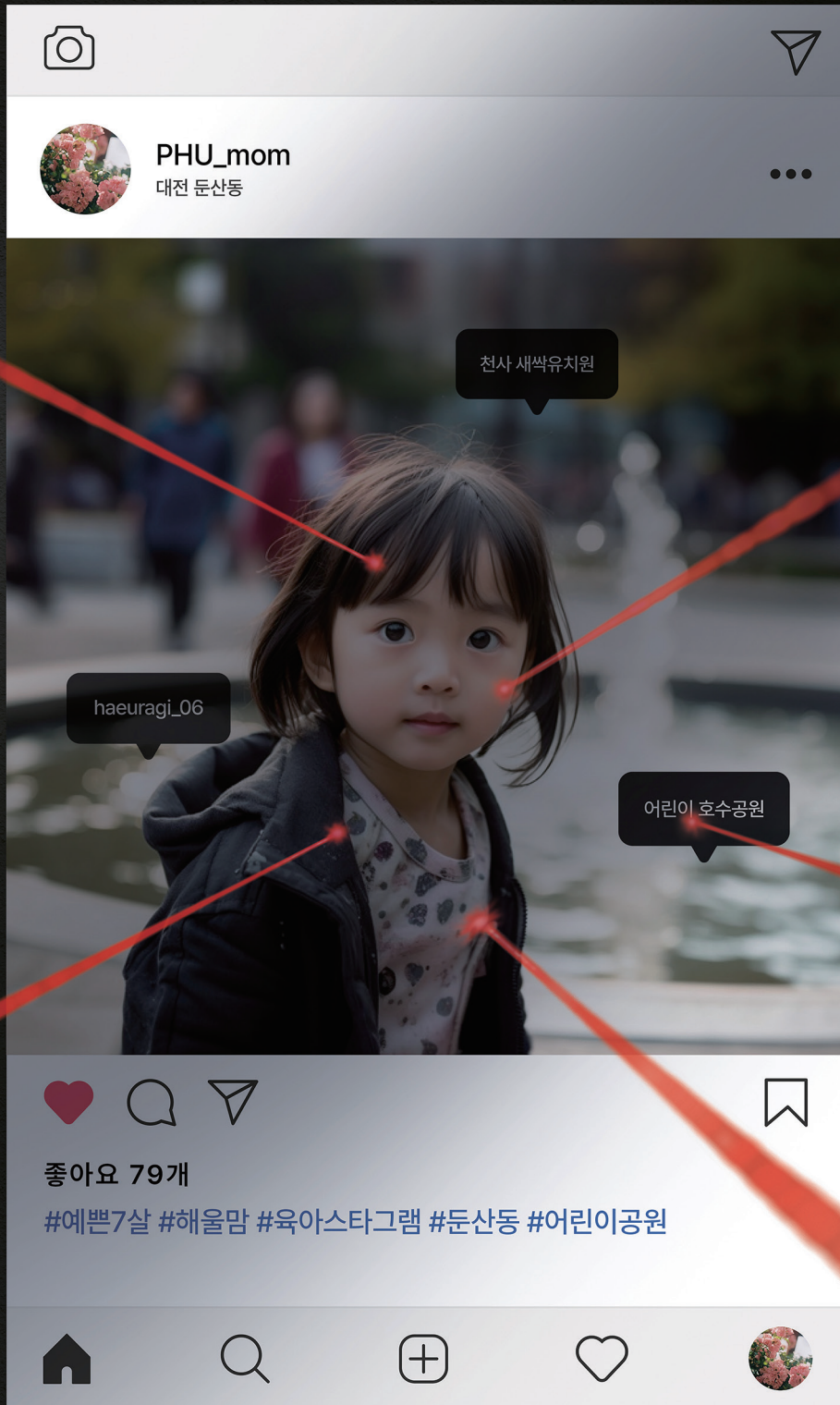
시사점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는데, 성과관리 활동 품질(PMAQ)의 향상을 위해 외부 정치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 외에 성과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도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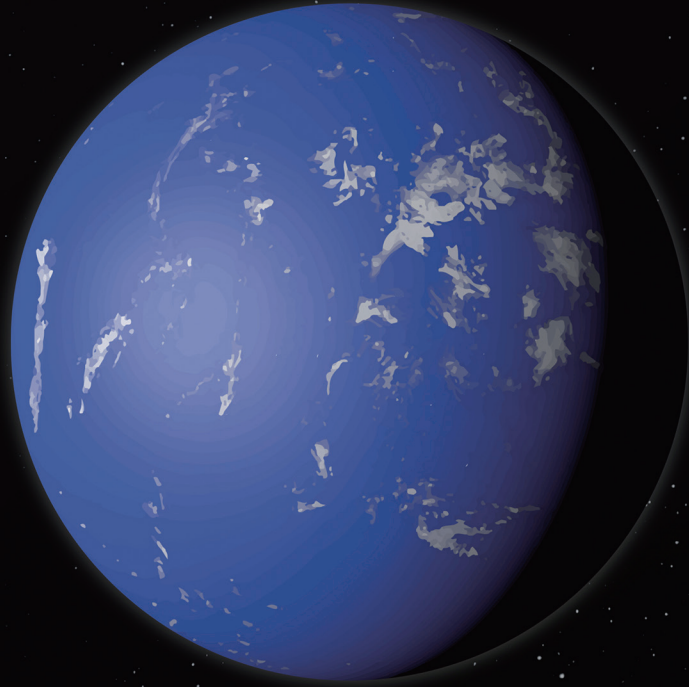
구자균·이정옥, 「성과관리 활동 품질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8(1), 2024, pp. 65~95.



무심코 올린 아이 사진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귀여워서 혹은 추억을 나누고 싶어서 SNS에 게시하는 내 아이의 사진 누군가는 아이 사진 한 장에 범죄를 계획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위험한 곳에 아이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2XXX년



지금 보이는건 **지구**입니다.

지구온난화 가속으로 인해 해수면 상승 속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kobaco

공익광고협의회



재정성과평가 동향과 이슈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代) www.kipf.re.kr

